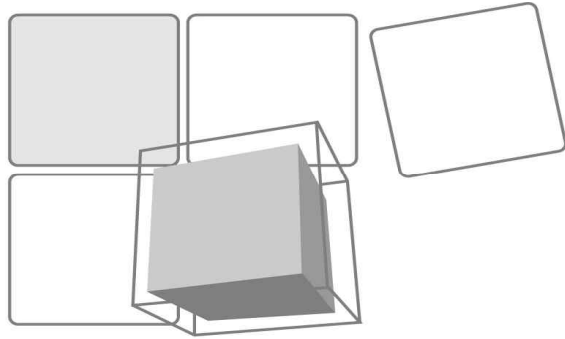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 ~ 2026)

20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

2022. 2.



20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요 약 본

1

시행계획 개요

□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3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2~'26)' 수립

○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 (법 제6조)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 / (법 제7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2~'26) 개요 】

- ❖ 비 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실현
- ❖ 목 표 : 해양사고 30% 저감,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 ❖ 정책과제 : 5대 추진전략, 21개 이행과제
 - ①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② 해사 신산업 선도, ③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④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⑤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2

최근 해양사고 현황 및 정책여건

□ (사고) 최근 5년('17~'21, 잠정)간 14,042건의 사고로 590명 사망·실종*

* 어선 9,407건(67%), 일반선박 4,635건(33%) / 어선 455명(77%), 일반선박 135명(23%)

○ 사망·실종의 93%*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에 기인

* 안전사고(318명, 54%), 전복·침몰(147명, 25%), 충돌(81명, 14%)

주요요인: (안전) 해상추락·신체가격, (전복·침몰) 기상악화·과다적재, (충돌) 어선·화물선 간

□ (여건) 낚시·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이용 지속증가* 및 연안수역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해양공간 이용 및 해상교통 밀집도 증가**

* (낚시어선 이용) 448만명('18)→503만명('20) / (레저선박 등록) 22,131척('18) → 25,648척('20)

** (해상풍력) '30년까지 신규설치 12GW 목표(산업부, '21) / (해상교량) 32개('00)→113개('2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등에 대응한 해양수산분야 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및 탈탄소*·디지털화 가속에 따른 신산업 선도 필요

* 선박 기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50년까지 '08년 대비 50% 감축) 설정('18)

3

기본 방향

비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제3차
기본계획
목표해양사고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20년) 126명 → (‘26년) 88명‘22년
목표해양사고 2,600건 이내
(전년 대비 5%↓)인명피해(사망·실종) 114명 이내
(전년 대비 5%↓)추진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4

5대 전략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략별 ‘22년 주요 추진과제)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도정비) 「해사안전법」 분법(3월~), 어선 보험료 체계개선*(「어선 재해 보상보험료율」 고시개정, 12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이행기반 마련

* 사고다발 어선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보험료 산정 시 ‘사고건수’ 반영 추진

** 하위법령(응시자격·시험과목·행정처분 등) 마련, 교육과정·교재 개발

-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미신고 위험물 집중관리(연중), 바다내비 협업체계 확대**(6월),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4월~)

* (점검) 항만건설·관공선 등 분야별 이행사항, (교육) 중대재해 교육과정 개설(3월), 설명회(반기)

** (해군) 통합선박정보관리체계 실시간 연계, (KOMSA) 여객선 상황센터, 부유물 감감사고 현황 등

- (안전복지) 어선안전설비 보급* 지원,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지원(11척, 2억원), 노후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40척, 17억원)

* 무인기관실 소화시스템 무상보급(60척), 법정 어선안전장비 보급지원(9억원), 노후 기관 대체지원(46억원),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보급지원(700척, 20억원) 등

전략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친환경선박) 新기술 시험·검사기준 마련**(4.5억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22년, 68억원), **공공·민간선박 전환지원****(325억원)
 - * 핵심기술개발·시험평가·실증·보급·국내외 표준화 등(’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 ** (공공)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 지원(30척, 60억원), 기술자문 지원
(민간)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 지원(내항: 5척, 60억원 / 외항: 16척, 205억원)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시스템·기관자동화기술 등) 개발, **성능 실증센터 구축**(울산, 6월), **국내규정 마련***, **국제협약 개정**** 선제 대응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안 마련(상반기) → 국회제출(하반기)
 - ** 선원의 정의, 선원이 선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작업의 범위 등 11개 사항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 19개 규정 제·개정 필요
- **(첨단산업)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시장 점유**(25%, ’21년)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10월),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 선사 등 대상으로 최신 국제동향 제공, 국내 제조사의 해외 진출 기반마련 지원 등
 - ** PPR(4월) 및 MEPC(6월) 개최 시 아국 기술기준 의제 제출 및 논의 대응

전략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역관리) 「교통망법*** 제정 추진, 연안해역(5개) **해상교통환경 평가**,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강화****, **해상풍력단지 주변수역 관리체계 마련**
 - *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안전성 평가, 해상교통로 지정 및 위원회 설치 등
 - ** 전주기 안전진단, 진단대상 확대, 대행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등
- **(정보제공) 바다내비 서비스 개선*** 및 **단말기 보급 지원**(공공 148척, 민간 1,445척), **VTS 시설 첨단화****, **해상기상부이 설치 확대**(6→11대)
 - * 최적항로서비스 확대(앱→단말기), 선박(어선선단 등) 간 그룹통화, 통신품질 개선 등
 - ** 서해권 광역 VTS 구축, 고성능 레이더 설치, 음주운항 자동탐지기술 개발 등
- **(스마트인프라) 해양디지털항로 실험역 검증체계 구축**(한·EU MOU 체결, 9월), **차세대 해양디지털통신*(VDES) 기초연구**(~4월), **해양 PNT 고도화****
 - * AIS(자동식별장치), ASM(해상메시지서비스), VDE(VHF데이터통신)로 구성
 - **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송신국(1개소) 신설, 센티미터급(<5cm) 시범서비스 제공(12월)

전략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체험확대)**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 확대* 및 VR·AR 장비 등 스마트기기 활용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 실시(5개 권역, 6개소)
 - * 해양안전체험관(안산): 선박탈출, 선박경사체험 등 20여종 프로그램 운영
 - 국민해양안전관(진도): 해양생존체험, 해양직업체험 등 13종 프로그램 운영(4월 개관)
- **(비대면교육)** 대국민 해양안전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선원 등) 자격취득교육 온라인학습 플랫폼** 구축·운영(5월~)
 - * 생존기술, 구명뗏목 사용법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과정 개발 및 웹사이트 운영
 - ** 해기사 면허 등 직무교육을 모바일·태블릿·PC 등 온라인 환경에서 수강·이력 관리 가능
- **(맞춤형교육)** 외국인 어선원*, 도서지역 선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교재보급·현장교육), 영세선사 해사안전컨설팅** 확대('21, 3명→'22, 6명)
 - * 10톤미만 소형어선 사고(전체 어선사고의 74%)의 인명피해 중 외국인 선원 23% 차지
 - ** 선박안전관리, 해사안전법령, 해양사고사례 등에 대한 자문(퇴직공무원 활용)

전략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국제협력)** 양·다자회의 및 국제워크숍* 개최, 국제기구 재정기여**, 개도국지원(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협력사업(ODA사업 등) 확대
 - * 한국해사주간, H/S호 교훈도출 국제워크숍,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등
 - ** IMO 특별신탁기금(22억원), 해양안전·안보관련 국제기구·단체(ANF 등, 2.7억원)
- **(국제표준화)** 1:1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12월), 고망간강 잠정지침 공식기준 채택 추진**(~11월), 국제기구 대응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하반기)
 - * 업계의 신기술 개발 단계부터 의제개발, 교섭 등 국제표준화 과정 전반 지원
 - ** IMO 제106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승인 및 채택 추진
- **(회원국감사)** 사전준비*, 모의감사(6월), 미비사항 보완(~9월), 정보 시스템 최신화(~10월) 등을 통한 국제협약 이행 모범국가 도약**
 - * 타국 감사결과 분석, 감사대응 지침 개발, 국제협약 수용실태 전수점검(~4월) 등
 - ** (목표)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 미비로 인한 지적사항 제로화 달성

□ '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소요예산: 4,098억원*

* 국비 3,210억원(78%), 지방비 496억원(12%), 공공기관 391억원(10%)

【 과제별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계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기반 마련	201,057	160,832	28,927	11,298
전략2	해사 신산업 선도	91,526	83,298	7,488	740
전략3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93,759	66,998	935	25,826
전략4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17,879	4,486	12,276	1,117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5,549	5,389	-	160
합계		409,770	321,003	49,626	39,141

주요내용		세부과제	일정	추진기관
전략1. 안전해양이용 확보마련	제도정비	· 「해사안전법」 분법	3월~	해수부
		· 어선 보험료 체계 개선	~12월	해수부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이행기반 마련	~12월	해수부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연중	해수부
		· 미신고위험물 집중관리	연중	해수부
		· 바다내비 협업체계 확대	6월	해수부
	안전복지	·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4월~	KOMSA
		· 어선안전설비 보급 지원	연중	해수부·지자체·KOMSA
		· 노후 유조선 대체건조 지원	연중	해경청
전략2. 해사산업 신선도	친환경선박	· 노후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	연중	해수부
		· 新기술 시험·검사기준 마련	연중	해수부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	연중	해수부·산업부
	자율운항선박	· 공공·민간선박 전환 지원	연중	해수부
		·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실증센터 구축	~6월	해수부·산업부
	첨단산업	· 국내규정 마련 및 국제협약 개정 선제 대응	연중	해수부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시장 점유 확대	연중	해수부
		·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6월	해수부
전략3. 공간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해역관리	· 「교통망법」 제정 추진	연중	해수부
		· 연안해역(5개) 해상교통환경평가	연중	해수부
		·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강화	3월~	해수부
	정보제공	· 해상풍력단지 통항안전 확보	1월	해수부
		· 바다내비 서비스 개선 및 단말기 보급 지원	연중	해수부·KOMSA
		· VTS 시설 첨단화	연중	해경청
	스마트인프라	· 해상기상부이 설치 확대	연중	기상청
		· 해양디지털항로 실해역 검증체계 구축	9월	해수부
		· 차세대 해양디지털통신(VDES) 기초연구	~4월	해수부
전략4.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체험확대	·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 확대	연중	해수부
		· VR·AR 장비 등 활용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연중	해수부
	비대면교육	· 대국민 해양안전 이리닝 프로그램 개발	연중	해수부
		· 종사자 온라인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5월~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맞춤형교육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연중	해수부
		· 해사안전컨설팅 확대	3월~	해수부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국제협력	· 양·다자회의 및 국제워크숍 개최	연중	해수부
		· 국제기구 재정기여	연중	해수부
		· 개도국 지원 및 협력사업 확대	연중	해수부
	국제표준화	· 1:1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2월	해수부
		· 고망간강 잠정지침 공식기준 채택 추진	~11월	해수부
		· 국제기구 대응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	하반기	해수부
	회원국감사	· 사전준비, 모의감사, 미비사항 보완	~9월	해수부
		· 정보시스템 최신화	~10월	해수부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정책현황 및 전망	2
III. 기본방향	6
IV. 5대 전략별 시행계획	7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8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74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94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13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143
V.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162
부 산 광 역 시	162
인 천 광 역 시	189
울 산 광 역 시	199
경 기 도	208
강 원 도	214
충 청 남 도	224
전 라 북 도	231
전 라 남 도	238
경 상 북 도	248
경 상 남 도	25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60
VI. 전략별 소요예산	274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

○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필요

* 법 제6조: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법 제7조: 해양수산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제3차(‘22~’2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개요 】

- ❖ 비 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 ❖ 목 표 :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 ❖ 정책과제 : 5대 추진전략, 21개 이행계획
 -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략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전략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전략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2 추진경과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고시(‘22.1)

○ 20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추진

- 관계기관에 시행계획 작성지침 송부

* 5개 중앙행정기관, 11개 시·도 및 7개 공공기관

- 관계기관별 시행계획 제출(‘22.2월)

Ⅱ. 정책현황 및 전망

1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

◆ 3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전체 93%를 차지

*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 (사고발생) 최근 5년간('17~'21) 14,042건*(연평균증가율 0.8%)의 해양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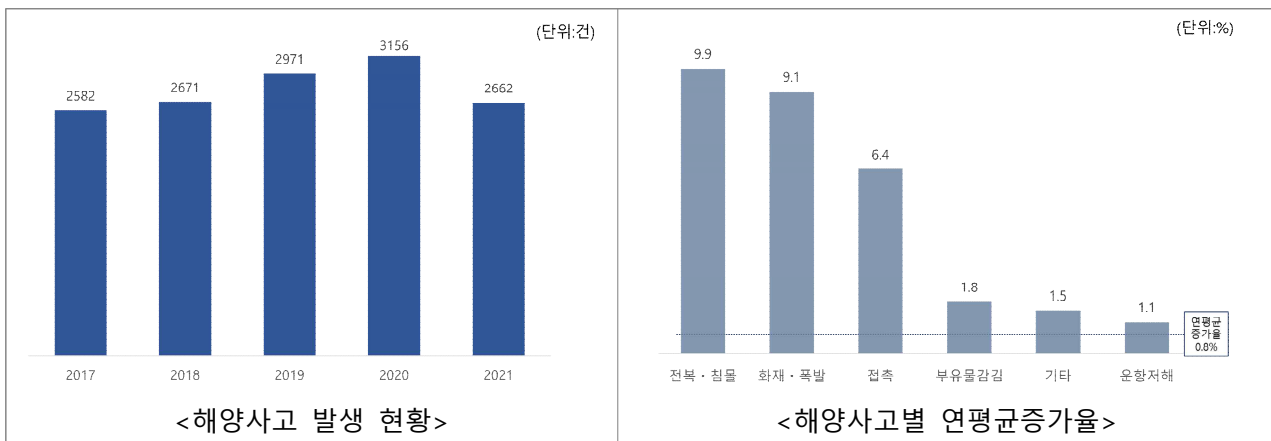
* 어선 9,407건(67%), 일반선박 4,326건(33%) / '21년은 잠정통계 기준

○ 전복·침몰, 화재·폭발, 접촉의 연평균증가율이 전체 연평균증가율 상회

* 전복·침몰 9.9%, 화재·폭발 9.1%, 접촉 6.4%, 부유물감김 1.8% 순

○ 어선은 접촉, 화재·폭발, 일반선박은 전복·침몰이 가장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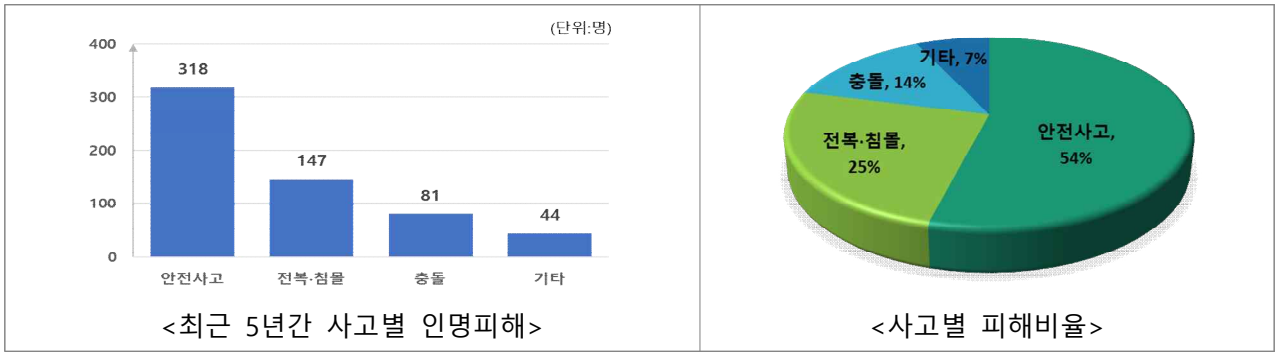
* 어선 : 접촉 10%, 화재·폭발 8% 순, 일반선박 : 전복·침몰 19.4%, 기타 13.5% 순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590명(연평균 118명)의 사망·실종자 발생

○ 전체 사망·실종의 93%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에 기인

* 인명피해비중 : 안전사고(318명, 54%), 전복·침몰(147명, 25%), 충돌(81명, 14%)



《 사고종류별 인명피해 유형 》

- ① 안전사고 : 해상추락 및 1인 조업 중 실종 146명(46%), 어구로프·구조물 신체가적 33명(10%) 등
- ② 전복·침몰 : 기상악화 36명(24%), 부유물 걸림 13명(9%), 어구 과다적재 6명(5%) 등
- ③ 충돌사고 : 어선-일반선박 충돌 52명(64%), 어선간 충돌 22명(27%), 일반선박 충돌 7명(9%)

○ 어선·일반선박 모두 사망·실종의 주원인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로 집계

* 어선(455명) : 안전사고 54%(244명), 전복·침몰 23%(103명), 충돌 15%(70명) 등
일반선박(135명) : 안전사고 55%(74명), 전복·침몰 33%(44명), 충돌 8%(11명) 등

《 최근 5년('17~'21)간 선종별 사망·실종자 발생 현황 》

구분	어선(455명)		일반선박(135명)		
	어선(431명)	낚시어선(24명)	여객선(1명)	일반선박(114명)	레저기구(20명)
인명 피해 (59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243) ■ 전복·침몰(103) ■ 충돌·접촉(53) ■ 화재·폭발(25) ■ 그 외(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접촉(23) ■ 안전사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66) ■ 전복·침몰(38) ■ 충돌(5) ■ 화재·폭발(4) ■ 기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7) ■ 충돌(6) ■ 전복·침몰(6) ■ 화재·폭발(1)

□ (해양오염) 최근 5년간 1,459kl(연평균 292kl)의 유류 해양유출

○ 어선은 충돌(50건, 65kl), 전복(97건, 19kl)에 의해, 일반선박은 화재로 인한 침몰(1건, 629kl), 충돌(11건, 137kl) 등에 의해 발생

○ 1천kl이상 대형오염*은 위험물운반선의 충돌·침몰이 원인

*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07년 원유 12,547kℓ, 이스턴브라이트호 침몰('07년 질산 등 1,552kℓ)

-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양공간 이용·개발 증가로 연안수역 내 교통 환경의 복잡화·밀집화 가중
- ◆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을 계기로 해양수산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정비 요구
- ◆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등 해사 부문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가속

□ (선박 대형화)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 지속 및 대형선박 비중 증가

- 글로벌 선사의 14,000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지속적 시장 투입으로 대형선박 비중 및 선박당 평균 하역량 동반 증가

* 14,000TEU 이상 '컨'선 인도, '19년 47척 → '20년 51척(추정치)

** 선복량 기준 선형별 연평균 증가율('00-'19) 8,000TEU 미만 2.7%, 8,000TEU 이상 28.6% 기록

□ (해양 이용객) 낚시어선·레저선박을 이용한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 증가

- 낚시어선·레저선박(모터보트, 동력요트 등)의 이용객 및 등록척수 지속 증가

* (낚시이용객) '18년 약 448만명 → '20년 약 507만명(18.4%↑), (레저선 조종면허 취득) '18년 약 22.8만명 → '20년 약 26.6만명(16.7%↑)

** (레저) '18년 27,515척 → '20년 31,503척(14.5%↑)

□ (교통환경) 해상교량 건설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양 시설 확충으로 연안수역 교통환경의 복잡화·밀집화 가중

- '00년 이후 해상교량이 81개 증가(32개 → 113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30년까지 12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연안수역 조성 예정

* (발전규모)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 / (단지 수) 현재 6개 → '30년 26개

□ (안전관리) 국민 안전기본권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으로 해양수산 공공·민간부문 안전관리체계 강화 요구

- 어선, 연안여객선 등 사고 취약선박과 항만, 부두 등 안전사고 高위험 시설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 안전 지원 확대 필요

* 국민의 안전기본권 구체화를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 추진(행정안전부, '20~)

□ (환경규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산업 내 탈탄소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친환경 경영 체계로 급격히 전환 중

* IMO 온실가스감축 초기전략 목표 : '30년 30% 감축, '50년 50% 감축('08년 대비)

- 친환경선박(수소,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등), 연료공급 인프라(LNG 병커링 등) 구축 등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및 녹색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선박 전환율 목표 : ('20년) 1% → ('25년) 5% → ('30년) 15%

□ (디지털화) 스마트·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해양디지털 통신망(LTE-M) 구축 등 해양 디지털 서비스 및 연계산업 확대 전망*

* 세계 경제 파급효과(최대 추산치 기준)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90조원, 해양 PNT 5조원, 첨단선박관리 3.5조원 등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MASS) 규정 개발 논의 착수* 및 국제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규정 제정**

* 제105차 해사안전위원회('22.4월, 예정)부터 '자율운항선박 규정개발'을 정식의제로 상정하여 '25년까지 논의 예정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안 마련(상반기) → 국회제출(하반기)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700MHz) 구축('20.12.)으로 전국 연안해역(연안 100km내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디지털통신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초단파 대역 데이터 교환 시스템(VDES*)에 대한 ITU 기술표준 개발('22년) 및 IMO 협약 수용('24년) 추진 예정

* AIS(자동식별장치), ASM(해상메시지서비스), VDE(VHF데이터통신)로 구성

Ⅲ. 기본 방향

비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

제3차
기본계획
목표

해양사고 30% 저감
(‘20년) 3,156건 → (‘26년) 2,209건

인명피해(사망·실종) 30% 저감
(‘20년) 126명 → (‘26년) 88명

‘22년
목표

해양사고 2,600건 이내

인명피해(사망·실종) 112명 이내

추진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 - 1 국민 해상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1 - 2 해상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 1 - 3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 1 - 4 미래형 해상안전관리체계 준비
- 1 - 5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2 - 1 해사 신산업 선도국가 실현
- 2 - 2 친환경 기술 개발
- 2 - 3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 2 - 4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3 - 1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 3 - 2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 3 - 3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 3 - 4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4 - 1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 4 - 2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 4 - 3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 4 - 4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5 - 1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5 - 2 국제표준화 주도
- 5 - 3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 5 - 4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IV. 5대 전략별 시행계획

□ 총괄

- 추진기관 : 5개 중앙행정기관(해수부, 행안부, 산업부, 해경청, 기상청) 및 7개 공공기관(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과 제 : 21개 이행계획, 95개 세부과제
- 소요예산 : 총 360,144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이행 계획	세부 과제	소요예산
합 계		21	95	360,144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	36	160,832
전략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4	13	83,298
전략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4	12	66,998
전략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4	17	4,486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4	17	5,389

□ 5대 전략별 이행계획

- (전략1) ①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②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③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④ 미래형 해사안전 관리 체계 준비, ⑤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 (전략2) ① 해사 신산업 선도국가 실현, ② 친환경 기술 개발, ③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④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 (전략3) ①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②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③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④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 (전략4) ①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②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③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④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 (전략5) ① 국제해사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② 국제표준화 주도, ③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④ 글로벌 해사전문이력 양성 확대

전략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행계획

□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 「해사안전법」 분법*, 해운분야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선박안전법」 제74조의 '중대결함'의 범위 명확화 추진

* 정책위주의 해사안전기본법과 규제위주의 해상교통안전법·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

**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안전 통계분석, 해양교통 현황정보, 위험도 분석·예측, 연계정보 제공 등 상시 안전정보 공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 해양수산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취약분야 (해상펜션·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 강화, 항행장애물 수거·예방활동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요구되는 의무사항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중대재해 교육과정 개설 등

** 해상펜션 대상 낚시터 안전성 검사 실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조종자격여부 등 확인

□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 범부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확장* 추진, 선박안전도 평가 기반 고위험선박(Careship) 전담관리 확대**, 사고다발어선 보험료율 개편추진

* 바다내비 서비스와 해군본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실시간 정보연계 확대

** '21년 어선에 한정하여 시행(462척) → '22년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확대(550척)

□ 미래형 해사안전 관리체계 준비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시행·운영기반* 마련, 원활한 원격검사 체계 및 심사 품질 제고방안 마련,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체계 확대 구축** 등 추진

*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

** 법령개정을 통해 전자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KOMSA에 시스템 구축(기존: KR)

□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에 대한 점검강화,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등 점검 강화*, 10톤미만 FRP어선 대상 소화장치 무상보급**

* 우리부-관세청 간 구축된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 및 서류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 추진(합동: 연2회, 자체: 6개 지방청 별 2회)

** 선령 5년이상, 10톤 미만 연안 복합·자망어선 60척 대상 개선형 무인기관실용 자동 확산 소화기(소화기 1EA + 원격수동작동 제어반 1EA) 무상보급(KOMSA, 40백만원)

1-1 국민 해사안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1-1-1 국민의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86년 제정(舊 「해상교통안전법」) 이후 많은(28회) 개정*으로 방대한 조문수와 다양한 규제내용으로 국민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

* 해사안전기본계획, 해양시설 보호수역, 유조선통항·시운전 금지해역, 안전관리체제, 해상교통안전진단, 항행장애물, 음주운항금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등 도입

- 해양이용·해양개발 증가* 등으로 해양공간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선박 통항안전과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정비 필요

* 해상교량('00년 32개→'20년 113개), 마리나('20년 8개→'29년 78개), 낚싯배 이용객('15년 2,958천명→'19년 4,815천명), 해상풍력('20년 142MW→'30년 12GW)

□ '22년 추진계획

◆ 「해사안전법」을 정책위주의 해사안전기본법과 규제위주의 해상교통안전법 및 항법위주의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

- 현행 해사안전법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22.3~)

* 기본이념, 국민의 책무, 위원회, 실태조사 및 산업진흥 등 신설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법」 분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통한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 강화 - 정기적 심사를 통해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계도를 통한 해양종사자의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의식 개선을 통해 해운분야에 안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여 안전중심 경영문화 조성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도모 추진

□ '22년 추진계획

◆ 해운분야에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 추진

- 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및 업단체 의견수렴(상반기)
- 「해사안전법」 개정 추진(하반기)
- * 전부개정(안)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에 반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운분야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

□ 배경 및 필요성

- 효과적인 해양사고 예방정책과 해양위험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3년 연속사업) 구축 중
- '21년 '스마트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차년 완료
- * 총 47억/3년 사업 : '21년 20.20억, '22년 19.32억, '23년 7.84억

□ '22년 추진계획

◆ 플랫폼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서비스 실시 및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 (인프라 및 서비스) 빅데이터 저장 및 AI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통한 시의성 있는 서비스 발굴·개발
- (데이터 연계) 해양수산분야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제공 범위 확장

분류	1차년도 인프라 기반 구축	2차년도 서비스 발굴 및 개발	3차년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14 대, S/W 11 종 · 시범서비스 3개 개시 · 2개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9 대, S/W 8 종 ·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개발 · 총 10개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4 대, S/W 6 종 · 서비스 고도화 · 총 12개 기관 연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스마트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실)	044-330-2344	1,932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네트워크, 해역안전협의회 SNS(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선사·종사자 대상 사고정보·기상정보·항행경보 등 해양안전정보 전파 * 해수부 종합상황실, 유관기관(해경, KOMSA 등), 해양종사자 등 170여명으로 구성 ○ 규제혁신 리플렛 배포, 전광판(궁평항) 송출, 홈페이지 게재 등 해양안전정책 관련 주요정보를 국민들에게 홍보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선박단말기 설치선박에 기상정보 및 수로정보, 항행통보와 같은 간행물 등 정보 제공 * 선박 위치, 해양사고, 기상특보, 수심, 조석·조류, 해저지형 등 30여개 정보 ○ 관내 내항여객, 화물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등에 항행경보(상시) 및 해양사고 예방정보(매월) 전달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안전법」 제74조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한 중대결함을 발견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함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중대결함의 범위 명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선박안전법」 제74조에 정하는 '중대결함'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국내외 기준 연구 및 관련 업·단체 의견수렴

-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및 「항공안전법」 등 유사법령의 규정 분석(~8월)
→ 「선박안전법」 제74조에 정하는 '중대결함'의 범위(안) 마련 및 관련 업·단체 의견수렴(~11월, 필요시*)

*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은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반영해 진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분야 국민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방법 및 목적 등 제도 취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심사 및 점검 시 해당 제도 안내 및 적극 이용 홍보 ○ 여수청 온라인 홈페이지 결함신고 사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허가 구조변경, 화물과적 등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행정처리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국민 관심유도 콘텐츠를 통해 개인 생존능력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및 국민 참여형 현장캠페인 지속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작동 체험,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실습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강원지역본부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관심유도 콘텐츠를 통해 개인 생존능력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및 국민 참여형 현장캠페인 지속 추진(연중) -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작동 체험, 비상시 응급조치 실습, 해양오염방제 장비 시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분야 민원바다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청 홈페이지-민원바다를 이용한 국민제안, 공익신고, 안전신문고, 선박 결함신고 등 국민참여가 활발한 해사안전관리 제도 ○ 해양안전실천 서부지역본부 대국민 캠페인 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관심유도 콘텐츠개발 및 시기별(명절, 휴가철 등)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을 통한 비상대응능력 강화 -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및 구명뗏목 작동, 비상 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해양사고 대응요령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분야 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상황별 해사안전 관리 및 대응 안내 - 국민해양안전 기본수칙 홍보 및 보급(예인선·레저기구 중점)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제고를 위한 해사안전 신고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박결함신고 등 국민참여 해사안전관리 - 선박결함 신고제도, 국민안전신문고 제도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 항만이용 불편 및 안전관련 민원 전담접수창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전담하여 접수하고, 신속대응 및 처리를 도모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제74조에 따른 선박결함신고제도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민원바다-선박결함신고' 또는 항만운영정보 시스템(PORT-MIS) 홈페이지 '항만민원-정보이용-선박결함신고' - 분기별 우리 청 관할 해양 업·단체 대상 선박결함신고제도 등 홍보 실시

1-2 해사안전 사각지대 관리 고도화

1-2-1

해사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 법 시행 초기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조치*의 원활한 이행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 등 현장 조기정착 지원 필요
-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 등 명령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조치

□ '22년 추진계획

◆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 (정기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빠짐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관리 추진(반기별)
- 중대산업·시민재해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항만건설, 관공선 등 분야별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주기적 점검
- (교육·홍보) 중대재해 교육과정* 개설(인재개발원, 3월) 및 해양수산 분야 설명회 개최(반기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조치의 현장 정착 지원
- * (대상) 해수부 담당자 등(교육효과·여건 등 고려, 민간 경영책임자등으로 확대 검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수산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이행 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6074	3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1,800여건 발생하는 연근해어선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16~'20) 어선사고는 9,321건, 인명피해는 470명 발생, 기관손상(30.2%) 등 경미한 사고가 74.5%이고, 인명피해는 양망기 끼임 등 안전사고가 53.4%를 차지

□ '22년 추진계획

◆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뿐 아니라 조업제한, 구명조끼 착용 규정 강화 등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조업제한)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뿐 아니라 조업도 제한하고,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는 선장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구명조끼 착용)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도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선장에게도 부과
-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9) 및 국회 제출(10.21)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

□ 배경 및 필요성

- 민간관리 구역에서의 지속적인 항만근로자 재해발생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요구 증대로 항만당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등 안전관련 법규 강화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보완

□ '22년 추진계획

◆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협업 강화, 안전보건 물품지원, 안전점검·교육 등 집중 실시 등으로 항만 내 무재해 달성 추진

- (부산항)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하역사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안전관리 강화
 -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통한 민·관 합동점검과 안전신고제 운영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통한 이행 확인
- (울산항) 항만안전컨퍼런스 개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여수광양항) 주기적·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안전보건물품 지원, 안전교육시행 및 액체화물 하역안전매뉴얼 제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항만 안전관리			7,720백만원
(하역사 안전사고 예방지원체계 구축, 감만부두 보강공사 등)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6	(5,890백만원)
(항만안전 컨퍼런스,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쌍방향 재난소통 등)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2-228-5437 052-228-5435 052-228-5433	(192백만원)
(항만 안전점검·진단 실시, 안전보건물품 지원, 안전교육 시행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보안실, 항만건설부)	061-797-4482/4412 /4489 061-797-4524/4542	(1,638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조치의무 이행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7.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및 제3자 도급 및 위탁 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감독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조 등의 의무이행 확인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이행 및 '위험신고 시스템'과 시공사,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안전소통채널' 구축으로 위험요인 사전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안전조치 불이행, 미흡사항 등에 대한 익명신고 전화, QR 코드 스티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안전위해·위험요인은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 ○ 다중이용시설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시행(2월)하고 시설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여객시설물(교량, 옹벽, 방파제, 연도교 등) 92개소와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9개소 ○ 고용노동부, 인천항만공사(IPA), 항운노조, 항만운행사 등이 참여하는「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 및 「현장안전 간담회」 개최(반기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지원) 사업장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지침 및 중대재해예방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업자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연 1회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 해당 사업장의 지도·감독 시 법령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소관 업무에 따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위해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점검 시 발견된 안전위해 요소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시설물 보수(항만물류과)·보강(항만건설과) 필요시 즉시 조치하여 안전 위해요소 제거 * 합동점검(상·하반기 1회) 및 자체 현장점검(주 1회) 추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터미널 내 전광판과 홍보TV, 팸플릿, 배너를 활용하여 이용객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등 홍보 시행(수시) ○ 관공선의 주기적 정비로 안전한 순찰업무를 지향하고 관내 사업장 및 시설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재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연1회/6월경) - 국제여객터미널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점검 실시(매월 1회) ○ 표지시설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및 항로표지 확충, 개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 안전케이블 설치, 표지시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관리자 배치, 안전협의회 개최 등 - 고성군 토성면 봉포항 전면해상 수중방파제 표시용 등표 2기 신설 및 노후된 유무인 표지 대수선 공사 등 추진 ○ 여객선 이용객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제여객선·연안여객선 사업자 지도·감독(반기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 승무원 및 이용객 안전의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 안전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응훈련 연 2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선원 대상 소화·퇴선훈련, 구명뗏목 투하훈련 및 구명·소화설비 시연 - 차도선 차량선적 후 운전자 객실이동 등 승객의 안전수칙 준수 및 운항관리자 직무, 관리규정 등 교육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관리분야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여객선사, 항만·어항·부두시설 건설 작업현장 등 소관 법령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중대재해 소관대상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청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장 의무사항 이행현황 점검, 안전교육 및 관련내용 홍보 ○ 마리나 사업장 및 선박 안전점검·교육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 여객선,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등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예방 차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 지원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건설 현장, 하역 현장, 관공선 등 소관대상의 위험요소 사전발굴 및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현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공사, 배수로 정비 및 표지시설 공사 등 - 선박용물건 지정제조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확인 - 출항 전 개인별 건강 자가진단체크 실시, 선내 기관실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및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 지원사업장 대상인 여객선 운영 선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해설서 배포 ○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사 지도·감독을 통해 여객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여부 등 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펜션)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유어장 내 해상펜션의 안전관리 기준 미비
 - 시설물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해상펜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항만건설작업선) 항만건설 작업 시 재해예방을 위해 선박검사 및 종사자(조종사) 자격 검증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해상펜션) 기존 설치된 유어장 내 해상펜션은 유어장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낚시터업으로 전환 또는 시설물 철거 지속 추진
 - 신규 설치 해상펜션은 별도의 낚시터업 허가·등록을 통해 관리
 - 유어장 내 해상펜션 대상 낚시터 안전성 검사(KOMSA) 지속 실시(연중)
- (항만건설작업선) 항만개발사업에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시 선박검사 여부 및 항만건설장비 조종 자격 필수 확인(연중)
 - 사업 발주부서에서 선박검사 및 유자격 여부 확인

* (항만건설작업선) 기중기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준설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상펜션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
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4	-

□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선 점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항로 위해요소 확인 및 여객선 운항·상황 관리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필요
- 접근성 한계를 극복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선외측 흘수(draft) 및 선체상태, 고소구역(mast, 연돌 등), 선저(수중드론) 등

□ '22년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분야 4차 산업기술 “드론” 활용을 통한 안전 관리 고도화 추진

- 추진과제(조종인력 양성, 드론운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추진과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조종인력 양성	조종자(29명)	10명	10명	3명	3명	3명
	* 조종자 등 양성 현황('21.) : 조종자 12명(교관 1명 포함)					
드론운용 (항공+수중)	드론운용(24기)	■ 12기	■ 6기	■ 6기	예산편성에 따라 추가구입	
	* 보유현황('21.) : 총 3기(공단 구입 1기, 해수부 지원 2기)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드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현장 ↔ 본사 운항상황관리센터)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인프 라 구축 - 현장 이슈(해양사고, 운항특이사항 등)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초기대응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드론활용,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고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제도실)	044-330-2376	1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제거작업 등을 통해 해양사고로 침몰된 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

* (정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

** 사업추진 절차 : ① 현장 실태조사 대상선박 선정 → ② 현장실태조사 → ③ 잔존유 확인(1단계) → ④ 잔존유 회수(2단계)

□ '22년 추진계획

◆ 잔존유 확인작업(2척)과 회수작업(1척) 추진 및 잔존유가 제거된 선박은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잔존유 확인작업을 통해 실제 잔존유 유무를 확인하고, 잔존유 유량 계측 및 샘플 분석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회수방안 도출

- (잔존유 확인, 2척*) 사전 잠수조사, 선체 내 잔존유 유무 확인 및 잔존유량 계측을 통한 위해도 저감방법 검토(4월~11월)

* 마린스타엠호(신안/1,596톤), 알데바란호(신안/1,189톤)

- (잔존유 회수, 1척*) 기 확인('20~'21년) 잔존유 51.2kℓ(중질유) 회수 추진, 기술편람 및 작업 동영상 제작(4월~11월)

* 두리호(부안/5,552톤)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침몰선박 관리	해양환경공단 (예방·대응처)	02-3498-8597	6,68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의 안전운항을 방해하거나,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항행장애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원인 제공자(선장, 소유자 등)에게 장애물 제거 의무가 있으나 제거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직접 제거

□ '22년 추진계획

◆ 해양사고에 기인한 선박 및 표류물(컨테이너, 원목 등) 제거(수거, 예인 등) 및 2차사고(인명, 오염 및 양식장 피해) 대비 예방 활동 수행

* 「해사안전법」 제28조(항행장애물 제거) 등

- (항행장애물 제거) 해양사고에 따른 항행장애물 발생 시 신속 제거
 - 항행장애물 위치, 규모, 종류, 상태 및 제거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응계획(선박척수 및 선박 마력 등)을 해수부와 사전협의 후 실시
- (항행장애물 예방활동) 항행장애물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예방 순찰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처리

* '21년 여객선 항로, 통항 밀집지역 등 항행장애물 예방활동 252회 실시

- (항행장애물 DB 구축) 국가 항행장애물 종합 DB 시스템 구축
 - 항행장애물 현황, 해양사고 통계정보 등 사고 절감을 위한 종합 DB시스템 구축, 이를 활용한 사고다발해역 분석 등 적극 활용 추진
- * 공단 포털 내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해양사고, 항행장애물 제거 위치정보 등 관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해양환경공단 (예산사업처)	02-3498-8733	1,135백만원
해양오염방제, 장애물 제거 및 긴급예선 지원 등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2-228-5435	13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항의 고질적인 계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관리 고도화
 - 과접안시설을 파악하고, 선박 계류현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 실시,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체계류지 및 추가 함선 배치 검토
- * '21년도 기간 중 인천항 수역시설 내 계류선박 : 582척

□ '22년 추진계획

- ◆ 방치선박 연간 5척 이동·폐선 조치
- ◆ 무단 장기계류 선박 연간 10척 이동 또는 계선신고 협의·신고
- ◆ 밀집지역 혼잡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 인천항내 계류선박 현황 전수조사 1회 실시

- 방치선박 및 무단 장기계류 선박 이동·제거 실시(인천청과 공조)
- 인천항 내 계류선박 현황 전수조사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현장중심 안전관리 (방치·침몰물제거, 혼잡도개선, 계류선박 전수조사 등)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32-890-8244	106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취약구역 계도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불법 어로 행위 단속, 항행장애물 제거, 항로침범 유무 확인 등 -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 비상체제 유지와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선박검사 미수검 대상선박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장기 계류선박 현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항만시설사용 일제 정비, 방치선박 등 장애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및 무단 장기계류 선박 현황 전수조사 및 이동·제거('21년 계류선박 582척) ○ 항로 저수심 구간 유지준설로 선박 입출항 및 통항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유지준설, 항내 3개 구간 유지준설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선박검사 미이행 사업장 및 소유자 현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대상 현행화 ○ 미수검선박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미운영시 계류신청을 통한 선박 안전관리 도모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TF팀 운영(22년 연중)을 통한 지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 불명 등 노후·방치 선박, 장기 미수검 선박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취약구역 순찰·계도 활동 강화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취약선종인 예·부선, 소형선박 및 위험물운반선 등 내항선 대상 항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및 누락된 선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내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 미수검선박 대상 추적·관리 시행 및 현장 지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선박검사 사전안내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방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내 공사작업에 투입되는 해양사고 취약선종인 예·부선 및 소형선박 등 내항선 대상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유류돌핀부두 및 황산저장시설 등 위험물 하역·저장시설과 LNG 벙커링 및 위험물 이송작업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현장 비치 및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내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시설관리자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 관리·감독(위험물 양·하역 시) ○ 위험물운송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업·단체 간담회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반기 1회)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취약분야 중점점검 시행(해사안전감독관) - 거주구역 화재사고, 기관 등 결함 발생률이 높은 주요설비, 선체 피로도 등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항내 운항 소형선박 점검강화 및 안전관리 추진 - 종사자 집합교육 및 방선교육 등을 통해 선박소유자와 선박운항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감독 강화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검선박 대상 추적·관리 시행 및 현장 지도·감독 강화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선박검사 미수검 대상선박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불개항장 기항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지속 실시 - 완도, 해남, 신안군 등 불개항장 기항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부적격 선박 출항통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검선박 TF팀 운영('22년 연중)을 통한 지속관리 - 장기계류, 소재불명 등 노후·방치된 선박, 장기 미수검선박 관리강화를 통한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및 사고 방지 - 매달 미수검선박 명단 목록 관리 철저 및 사고 방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제도권 선박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 강화 - 무인부선 등 안전규제 완화·면제 선박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무인부선의 불법승선(접·이안을 위한 승선 등/연평균 40척 적발/해경), 계선선박의 불법 운항(유류 화물 적재·이송) 등 ○ 내항 취약선과 관공선 선원 대상 교육 실시 - 급유선, 노후 내항화물선 등 고령화된 선원과 관공선 선원 대상 구명설비 작동설명, 시연회와 사고예방 교육 지속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공백 등 선박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검사유도 등 일제정리 - 대상선박 소유자 확인 및 검사·계선 안내 등 일제정리 추진 * 22년도 장기 미수검선박(3년이상) 6척 추진예정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재해 어선의 신속한 복구 추진 중('04~)
 - * 순보험료(톤급별 차등지원) 10톤 미만 70%, 20톤 미만 60% / 부가보험료 75%
 - 영세한 10톤 미만 어선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 최소화 및 보장 범위 지속 확대 필요
 - * 10톤미만 어선보험 가입척수(가입률): (18) 14,249척(24.9%) → (19) 15,148(26.6) → (20) 16,388(30.9%) → (21) 17,217(32.5%)
- 어선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 유도 및 자기주도 안전관리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어선 안전설비 설치 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19~)
 - 현재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할인 적용 중이며, 무선항해설비가 주요 할인 대상에 해당
 - * 어선: 최대 8%(AIS 2%, EPIRB 1%, 레이다 2%, 바다내비 단말기 2%, 로프절단기 1%)
어선원: 최대 7%(AIS 1%, EPIRB 1%, 레이다 1%, 바다내비 단말기 2%, 구명뗏목 2%)

□ '22년 추진계획

- ◆ 화재피해, 해양오염 발생 시를 대비하고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보험 보장범위 확대 시행
- ◆ 조업작업 중 양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보급한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설비 어선의 보험료 할인 적용 추진

- 민간보험 보상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유류 오염방제조치 및 해난구조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장범위 확대(1월~)
 - * 화재대물배상책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손해방지비용을 주계약으로 보장

-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도모를 위해 어선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적용(12월)

* 실태점검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 수준 마련

< 어선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보급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1.8월 ~ '22. 5월
- 사업비용 : 1,300백만원(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회계)
- 지원척수 : 1,180척

구 분	계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안안강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대상척수	6,797	209	416	185	356	4,161	1,467
설치척수	706	56	12	1	29	485	123
설치율	10.4%	26.8%	2.9%	0.5%	8.1%	11.7%	8.4%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116,29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및 소형선박 안전사각지대 선박 대상 사고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추진 -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내 항만·어항 순회 해양사고 예방 안전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보급을 위한 서비스 안내 및 홍보 병행 - 내수면 소형선박 등 우리 청 등록 안전사각지대 선박 대상 해양안전정보 SNS 홍보 시, 안전문구 발송 병행 - 각종 증서 및 민원서류·안내문에 안전홍보물(해양안전예보, 안전수칙, 대국민 해양안전 활동 지원 등)을 동봉하여 민원인에게 등기 발송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선박과 사업자의 자체적 안전관리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체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지도함 ○ 해양안전실천본부와 연계하여 안전수칙 홍보 및 대국민 해양안전 활동 지원 등 스스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테마 선정 해양사고 예방 홍보를 통한 국민과 해양종사자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 ○ 평택·당진 해역안전협의회 개최(반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업·단체로 구성된 평택·당진 해역안전협의회를 통해 항만 및 수역에 대한 해양사고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개선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종사자 안전교육으로 안전운항 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경보, 최근 해양사고 사례전파 등 현장(방선)교육 추진(550명) 및 육·해상 선박종사자 대상 실무 위주의 체험형 집합교육 개최(연2회) ○ 대국민 대상 현장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명절, 휴가철 등) 지역 축제·행사,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및 홈페이지 등 활용 해양사고 예방정보 전파

1-3 데이터기반 해양사고 예방체계 혁신

1-3-1 해양사고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플랫폼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공 중('20년~)
 - (해경청·수협) 선박·어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LTE-M 선박 위치정보 및 긴급구조신호 연계 완료('21.1~7월)
 - (국방부·국정원) 국가 해양안전·안보관리 통합 플랫폼* 체계로 활용하기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연계('21.12월)
- * 해양안전·해상안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2.14, 우리부·국정원·국방부)

□ '22년 추진계획

◆ 범부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 확장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 해양안전 통합플랫폼 활용성 제고

- (해군본부) 해군의 통합방위 기능 강화를 위한 바다내비 시스템과 해군 통합선박정보관리체계(IVIMS)간 선박 위치정보 등 실시간 연계 추진
 - * (추진일정) 양 기관간 연계방안 검토(상반기) → 실시간 연계(하반기)
- (KOMSA)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TE-M 위치정보 및 긴급구조신호(SOS) 등을 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실)에 연계* 추진
 - * 여객선 LTE-M 위치정보 및 통합통신(UC) 활용·연계 추진(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 플랫폼 강화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030	-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 분야 재난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
 -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해양수산 재난 중심의 효율적 대비·대응을 위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운영 중('16~현재)

□ 추진계획

◆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 데이터기반 체계 구축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및 기능개선
 - 위성AIS 서비스 공급, 위험물 취급항 CCTV 연계, 해양수산재난 업무포털 등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용역 지속 추진
 - 재난재해 자료의 통합·활용이 가능한 재난행정 정보관리체계 기틀 마련 및 선박 사고정보 분석 개선 통한 해양수산 위기관리 활동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및 기능개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3	1,28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효과적인 해양안전 정책수립 및 해양사고 예방업무에 활용을 위해 해양사고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분석·제공 필요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내항선사(종사자)로 확대 및 활성화하여 내항선의 안전운항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제도시행 10년째이나, 주로 안전관리 인력과 역량을 갖춘 외항선사위주로 시행 중

□ '22년 추진계획

◆ 해양사고통계 활용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분석개선 추진 및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

- (통계분석 개선) 해양 인명사고(사망·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안전사고(인명사고의 약60%)를 분석한 정책통계 신설
 - 안전사고의 세부유형* 분류를 통한 사고원인과 선종별, 시기별 인명사고 발생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개선
- * 「효과적인 해양사고 통계 관리체계 개발연구용역('21년)」 결과 반영
- ** 양망기 사고, 어구 등의 신체가격, 해상추락, 질식 등 10가지 세부유형 분류 제공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 개최 및 내항선·외항선 분야 구분 시상을 통해 맞춤형 교훈사례 발굴 추진
 - 공모전 시상작 등은 '준해양사고 교훈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선사·유관기관과 공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계도활동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도 예산
해양사고 통계개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6	22백만원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40	4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유관기관과 과별 임무·역할 및 사고유형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훈련 실시 ○ 해양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실무 매뉴얼 개정, 도상·현장훈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비상연락망 최신화 등 신속한 현장반영을 위한 행동매뉴얼 개정 ○ 재난 비상대응체계 운용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악화 전 사전 안전조치, 태풍 상륙대비 비상대책반 운영 및 해양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평택·당진 해역안전협의회 등 개최

□ 추진배경

- 최근 조업작업 중 양망기 끼임·뱃줄 타격, 기상악화 시 무리한 출항 및 경계소홀 등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16~'20) 어선사고는 9,321건, 인명피해는 470명 발생, 기관손상(30.2%) 등 경미한 사고가 74.5%이고, 인명피해는 양망기 끼임 등 안전사고가 53.4%를 차지

□ 추진계획

◆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대책 지속 추진으로 어업인의 생명·재산 보호

- (위치확인 강화) 장거리(100km↑) 조업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근해어선(자망·트롤·쌍끌이 등)에 보급**

* 위치를 10분 간격으로 실시간 자동으로 발신, 주전원 차단 시 최대 3일까지 확인 가능

** '20~'23(2,100척) : ('20) 100척 → ('21) 700척 → ('22) 700척 → ('23) 600척

- 어선안전조업시스템(FIS) 위치·어선원 정보 등 연계체계 고도화 지속

-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어선전복, 추락 등 사고 시 개별 선원이 조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해상검증 등* 추진

* 실제 조업 어선(10척, 100명)을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의 기능과 성능 현장 검증(연중)

** 전파진흥원(KCA)에서 개발한 "SOS왓치" 검증을 위한 대상어선(전국 1,000척) 선정 협조

- (기상정보 확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등 자료 분석을 통한 기상특보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어업인에게 정보 제공

* 기상청·중해심에서 발표하는 계절별 해상 기상분석 정보를 '조업정보알리미앱'에 홍보

- (금속재질 어선) 화재에 강한 금속재질*로 대체 가능한 표준어선 개발을 완료(~'21)하고, 새로운 표준어선 설계도면 고시 제정** (4월)

* 알루미늄 5개 업종(연안복합·통발·자망·개량안강망, 패류형망), 강선(근해안강망) / FRP 4개 업종(근해채낚기·자망·통발·연승)

** 제정안 마련(1월) → 행정예고(2월) → 규제·법제 심사(~3월) → 시행(4월~)

- (통합단말기) 안전 항해(조타실 시야 확보)를 위해 조타실 내 어업·항해·통신장비를 통합*하는 기술개발** ('20~'22, 17.4억원)

* (현행) 어군탐지기·GPS 플로터·V-PASS·AIS·VHF-DSC → (개발) 통합 단말기

** ('20) 설계 및 장비개발 → ('21) 시제품 개발 및 성능시험 → ('22) 실험역 검증 및 보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조업지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8,436백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977백만원 *어선안전장비 872 *어업인안전조업교육 1,105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어선 대체건조)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667백만원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노후기관 장비설비 대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4,643백만원
연근해위치 확인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3,553백만원 *해상통신망운영관리 1,022 *장거리 위치발신기기보급 약 700대 설치 1,960 *안전모니터링시스템유지 보수 571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16~'20년)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사고 중 53.3%(314명) 차지, 사고 취약선박 대상 집중관리* 추진 필요

* '21년도 안전사고 취약어선 100척 대상 집중관리 추진

□ 추진계획

◆ 안전사고 이력 조사 기반 재사고율이 높은 사고 취약어선 150척 대상으로 집중관리 확대 추진('21년 100척→'22년 150척)

- (안전물품 보급) 안전모, 안전벨트(커터포함), 안전장화, 손끼임 방지 장갑 등 안전물품 보급을 통한 해상근로자 안전작업환경 지원

* 어구감김, 실족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119명, 38%)이 가장 많고, 나홀로 조업 중 실종(41명, 13%), 어구·구조물 등에 맞음(38명, 12%) 順

- (종사자 교육) 선박 용도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배포 활용을 통해 선박검사·안전점검 시 종사자 현장교육 추진

* '22년도 안전사고 취약업종별 교육자료 제작 예정

- (합동점검 지원) 정부 주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합동 점검 현장 지원을 통한 주요 취약설비 집중점검 추진(상·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도 예산
안전사고 취약어선 안전물품 보급 및 종사자 현장교육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실)	044-330-2336	65백만원 (150척 지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특별수송 등 대비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추석 연휴, 봄 행락철, 여름 휴가철, 겨울철 등 여객의 증가에 따른 과승 및 화물 과적의 방지(합동 특별점검 연 5회 시행) ○ 카페리 화물선 승객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절별 특별점검 시행(12회) ○ 위험물운반선의 화재폭발 방지 및 일반화물선의 하역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연중 시행) 시 적극 대응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종·해역·시기·유형별 집중대책 수립 ○ 정비 부족으로 인한 기관고장, 페로프·어망에 의한 부유물 감김사고 등 단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3척) 효율적 운영으로 항내 부유물 및 페어망 등 제거 추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광양항 중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 운영을 통한 선박수리·공사작업, 해상환적 현장점검, 불법 어로행위 단속, 장애물 제거 등 실시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추진 및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 및 항만순찰선을 통해 해상부유물을 확인·수거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운반·처리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주관, 해양환경공단 위탁)에서 시행 중인 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의 대상지 발굴 및 수거 요청 ○ 각종 해양 정화활동 실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합동 정화활동 실시, 타 정화활동에도 인력·장비 등 적극적 지원 추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특별수송 등 대비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추석 연휴, 봄 행락철, 여름 휴가철, 겨울철 등 여객의 증가에 따른 여객 초과 및 화물 과적의 방지(합동 특별점검 연 5회 시행) ○ 카페리화물선의 특별점검 시행(12회), 위험물운반선의 화재폭발 방지 및 일반화물선의 하역작업 사고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감독 강화(연중 시행) ○ 선종·시기·유형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종사자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강화(선박점검 시 병행)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종·시기별 해양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 시연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선·여객선 대상 지도·점검 및 안전설비 시연 추진 - 계절별 해양안전관리 방안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화재, 기관손상 등 빈발 사고유형에 대한 안전의식 지속 함양 ○ 동해항 수상구역 내 항행안전수역 확보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반 편성 및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 운영(반기별) - 선박항행에 지장을 주는 어구·어망의 신속한 제거 및 불법어로행위 다발 해역에 대한 주기적 순찰선 운영 ○ 해상부유물 등 해상폐기물 등을 통하여 항내 안전하고 원활한 선박통항을 위한 항만안전 집중관리 - 폐어망·폐로프 등 해상부유물 및 침전물(해양쓰레기 및 항만폐기물) 발생 시 해양환경공단 청항선과 인력·자원 등을 투입하여 신속한 수거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장항항내 순찰 및 무역항 특별단속(반기1회) 시 여객선 항로 중심으로 불법어구 등을 수거하여 사전예방 실시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실시(수시) - 관공선, 청항선(해양환경공단)을 통해 해상부유물 상시 확인 및 수거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 대책 수립 및 점검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 - 빈발하는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간담회 실시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 및 사업장(필요시)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추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저감 대책 수립 및 점검 - 계절에 따른 경북해역 해양안전 강화방안 수립 및 관계기관별 이행상태 확인(예인선, 레저기구 중점 관리)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강화 - 선박화재, 위험물사고, 장애물 발생 등 대비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확대(해양경찰청, 소방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빈발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시기·유형별·요인별 집중대책 수립 및 이행 ○ 선내 안전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지속추진 - 선박점검 및 ISM심사 시 선내사고 관련 안전작업 절차 마련·이행여부 및 설비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여 미흡사항 시정조치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해양사고 발생선박에 대한 수시심사 및 집중관리 실시 - 사고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이행여부 확인, 선원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및 선사의 재발방지대책 강구

□ 추진배경

- 매일 5건씩(연 1,800여건) 발생하는 어선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관리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16~'20) 어선사고는 9,321건, 인명피해는 470명 발생, 기관손상(30.2%) 등 경미한 사고가 74.5%이고, 인명피해는 양망기 끼임 등 안전사고가 53.4%를 차지

□ 추진계획

◆ 구명조끼, 자동소화장치 등 어선설비 및 노후기관 대체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안전장비)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법정 어선설비*를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속 보급·지원

* 연근해어선 대상, 「어선법」 및 「낚시법」에 따른 법정 어선설비,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 보급 지원(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노후기관 대체) 연근해어선의 노후기관(엔진), 장비 등의 고장·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고효율 기관, 안전장비 등 대체설치 지원*

* 노후기관, 장비 등 설치비 보조(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어선안전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872백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노후기관 장비설비 대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4,64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사고다발 어선에 대한 보험료율 제도 개선 검토 추진

※ (현행) ① 어선보험 약관 상 다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자기부담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 불가(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 어선)

②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은 어선은 보험료 산출기준 중 개인별 손해율에 대해 최대 50% 범위 내에서 할증 적용

보험금 지급률 (보험료/보험금)	~20%	21~40%	41~70%	71~90%	91~140%	141~250%	251%~
할인할증비율	-50%	-40~-30%	-20~-5%	0	5~10%	20~40%	50%

□ '22년 추진계획

◆ 사고다발 어선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추진

- 사고다발 어선에 대한 보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개인별 손해율 (보험금/보험료)에 따른 요율 산출 시 '사고건수'를 추가 반영

- 현행 보험금 지급률(20~250%)을 토대로 사고건수를 일정비율 반영할 계획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기준 수립 예정(12월)

* 유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증 시 '사고건수'를 반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116,29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

□ '22년 추진계획

◆ 「해양 유·도선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노후유도선 대체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활성화

- (유도선 재난관리 강화) 「해양 유·도선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연간 개선·관리계획* 수립으로 빈틈없는 재난관리 이행

* 제개정 현황관리, 교육 및 순회 점검, 숙달훈련, 외부 전문가 자문 등

- (재난관리평가) '22년도 재난관리평가 대응(2~3월) 및 평가 미흡 지표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시행으로 재난관리 역량제고 향상

- (노후유도선 대체지원) 선령기준을 초과하는 유·도선 대체 건조를 위한 금융대출시 이자 일부(2.5%) 지원

* (지원실적) '20년 32백만원(2척), '21년 85백만원(6척)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도 예산
유도선 재난관리 강화 등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549	-
노후유도선 대체지원			171백만원 (11척)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최근 5년간('16~'20년) 인명피해(사망·실종) 총 589명 발생, 주요 해양사고로 인해 577명(97.9%) 발생으로 맞춤형 전담관리 필요
- (추진현황) 맞춤형 안전관리 확대 추진을 통한 고위험선박 대상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20년 343척 → '21년 462척, 34.7% ↑)

* 고위험 관리선박 대상 사고 발생률('20년 21.7% → '21년 7.1%, 14.6%P ↓)

** 고위험 관리선박 대상 인명피해 현황('20년 4명 → '21년 0명, 인명피해 無)

□ 추진계획

◆ 선박안전도 평가 기반, 고위험선박 전담관리 확대('21년 462척→'22년 550척)

- (관리대상 확대) 現 '21년 고위험선박 관리는 어선에 한정하여 시행, '22년도에는 비어선(예인선+수상레저기구)도 포함하여 확대 추진
 - 비어선 사고다발 선종 대상 선박안전도 평가 실시, 고위험선박 대상 검사원·연구원 1:1 전담 집중관리 실시
- (집중관리·지원 강화) 주요사고 유형별 점검분야 확대 및 안전물품, 교육자료 등 제작·배포를 통한 현장교육 강화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도 예산
안전관리지수 기반 고위험 선박 안전도 향상 추진 (고위험 선박 대상 1:1 전담관리 및 안전물품 보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실)	044-330-2447	121백만원 (550척)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점검 대상선박의 맞춤형 지도·감독 시행(5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별, 상황별 선박 및 선주 지도·감독 및 교육 시행 ○ 안전관리평가 하위선박사업장 집중점검 시행(3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상태 점검 및 지원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고 발생, 지도·감독, 인증심사 시 개선사항 및 부적합사항 다수발생 (동일지적 지속발생 포함) 방지를 위한 점검·지원 강화 ○ 결함사실 확인 및 집중점검·선원 안전관리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결함신고내용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결함 신고방법 적극안내, 안전설비 관리의 효과적 이행 유도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운항여건, 규제 사각지대 등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선박군 추적 및 집중 지도·감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 이상 및 사고다발 예·부선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및 종사자안전교육 실시(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 681척 중 예부선이 626척 차지(20년 이상 476척/ 76%))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창 세정절차 준수·방폭 장비 사용 여부 점검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 대상선박*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강화된 기국통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외국항 출항정지된 선박, 선령 15년 초과 위험물 및 산적화물선, T-MOU 고위험선박 중 1년간 2회 미만 수검 선박으로 본부에서 지정·고시(분기) ○ 우선점검 대상선박의 맞춤형 지도·감독 시행(16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별, 상황별 선박 및 선주 지도·감독 및 교육 시행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지도·감독 이력 등 데이터 기반 고위험 및 안전취약선박 대상 집중 점검 및 지도·감독 시행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해사안전 지도·감독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속 추진 및 선박점검 강화 (선박 150척, 사업장 30곳)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지도·감독 이력, 선령, 규정 위반율 등 데이터 기반 고위험 및 안전 취약선박 대상 집중점검 및 지도·감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대상선박 등 안전취약 선박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국 통제(특별점검) 강화 - 화물선, 여객선 대상 연간 지도·감독 계획수립을 통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통항 금지수역 통항 등 관련 법령 위반 선박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하여 질서유지 및 해상안전 확보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선박 중점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출항정지 이력, Tokyo MOU 공표 Black list에 해당하는 국가 및 非IACS 등록선박은 우선점검 및 상세점검 시행 - Tokyo MOU 공표 기준미달선박은 입항시 마다 우선·상세점검 시행 및 주요 결함 출항전 시정 원칙으로 처분 - 결함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분기별 집중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1분기), 항해안전(2분기), 구명설비(3분기), 비상기기(4분기) ○ 국적선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에 따른 기국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내 출항정지선박 및 국제기준에 따른 고위험선박(HRS)의 중점관리 대상선박 지정·공표에 따른 특별점검 및 교육 시행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등급 선박(HRS) 우선점검을 통해 국제규정 위반 선박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시 아·태 협의체(Tokyo MOU) 불량국가 및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우선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부실선박 중점관리 ○ 국내 노후선박에 대한 해사안전 지도·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대상 선정 시,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과 위험화물 운반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 우선점검 - 사고발생, 지도·감독 결과 주요 결함이 다수 발견된 선박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개선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박(HRS)에 대한 차등적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기국, 부실선급(세계선급연합회 미입급) 및 선령 30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출항정지 이력이 있는 선박 강력제재 ○ 결함선박 감시체제 구축 등 불특정 위험선박 강화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항만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함신고 선박은 타 선박에 우선하여 점검 및 점검 불가 시 해당 청에 사실 통보 ○ 항만국통제관 점검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청 항만국통제관과의 합동점검과 항만국통제관 워크숍 참석, 외국 교환근무 등을 통해 우리 청 검사관의 점검역량 향상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 선급 및 점검이력 등을 감안, 고위험 선박 우선·집중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분기별 집중점검(D-CIC), 외국적선 사고 예방을 통한 관할항만·해역 안전성 확보

1-4 미래형 해사안전관리체계 준비

1-4-1 해사안전관리 전문 자격제도 도입 및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해운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해기 경력만으로 고용되고 있어, 역량검증, 재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22.1.4.공포)

* 의원발의('20.9월) → 공청회('21.6월)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의결('21.12월)

□ '22년 추진계획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시행·운영기반 마련

- (하위법령 마련)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시험과목(일부과목 면제 기준 포함), 합격기준, 행정처분(정지·취소) 기준 등 마련*

*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5월) → 규제·법제심사(~10월) → 차관·국무회의(~12월)

- (교육과정·교재개발) 안전관리(책임)자 주기적 의무교육,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자격시험 대체 교육·평가과정 및 교재개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3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 및 자격제도 홍보 - 선박(내항선)의 노후화 등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자격제도 신설 도입·시행 - 내항선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체제 심사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집중 점검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홍보를 위한 안전관리체제 설명회 개최(하반기) 유관기관 간 비상체제 유지와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선박) 국제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선박 적용을 위한 국가 제도기반은 미흡
 - 신기술의 선박 적용과 상용화에 필수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국산 친환경선박·기자재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
- *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선박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동법 제2조)
- (자율운항선박) '25년 자율운항선박 도입 예상됨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개발 필요

□ '22년 추진계획

- ◆ 국산 친환경 신기술의 조속한 선박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국내 안전성 시험·검사기준 조기 확보
- ◆ 자율운항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안전관리 기준 개발

- (친환경선박) 국가 친환경선박 100대 기술 중 유망기술*에 대한 '22년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선박적용을 위한 국내기준** 마련
 - * 암모니아 혼소엔진, 하이브리드, 선박용 연료전지 등 '21년 용역을 통해 마련
 - ** 「암모니아·하이브리드 선박」 잠정기준 마련 등을 위한 기술자문단 운영·지원
-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추진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선박·기자재 안전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450백만원
자율운항선박 법령 마련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원격 선박검사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기준마련 및 국제기구의 논의 주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검사의 필요성이 인정('21.10)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기술기준 등 국제적인 논의가 개시(IMO 104차 MSC)

- 심사품질 제고로 국적선박의 해양사고 및 PSC 출항정지 예방

□ '22년 추진계획

◆ 원격 선박검사·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의 장비·인력 최소기준 마련 및 국제논의 대응

◆ 원활한 원격검사 이행을 위한 검사기준 마련 및 심사기법 개발

- (원격검사 국제논의 대응) 원격 선박검사 성과 및 국제해사기구 논의 결과 분석(~6월) → 주요국 관련규정 및 기술동향 조사·분석(~8월) → 원격검사 등 장비·인력 기준 및 법령개정안 마련(~10월)

- (검사기준 마련) 국제선급협회(IACS) 공통지침(개발 중)을 반영하여 선급규정 개발 추진(~'23.上)

- (심사품질 제고) 선박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해운 및 선박 운항 심사기법(가이드라인)” 개발

*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 7장에서 요구하는 '선박운항 필수업무(Key Shipboard Operation)'에 대한 정의, 상세 심사지침 등 포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검사 및 심사체계 첨단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100백만원
원격검사 기준마련	한국선급 (기관규칙개발팀)	070-8799-8792	-
심사품질 제고	한국선급 (협약심사팀)	070-8799-8342	-

□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미래형 선박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증서발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증서 발급 중*

*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의한 36종의 증서에 대해 발급근거 마련, 정부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전자증서발급시스템 구축·운영 중

- (필요성) 우리나라의 발달된 IT 기술과 국제적인 디지털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증서 발급체계 지속 확대 구축·추진 필요

□ '22년 추진계획

◆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자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증서발급체계 확대구축 추진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개정(~4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발급시스템 구축(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검사 전자증서 발급체계 확대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044-330-2266	45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KOMSA Code」 개발 계획('21.3.25)에 따라 지속 개발 필요

<1단계('21년)>	<2단계('22년~'24년)>	<3단계('25년~)>
- 'Code' 개념·구성·범위·관리 정립(전문기관 용역 포함) - 'Code' 개발 시작	- 'Code' 개발 계속 - 'Code' 개발시 식별된 문제점 자료화 및 개발과정 피드백	- 'Code' 관리(문제점 보완, 전산연계 등), 활용 및 정책제안 기능 수행

- 2021년도 「KOMSA Code」 기술검토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필요

* 'Code' 개발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 필요

□ '22년 추진계획

◆ 법령·고시·지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기준화한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체 검사규정(KOMSA Code) 지속개발

○ '22년도 'Code'화 할 법령·고시·지침 등 고려, 맞춤형 작업반 구성

구 분	'21년	'22년
1팀 : 검사기준실장(PM) & 실무자	1개 기준 / 6명	2개 기준 / 10명
2팀 : 검사관리실장(PM) & 실무자	-	2개 기준 / 10명
3팀 : 도면승인실장(PM) & 실무자	1개 기준 / 6명	2개 기준 / 10명

- 기술검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민·관·공 전문가로 구성) 신설

작업반	전문위원회(신설)	기술검토위원회
'Code' 제·개정	'Code' 현장 적용성 검토 자문기구	'Code' 심의·의결기구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KOMSA Code」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044-330-2271	8.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건조기술 발전 및 친환경선박 수요증가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박검사원 전문기술 교육 필요

- 선박검사원 전문기술력 확보를 통한 선박검사 실효성 강화

- * 「친환경선박법」시행('21.1.1)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선박검사업무 증가 예상

□ '22년 추진계획

◆ 정부대행검사의 품질향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박검사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대상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추진

- 선박검사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 검사원 전공 분야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 친환경선박(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설계, 구조해석, 국제협약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검사원 교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044-330-2263	32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의 원격화를 적극 도입하여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심사지연 발생 최소화(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회의, 전자문서 활용하여 원격심사 시행하고 사후 선박방문 및 현장확인을 전제로 안전관리증서 교부 ○ 이전 심사 및 지도·감독이력, 사고발생 유무 확인하여 부적합사항 내역·사고 이력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 심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심사 확대하되, 실시간 영상, 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실시 후 식별된 기한부 시정을 요구하는 결함사항은 선박의 요청에 따라 항만국통제관이 원격으로 확인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협의회 항만국통제 점검 절차에 따라 결함 시정을 증빙하는 전자적 증거를 제공받은 경우 선박에 재방문 없이 시정여부를 검증 ○ 임시항해검사로 시운전선박 안전운항 저해요소 식별 및 항행안전 확보, 시운전 금지해역 준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연1회) ○ 비대면 선박검사·심사 도입 및 체계적 관리 시행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원격점검 실시(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 및 표준위험 선박의 서류점검은 가급적 원격 시행, 필요시 현장 상세점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원스톱 선박검사·심사 및 관리체계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검사, 비대면 디지털 항만국통제 및 인증심사 추진 ○ 첨단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 및 심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무인로봇 등을 이용한 밀폐구역 및 사각지대 검사 추진

1-5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운시황의 호황으로 노후선박의 해체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적합한 노후선 등의 입항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신조선이 대거 인도되는 '23년부터 노후선해체 증가전망(해진공, '21.3분기 보고서)

- 단기운용·해체예정 노후선은 선주의 안전투자가 미흡하여 국내 입항시 해양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에 대한 점검강화로 우리 항만·해역의 안전확보

- (우선점검) 안전관리 부실선박(HRS: High Risk Ship) 위주로 점검하되, 불량국가*(Black List), 고선령(30년 이상) 선박은 입항시 우선점검 실시

* T-MOU는 토고, 시에라리온, 몽골, 자메이카, 팔라우, 키리바티를 불량국가로 분류

- (점검방법) 전반적으로 안전수준이 취약한 안전관리 부실선박은 2인1조 상세점검 원칙, 선원 훈련·업무숙련도 등 확인 시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기준미달 외국적선박 안전점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328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21년 해운경제, 컨테이너 선복량 등 컨테이너 주요 지표가 회복 추세에 있는 가운데 국내 '컨' 물동량은 지속적 증가 예상
- (필요성)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및 비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필요
 -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위험물 '컨'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으로 비위험물 '컨'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우려가 높음

* ('21.4) 평택항 '컨' 작업자 사망사고, ('21.12) 부산항 '컨' 부품 낙하로 작업자 경부상 등

□ '22년 추진계획

◆ 수출입 위험물 '컨' 점검 뿐만 아니라, 미신고된 위험물 '컨', 플랫폼 '컨'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실시

- (위험물 '컨' 점검) 최근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은 '17년 대비 수입 10.6%, 수출 8.0% 증가됨에 따라 지속 안전관리 강화(연중)
 - 위험물 '컨'점검의 정밀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목표량은 7천TEU로 설정, ①개방점검과 ②수출 '컨' 점검량을 늘려 안전관리 강화
- * ① (개방점검) 목표량을 515TEU('21년) → 554TEU('22년)로 7.6% 늘리고 수납 및 고박 불량, 용기 훼손 등 위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
- ② (수출위험물'컨') 목표량을 230TEU('21년) → 299TEU('22년)로 30% 늘려 화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위험물에 대한 검증 강화
- (플랫폼 '컨' 점검) 국내 항만에 적치되어 있는 플랫폼 '컨' 대상 2회(상·하반기 각 1회) 집중점검 및 필요시 여건에 따른 추가점검 실시
- * 11개 지방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터미널운영사 등으로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실시, 중대결함 등 식별 시 시정조치 완료 전 사용금지 등 조치 예정

- (미신고 수입위험물 '컨') 주로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미신고 수입위험물 '컨'의 선박운송 근절을 위해 관세청과 합동점검 추진
- 우리부-관세청 간 구축된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주요 항만(부산·인천)에 미신고로 의심되는 '컨'을 식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 관세청의 수입신고정보 중 위험물 항목(189개) 정보를 연계하여 PORT-MIS 내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 시스템' 구축·운영 중('20.6)
- 이 외, 지방청에서 자체 연 2회 집중점검 실시

< 합동 및 자체점검일정 >

지방청	집중점검시기	비고
부산	3월 / 9월	관세청 합동점검(연1회)
인천	6월 / 10월	관세청 합동점검(연1회)
여수	2월 / 8월	-
울산	7월 / 11월	-
평택	7월 / 11월	-
포항	6월 / 11월	-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컨테이너 안전관리 고도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11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 바다를 활용한 여가범위 확대로 요트투어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 사업** 확장세

* 요트·보트 등 대여 또는 운항대행('21년말 201개사 256척)

** 수중레저활동자를 태워서 활동구역 까지 운송('21년말 280개사 378척)

- 비어선 사고 중 레저기구 사고비율*이 높고,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관리강화 기조에 따른 마리나·수중레저사업 분야 안전관리 강화

* '20년 비어선 해양사고 1,204건 중 647건(53.7% 차지), 그 중 고장사고 352건

□ '22년 추진계획

◆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안전관리 제도이행 강화

- (마리나) 봄·가을철 운항증가 대비 안전점검·교육 시행, 법제도 강화, 마리나선박 정비업·정비사 신설('22.2)에 따른 제도시행 홍보
 - 권역 별 관계기관 합동점검, 출항전 사업자 안전점검, 구명조끼 착용의무 신설 등 법령 개정, 정비업 제도시행 설명회 개최
-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실효성 확보, 사업자 안전점검·교육 추진
 - 수중레저분야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종사자 간담회를 통한 안전점검 제도 등 수중레저법 개정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마리나업·수중레저사업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7	-

□ 배경 및 필요성

- FRP 어선에서 화재 발생의 경우 빠른 인지 및 초기진압 실패*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 필요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58조 등에 따라 既 설치된 무인기관실용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초기진화 한계점 발견(화재감지온도 등)

□ '22년 추진계획

◆ 총톤수 10톤 미만 FRP 어선 60척 대상, 개선형 무인기관실 자동 확산 소화기 무상보급 추진

- (설치대상) 선령 5년 이상, 5~10톤급 연안복합·자망어선 중 60척

* 최근 5년간('16~'20년) 어선 화재사고 발생 460척 중 선령 5년 이상 89.7%(413척) 차지, 보급사업 시행 前 홍보를 통한 사전신청 접수(60척)

- (설치기간) '22년 6월 ~ 12월 추진 豫(형식승인 물품 공급여건 고려)

- (보급물품) 개선형(공단 주관 개발, 특허취득) 무인기관실용 자동확산 소화기 1EA + 원격수동작동 제어반 1EA

* 既 보급된 화재탐지 경보장치(연동형)와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치, 화재사고 예방효과 극대화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시스템 보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실)	044-330-2447	40백만원 (60척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위험물질별 법률/감독 주체 다양성으로 관리 어려움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선박구조 이해도 부족

□ '21년 추진계획

◆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위험물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자 및 유관기관 대상 교육여건 확보

- 위험물 종사자 안전교육
 - OCIMF 검사관 초청 위험물 터미널 내 안전교육 시행
 - 국제안전관리가이드(ISGOTT) 적용 사례 및 항내 위험물 사고 우수대응 사례 공유
- 선종별 구조·소방설비 활용 화재대응 안전동영상 제작
 - 신속한 사고선박 진입 및 화재진압 지원을 위한 선종별(벌크, 액체, 컨테이너 등) 선박 구조, 소화설비 안전교육 영상
- 구조대원 선박화재 진압 및 인력구조 능력 향상 교육
 - 울산지역 소방, 해경 구조대원 대상 선박 구조 및 소방설비 교육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상화학사고 예방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강화 (위험물 안전관리 등)	울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2-228-5435	15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분기별 상시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에 위험물 품목신고 되었으나 우리청에는 미신고된 의심위험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 실시 * 우리 청(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부산세관, 한국위험물검사원 ○ 부산항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 불시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 해당 소유자(HMM 등 17개사)의 부산항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에 대한 주기적 불시점검 및 안전관리 여부 점검 실시 ○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컨테이너 종사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대상 세미나 개최를 통한 종사자 역량 제고 및 사고 예방 증진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확대(수입 →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 및 미신고 위험물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신고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연계, 필요시 관세청 합동 개방검사 실시 ○ 안전관리가 미흡한 편의치적선 등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여 소화·구명·오염 방지 설비 등 중점 점검으로 기준미달선 근절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위험물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 하역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점검강화 추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액체 위험물 해상환적 포함) 자체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및 비상시 대응체계,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항 점검 ○ 플랫폼 '컨', 탱크 '컨' 등 특수'컨'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사업자와 합동 점검 추진하여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 강화 ○ 미신고 수입 위험물'컨'의 선박운송 근절을 위해 관세청 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자체 집중점검 실시(2월, 8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적선박 선박점검체계 구축 및 안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선령(30년이상), 고위험등급 선박 및 안전관리 부실 기국·선급 선박을 최우선 점검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예정 - 결함 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화재, 항해안전, 구명설비, 비상기기)에 대한 분기별 자체 집중점검 시행하고 하반기 STCW 협약 이행 여부 집중점검 실시 ○ 관할 항만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항만 내 장기적치 컨테이너에 대한 불시점검(반기별 1회) 및 안전관리 여부 지속 모니터링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수입위험물 '컨' 및 플랫폼 '컨' 등 종류별 점검 - 관세청에 신고하였으나 우리부에는 위험물 신고(PORT-MIS)를 하지 않은 의심 위험화물 대상 점검(7월, 11월) - 항만 내 적치되어 있는 접이식 플랫폼 '컨' 및 현장 여건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등 종류별 집중점검 실시(6월, 10월)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안전운송을 위해 우리 청 자체 점검계획 수립·이행 - 컨테이너 안전관리 사업자('컨'소유자) 지도·감독 및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 등 행정처분 강화 ○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안전점검 강화 - 고선령(30년 이상), 아·태지역 고위험등급 선박 및 안전관리 부실 기국·선급 소속 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중점관리 시행(초기점검 및 국제공조 강화 등) - 고위험선박 선별 및 점검절차 통한 현장점검 실효성 확대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선령, 선종/톤수, 점검이력 등 기반 위험도 산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항 내 취급되는 위험물의 현황 및 종류별 특성과 위험도, 취급방법에 따른 안전작업요령 등을 조사 후 데이터 구축 ○ 위험물 반입신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반입신고 누락 현황 및 반입제한(화약류, 독물류,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 등의 반입 여부 확인 ○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한 군산·장항항 위해요소 개선 및 발굴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적 선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육상감시원 상시배치 및 방역지침 철저 이행 조건부 기항 허가 ○ 해상부유물 및 불법양식 시설 등 통항안전 위해요소 제거 - 청항선, 관공선을 통하여 해상부유물 상시 확인 및 수거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율 상위국가에서 수입되는 고위험화물(인화성, 부식성 등) 컨테이너를 우선 점검하여 점검 효율성 제고 ○ 표찰부착 및 화물 고박상태 등 주요 식별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해상교통안전 여건 및 해양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고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집중 ○ 항만국통제 점검 시 결함지적률이 높은 4대 취약분야(화재, 항해안전, 구명설비, 비상기기)에 대한 집중점검, 외국적선 사고 예방을 통한 우리항만해역 안전성 확보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운반선, 산적화물선 등 다양한 외국적 선종이 입항하며, 점검 내실화를 위한 2인1조 점검체계 유지 및 선종별 맞춤형 점검실시 ○ 선령 20년 초과 및 도래 예정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관리 시행 - 해사안전감독관의 특별점검과 불시점검 강화, 선체 및 주요설비의 노후상태에 대한 집중점검 및 승무원 대상 안전교육 병행

□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책임기관으로서 재난상황의 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여객선 운항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 '22년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안전 모니터링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

- (24시간 센터운영) 야간항해* 대형 카페리 선박 안전관리 및 상황 대응능력 강화로 연안여객선의 체계적인 재난 상황관리체계 구축

* (인천-제주 항로 등 10항로 10척 야간 운항中)

- 인력 증원*(6월)이후 권역별 집중 모니터링 및 24시간 운영개시

* 상반기 신규 운항관리자 채용(6인) / 現 5인 → 총 11인

- (현장 모니터링 강화) 여객선 기항지 지능형CCTV 설치 및 지자체 보유 CCTV 연계 활용을 통한 현장 영상관제 모니터링 구현

- 운항관리자 미배치지역 운항 여객선의 상황 모니터링 강화*

* 기 구축된 지자체, 중앙부처 CCTV 연계 및 지능형CCTV 설치 확대 추진('21년 목포 6개소 설치 완료, '22년 완도,인천 등 12개소 설치 예정)

- (통신망 강화) VHF중계소 확대·연계 구축으로 동해권역 및 백령도 인근 연안 여객선 무선통신 감도불량 및 통신 두절 문제 해소

* '22년상 기능개선 1개소(진도) 신규 구축 4개소(백령도, 동해, 포항, 울릉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여객선 운항상황센터구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상황관리센터)	044-330-2673	-
지능형 CCTV 설치		044-330-2671	453백만원
VHF 중계소 구축		044-330-2672	27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목 신설 및 교육방법 개선사항 반영* 등 현장중심 교육 추진 필요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권한 과목 신설, 현장업무 지식·정보교류 기회 마련 등

□ '22년 추진계획

◆ 현장중심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

○ (교육일정/방식) 분기 1회(년 4회)/온라인 Live 교육, 현장교육 등

- 현장 대응능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목 및 현장중심 프로그램* 구성

* 안전관리 우수여객선 승선체험, 현장업무 지식·정보교류 Workshop 개최 및 안전관리 정부기관 방문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제도실)	044-330-2374	19백만원 (안전관리책임자 약 100명 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관리업무 강화

- 도서지역 및 운항관리자 미배치지역 파견지 사무소 신설 추진(425백만원)
 - (위도·사랑도) 섬 지역 파견지운항관리 사무소 인력배치 운영(상반기)
 - (금오도, 청산도) 사무소 확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
 - * 센터·파견지: ('21)12센터·35파견지 총 47개소 → ('21)12센터·37파견지 총 49개소
- 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체계 마련
 - (단말기 보급지원) 2차(~'22.6.31) 464척, 설치 시 1척당 180만원 지원(국비 835백만원)
 - (연계체계 구축) 운항상황관리센터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바다내비 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 추진(~'23)
-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연안여객선 교통약자용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추진
 -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 46척 대상 시설 설치비용의 50% 지원(국비 1,012백만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파견지운영)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교통약자 시설설치 지원) (바다내비 시스템 연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실)	044-330-2371	752백만원 (425백만원) (835백만원, 국비) (1,012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잠정)

□ 추진배경

- '17.10월 홍진호 북한 나포사고 이후, 위치 미확인 어선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연근해 전 해역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추진('18.1~)

*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 장거리위치발신장치 개발·보급, 안전모니터링시스템

□ 추진계획

◆ 어선의 안전한 항행, 조업을 위해 디지털 중단파 기지국 구축, 장거리 위치발신기기 보급,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 (의무설치 대상업종 확대) 「어선설비기준」 등에 따른 '21년 D-MF/HF 의무설치 대상업종의 어선검사 기한을 5개월 연장(~5월)
- (장비 보급) '21년 근해통발 등 대상어선(700척) 보급 완료('21.12) 및 '22~'23년 근해자망 등 대상어선 보급·설치 추진('22/700척, '23/600척)
- ('22년 추진) '20~'21년 설치어선(800척) 무선국허가·검사, 어선검사 추진(5월) 및 '22년 대상어선(700척) 보급 추진(~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연근해위치 확인시스템 구축 (해상통신망 운영관리) (장거리 위치발신기기보급) (안전모니터링시스템유지보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3	3,553백만원 1,022백만원(700척) 1,960백만원(약 700대) 571백만원 (1-3-2 중복)

□ 배경 및 필요성

- 명절 연휴, 봄 행락철, 하계 휴가철 등 여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해 다중이용선박(연안여객선·낚시어선) 특별점검 등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점검 실시

◆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전문교육 내실화

-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설날·하계·추석) 및 봄 행락철(5.1 기준), 겨울철(12.1 기준)을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관련근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4조(운항관리자 점검) 3. 특별점검

- (점검반)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 해경서, 지자체, 검사기관(KOMSA, KR), 국민안전감독관 등
- (조치계획) 점검결과 결함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기한부시정 조치하고 중대결함 지적선박은 출항정지

- (낚시어선) 관계기관(해경, 수협, KOMSA 등) 합동 점검을 통해 기관·선체·통신설비 등에 대한 점검 내실화

* 점검대상을 구체화로 중복점검 최소화, 점검 이력관리 시스템화(낚시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출항 전 자체 점검표 제작·배포 자체 점검·정비 강화 등

- (전문교육) 항법교육, 지역별 특성, 낚시어선 출항 전 자체점검 방법 등을 반영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낚시전문교육)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1,081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확인,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정착 및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원 강화 ○ 여객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 및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의 점검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항로별 승선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 계절별 및 태풍철 대비 등 맞춤형 집중점검 4회 - 휴가철 등 특별수송 시기에 맞는 합동 특별점검 실시(5회) - 운항관리자 정기점검(연 4회, 분기별)을 통한 출항전 안전점검, 노후선 특별 점검 등의 점검실태 확인 강화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여객선, 사업장 및 운항관리자 지도·감독(18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리여객선(2척), 일반여객선(5척), 쾌속선별(1척) 정기·수시 지도감독 실시 및 타 청 교차 지도·감독을 통한 합동점검 - 내항여객선(총 8척) 대상 시기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5회) ○ 내항화물선·사업장 지도감독(116회) 및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따른 사업장·선박의 이행도 중점확인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점 점검항목 등 맞춤형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점검반 편성('22년 상반기) ○ 선령 20년 이상 및 사고다발 예·부선, 통선 등 항내 운항선박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 추진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감독 강화, 방선 시 선체·기관·주요설비 집중 점검 및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 관리 이행 확인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취약선박(노후선박·모래운반선·압항예부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및 지도·감독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종·시기별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 시연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추진 ○ 계절별 및 태풍철 대비 등 맞춤형 집중점검(4회) 및 휴가철 등 특별수송 시기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자 정기점검(연 4회, 분기별)을 통한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만 내 운항중인 급수선·통선·예선·기타선 등의 소형선박 현황 파악 후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 시행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선 안전 관련 구명·소화설비에 대한 집중 특별점검 및 선원·안전관리사 대상 방선 안전교육 시행 ○ 연안여객선 선원·선사 대상 운항관리규정 숙지여부,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지도·감독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회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중점 안전관리 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립·전파 ○ 추락사고 예방분야 심사 강화, 위험물운반선·카페리화물선 중점관리 등 안전관리체제 적용 선박 인증심사 실시(수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선종별(차도선, 쾌속선, 카페리), 명절 및 휴가철 대비 특별점검을 통한 해양선박사고 사전예방 ○ 여객선 안전설비시연 및 비상대응 훈련·교육을 연7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해양종사자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인명사고 예방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월례점검, 특별점검, 출항 전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병행 시행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국제여객선 정기점검 및 비상대응훈련 실시 - 국제여객선 비상대응체계 강화 및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소화·퇴선 비상대응훈련 실시 * 정기점검(상·하반기/3월·9월), 비상대응훈련(5월) / 자옥란 등 총 5척 ○ 평택·당진항 가스·화학제품 전용터미널에 입출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의 승무원과 이용객 대상으로 캠페인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 및 계도 - 안전설비 시연회,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출항 전 안전점검 등 안전교육, 비상대응훈련 실시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 ○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 우선점검을 통해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수산분야 재난특성상 통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 요구

-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및 범부처 재난관리 협력체계 강화 필요
-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핵심기능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상황관리 역량 강화 필요

* 매뉴얼 현황관리, 정기점검, 담당자 역량강화 및 종합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22년 추진계획

◆ 해양선박사고 전주기 매뉴얼 관리체계화 및 범부처 해양수산 재난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체계적 해양사고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도모

○ (매뉴얼 관리) 재난매뉴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전주기 종합개선계획 마련·운영 추진

- 매뉴얼의 연간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체계적인 매뉴얼의 현황관리, 정기점검, 담당자 교육·훈련 및 평가·환류 추진
- 매뉴얼 상호 연계성 강화, 승인체계 보완 등을 포함한 전주기 개선 계획 마련을 통해 해양 선박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추진

○ (협력체계 강화) 국가핵심기반 보호 세부계획 수립·이행, 재난관리 통합점검 상황전파 지원체계 개선 등 범부처 재난관리 협력체계 확대

-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상*에 대한 위험 평가·분석을 통한 중점위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피해 예방·대비·대응 대책 수립

* 부산, 인천, 광양, 마산, 울산, 동해.묵호, 군산, 목포, 포항, 평택.당진, 대산, 경인항

- 재난관리 통합점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재난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부처간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위해 공공서비스(선박 운항정보 등) 개방확대, AIS 기지국 비상시설 보완 등 추진
 - 상황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해양수산 통합업무안내서 마련, 상황관리자원* 매뉴얼 최신화 및 주기적인 상황요원 교육·현장방문 실시
- * ①상황관리시스템(재난사고 발생 시 상황공유를 위한 문자전파·관리), ②선박모니터링 시스템(VMS)(실시간 수신된 선박 위치를 전자해도 화면상에 표시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통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2 044-200-5853 044-200-5857	2,579백만원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853백만원)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고도화 및 유지보수)			(1,726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표준·실무)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여름철(태풍, 호우 등), 겨울철(폭설, 한파 등) 재난예방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계절별(해빙기·여름·겨울철) 재해위험시설 등 사전점검 ○ 안전한국훈련 중 해양수산부 주관재난에 대하여 토론·현장 훈련 시행 및 재난담당자 대상 재난안전 전문교육 등 주기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및 조수 대비 위험물 취급업체, 유관기관 및 어촌계 등과 신속한 전파체계(문자 전송서비스) 구축·운영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사고 수습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 활동의 정기적 통합 점검체계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매뉴얼 주기적 점검 ○ 자체 매뉴얼 점검을 통한 사고대응 적절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정에 맞는 대응체계로 신속·정확 사고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유형별 상위 매뉴얼(표준·실무)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여름철(태풍, 호우 등), 겨울철(폭설, 한파 등) 재난예방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계절별(해빙기·여름·겨울철) 재해위험시설 등 사전점검 ○ 해양수산부 주관재난에 대하여 토론·현장 훈련 시행 및 재난안전담당자 대상 재난안전 전문교육 등 주기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및 조수 대비 위험물 취급업체, 유관기관 및 어촌계 등과 신속한 전파체계(문자 전송서비스)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해상순찰 강화(연중) 및 항만 내 불법행위(불법어로, 선박 미허가 수리 등) 집중 단속·계도 시행(연2회)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화재, 표류 등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별 임무 및 역할 숙달 훈련을 통한 실전대응 역량 강화(반기별 1회)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개인 대응수칙 현행화 및 시의적절한 매뉴얼 개정(표준·실무매뉴얼 개정 반영, 비상연락망 최신화 등) 등으로 상황대응력 확보 ○ 교통·수송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항만방호계획 포함) 수립·이행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강원지역 항만 중 통항량이 가장 빈번한 동해·묵호항의 해상여건을 고려한 해상안전 중점관리대책 수립·추진(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해상순찰 강화(연중) 및 항만 내 불법행위(불법어로, 선박 미허가 수리 등) 집중 단속·계도 시행(연2회) ○ '동해항 신항만 공사사업' 관련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안전협의체 운영 정례화(반기별, 긴급 시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입출항선박 해양사고예방 안전협의체 반기별 개최(긴급사항의 경우 수시 개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7개소) 일제점검(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안전관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재교육 이수 현황, 취급화물 등 일치여부 조사 후 적법하게 조치예정 ○ 무역항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실시(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하역시설(부두, 돌핀 등) 현장점검, 위험물 하역 또는 급유행위 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선박수리 실시 여부 등 합동단속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현행화(상·하반기)를 통하여 최신화 유지, 비치된 해양사고 매뉴얼 관리상태 확인 및 최신화 유지 등 해양사고 전주기 매뉴얼 관리 ○ 해양사고 시 각 반별 임무 숙지상태 확인 및 개정사항 공유 등 지역사고 수습본부 각 반별 담당자 교육실시(상·하반기) ○ 항만시설·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 및 해양시설 등 사전 예방점검 등 자연재난(태풍,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재난 대응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프로그램화 ○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청 해양사고 예방 협의회」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2차사고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충남권역 해양 선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충남권역 해양 선박사고 예방 연구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청, 보령시청, 태안군청, 대전지방기상청, 보령·태안해양경찰서, 대산VTS, 해양교통안전공단(보령지사, 태안지사), 보령·태안 어선안전조업국 등

전략 2

탈탄소 · 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해사 신산업 선도국가 실현

-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확대시행 및 국제표준화지원단 운영, 해양디지털항로 실험역 검증체계 구축*, 해양 PNT 산업화 지원** 등

* 국제해양디지털항로 구축·운영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한·EU MOU 체결(9월)

** e-Loran 신규 송신국 1개소 구축, 센티미터급 시범서비스 제공(대산항, 12월~) 등

□ 친환경 기술 개발

-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기술개발* 추진, 선체 부착생물 제거·수거·처리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화** 추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시장 점유확대***

* 친환경선박 핵심·원천기술개발, 시험평가, 실증 및 보급, 국내외 표준화 등 추진 ('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

** PPR(4월) 및 CEPC(6월) 개최 시 아국 기술기준 의제 제출 및 논의 대응

*** 선사 등 대상으로 최신 국제동향 제공, 국내 제조사의 해외 진출 기반마련 등 지원

□ 미래형 선박전환 지원 확대

- (공공) 미래 친환경신기술을 공공선박에 우선 적용*, 지자체·공공기관 공공선박 담당자 기술자문 제공, 공공선박 표준운영·관리지침 마련·적용** 추진

* 해수부 관공선 30척 대상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지원(60억)

** 공공선박 설계·건조부터 운항·관리, 처분·사후활용까지 전주기 지침마련 →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3척에 우선적용 후 타부처·지자체 등 적용대상 확대 추진

- (민간) 국가인증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지원(60억, 5척), 노후선 폐선 및 친환경 외항선박 건조지원(205억, 16척),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금융 지원*

* (산은, 수은, 캄코, 해진공) 총 15억불 규모로 소진시까지 지원, 필요 시 확대 추진

□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 자율운항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선박 안전운영시스템, 사고대응 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안전기술 개발 지속 추진(12,671백만원)

2-1 해사 신산업 선도국가 실현

2-1-1 친환경선박·기자재산업 지원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선박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 중 → 신기술 상용화 등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필수

- 국산 친환경선박·기자재의 품질제고, 상용화 및 국제표준화 등 지원을 위한 ‘국가 인증제도’와 ‘국제표준화 지원단’ 운영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의 환경적 개선 효과, 기술적 난이도, 국산화 비율 등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예비)인증서를 통한 친환경등급 부여

□ '22년 추진계획

◆ 국산 친환경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시장선점 지원을 통해 친환경선박·기자재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인증제도) 인증서 발급 및 민간 지원사업*과 연계를 계속 추진하고, 인증대상을 친환경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방안 마련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60억원, 인증받은 내항선 대상 선가 최대 30% 지원

○ (지원단) 국내 유망기술 발굴, 국제표준화 전략수립 및 IMO 의제 제출 및 회의대응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도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선박·기자재산업 지원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18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인 바다내비 서비스('21.1~)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세대 전자해도 기반 항해 장비 개발 등 시장선점 추진
- 초단파 대역 데이터 교환 시스템(VDES*)에 대한 ITU 기술표준 완성('22년), IMO 협약 수용('24년) 및 국제적 시행 예정

* AIS(자동식별장치), ASM(해상메시지서비스), VDE(VHF데이터통신)로 구성

□ '22년 추진계획

- ◆ 자율운항 선박 등 차세대 선박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개발·국제표준화 및 국제 해양 디지털 항로 구축
- ◆ VDES 기반 해상무선 통신체계 및 시험검증 환경 개발 등 R&D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 국제 해양 디지털 항로 구축·운영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한·유럽 MOU 체결 추진(9월)
 -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23년도 신규예산(R&D) 확보 추진
- VDES 기반 해상무선 통신망 구현 및 시험검증 기술개발 등 R&D 사업 타당성 및 구체화를 위한 기획연구 수행
 - * (수행사/기간/계약금) 더브릿지전략컨설팅(주) / '21.10.14. ~ '22.4.12. / 48.5백만원
- VDES 통합 단말기 구현, 육상·해양·위성 연결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전국망 운영기술 개발 등 신규 R&D사업('23~'26년)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3	-
차세대 해양디지털통신(VDES) 기술개발		044-200-6239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차세대 해양디지털 통신기술 확보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e-Nav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 교통정보 빅 데이터 확보 및 디지털 해양교통정보서비스 핵심기술을 지속 개선 ○ 최적의 디지털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운항자에게 사고, 기상 등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 경북지역본부 중심 해양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 VR 체험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시행(연 3회)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홍보 시행

□ 배경 및 필요성

- 위성항법시스템(美GPS)의 PNT* 정보는 경제·사회·국방 등 국가의 모든 기반시설에 활용 중이며, 관련 산업시장의 성장·형성 견인

*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 해양분야 또한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자율운항선박 개발, 전파교란 증가 등으로 고정밀·고신뢰 PNT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

□ '22년 추진계획

◆ 선박의 안전항해와 자율운항 등 해양분야 4차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해양 PNT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 지원

- (서비스 제공)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핵심기술을 적용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신규 송신국(1개소) 구축(12월)
 - GPS 오차를 센티미터급(<5cm)으로 개선할 수 있는 초기 기술개발* 성과를 지상기반(LTE 등)으로 시범서비스(대산항) 제공(12월~)
- (산업화 지원) eLoran 수요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성능실증 추진(연중)
 - * 항법분야: 표지선, 항로표지측정선, 해경함정 등, 시각분야: MBC, 수자원공사 등
 - 해양 센티미터급 서비스가 다양한 4차 산업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KPS 인공위성 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측위정보산업 신시장 창출 (eLoran 신규송신국 구축)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80	25,441백만원 (3,300백만원) (5,798백만원) (16,343백만원)

2-2 친환경 기술 개발

2-2-2 친환경 연료별 사용기술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산업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을 위해 선박 배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필요
 - * 국제해사기구(18)는 '08년 대비 '50년 온실가스 50% 저감을 목표로 초기전략 수립
 - 현재 상용화된 저탄소선박 기술(LNG 추진선 등)만으로는 미래 온실가스규제 대응*이 어려워 무탄소선박 기술(수소·암모니아 등) 개발 필수
 - * 저탄소선박은 온실가스 약 15% 저감 → 무탄소선박 개발로 온실가스 50% 저감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전주기 기술개발)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육·해상 실증을 통해 최종 상용화 달성 추진
 - * (총기간/연구비) '22~'31년 / 2,540억원(해수부 712억원**, 산업부 1,223억원 민간 605억원)
 - ** '22년 예산 68.33억원 확보 / '23~'31년 예산은 매년 기재부와 예산 협의·확보 필요
 - (해수부) 실험단계 기술을 융합·고도화하여 시제품 제작, 연안선박 실증 및 법제도 마련 등 상용화 달성(712억원)
 - (산업부) 주로 대형 선박용 무탄소 연료 추진시스템(암모니아 내연기관, 연료전지 등) 원천기술 개발(1,223억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6,833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2	3,357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전지·배터리 등 친환경 선박 추진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선박 구축 및 운영데이터 확보를 통한 친환경 연료기술의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친환경 연료추진연구본부 등 설립 ○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을 통한 친환경 선박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전기추진차도선(K1호) 건조완료('22년) 및 상용화 예정('23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부적격 선박 출항통제

□ 배경 및 필요성

- 선체부착생물 제거 및 선저 청소 중 산업잠수사 사망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및 기준 마련

□ '22년 추진계획

◆ 선진화된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21~'25) 지속 추진, 아국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여론 주도 및 국제포럼 개최

- (연구개발 추진)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사업*(R&D)」 추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 선체부착생물 제거·수거·처리 및 위해성 평가기법 등 기술개발('21~'25, 281억원)

- (국제여론 주도) IMO회의체(PPR, MEPC)의 선체부착생물 관련 기준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국제기준화 유도 및 선점기회 마련

* 제9차 PPR(4월) 및 MEPC(6월) 개최 시 선체부착생물 기준 관련 논의 시 적극 대응

- (국제포럼 개최) 국제 기술동향 파악 및 우리기술 홍보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로 국제여론 주도 및 지지세력 확보(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4,97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 및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대외 신뢰성 확보

□ '22년 추진계획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선사 지원, 시험·교육 품질제고 추진

- (국제포럼 개최) 선사 등 종사자에게 최신 국제 동향을 제공하고 국내 제조사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10월)
- (선사지원) 경험축적기* 이후 강화되는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선사대상 설명회 개최 및 선박평형수 표본 검사 지원(2월~)
-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초기 자료수집, 분석 등을 위한 시범운용 기간('18~'22下)
- (시험·교육 품질제고) 독립·형식승인시험기관(9개), 지정교육기관(3개)의 지도·감독을 통해 형식승인시험 신뢰도 및 교육품질 제고(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고도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250백만원

2-3 미래형 선박 전환 지원 확대

2-3-1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부문에 친환경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관련기술 상용화 및 운영기반 구축 등 민간보급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필요
- 현재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전환 중이나, 타부처,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국가 전체로 확산 추진

* 관련 기술·경험·예산 부족 및 기관별 관공선 자체건조·운영으로 어려움 호소

□ '22년 추진계획

◆ 미래 신기술을 공공부문 선박에 우선 도입하여 민간부문 확산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발판 마련

- (개조지원) 선령이 낮아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기존 관공선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친환경전환 추진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선박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

- (기술자문) 정부·지자체 등에 선박별 운항조건을 고려한 친환경 기술 선정, 전환지침 마련 등 기술적 자문 제공

- (운영지침) 공공선박 전주기*를 고려한 표준운영·관리지침 마련·적용하고, 향후 타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 확대** 추진

* 공공선박 설계·건조부터 운항·관리, 처분·사후활용까지 전주기에 대한 지침 마련

**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3척에 우선 적용 후 타부처·지자체 등 적용대상 확대 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6,0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순찰선 푸르미1호(강화플라스틱선) 대체건조('22.5월~'23.12월)- 하이브리드(배터리+경유) 또는 배기가스저감장치(DPF) 탑재 주기관 중 선박 톤수 및 선형 등을 고려·선정하고 건조 추진* (설계) '22.1월~'22.7월 → (주요장비 발주) '22.4월 → (건조) '22.8월~'23.8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 항만순찰선 제조·구매 사업 추진('22.5월 준공 예정)- 46톤급 알루미늄 재질의 워터제트 추진방식, 하이브리드 선박(전기+디젤)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건조 기본방침 결정에 따른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10월 건조 추진- 40톤급 알루미늄 재질의 워터제트 추진방식, 하이브리드 선박○ 선박건조 준공 : '23.12월 예정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관공선 및 국고여객선 도입- 선박용 배출저감설비 설치 및 수소, 암모니아, LNG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한 선박도입을 통해 선박·항만 미세먼지 저감- 낙도보조항로 국고여객선 선령 20년 도래에 따른 섬사랑5호('22~'23년) 및 섬사랑6호('23~'24년) 대체 건조시 친환경 설비도입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거리 및 북한 접경지역까지 정비할 수 있는 규모로 건조(부표정비선)- 선박제원(예정) <table><tr><th>총톤수</th><th>최대속력</th><th>전장</th><th>폭</th><th>흘수</th><th>주기관</th><th>승무원</th></tr><tr><td>900톤</td><td>15노트</td><td>71m</td><td>13m</td><td>4.3m</td><td>2,500PS×2대</td><td>15명</td></tr></table>	총톤수	최대속력	전장	폭	흘수	주기관	승무원	900톤	15노트	71m	13m	4.3m	2,500PS×2대	15명
총톤수	최대속력	전장	폭	흘수	주기관	승무원									
900톤	15노트	71m	13m	4.3m	2,500PS×2대	15명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순찰선(한우리호) 노후화 및 내구연한('97년 건조)으로 인해 대체선박 추진, '22.10월 건조하여 '23.9월 준공예정- 선령 '25년을 대체 기준으로 친환경 관공선으로 단계적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시장 패러다임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중이며, 現시점이 미래시장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

* '25년 기준, 전 세계 신규건조 선박 중 LNG 추진선 51% 차지 전망(출처: Clarkson)

-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 Ship-K) 기본계획('20.12.) 이행 및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천

*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 등

- 국내 선사는 가격상승(30%↑), 연료공급 시설부족 등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소극적이므로 정부지원을 통한 자발적 전환 유인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친환경선박 건조·개조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국적선사의 원활한 미래형 선박 전환 촉진

- (내항선박)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을 건조하는 사업자에 선박 건조가격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추진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21~) / 60억원 / 5척

- (외항선박 금융지원) 노후선을 폐선하고 친환경 외항선 신조 시 보조금* 지급,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국적선사의 신조확대 및 국내 조선사의 일감창출 지원

* '22년 예산 205.3억원 / 16척 친환경 외항선박 전환 목표 / 보조율 최대 10%

** (산은, 수은, 캄코, 해진공) 총 15억불 규모로 소진시까지 지원, 필요시 확대 가능

-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세제특례* 운영('05~)

*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

- 선박금융 관련 신규 세제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 예타 대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민간부문 미래기술 적용을 위한 금융지원 (내항선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6,000백만원 (5척)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금융 프로그램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7	총 15억불 규모 (소진시까지)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20,500백만원 (16척)
세제특례 제도 운영		044-200-5713	-
신규 세제특례 도입 검토		044-200-5720	-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설비와 디지털 기술을 갖춘 항만 인프라 구축

- 친환경선박의 안정적인 운항 지원을 위해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시설 및 선박 확충 등 공급망 구축

* LNG벙커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시설 항만기본계획 반영('20.12, 5개 항만)

□ '22년 추진계획

◆ LNG 선박 보급 확대 등에 대비하여 주요항만에 LNG 벙커링 단계적 구축

○ 울산항 LNG벙커링 설치사업* 건설 및 부산항 LNG벙커링**,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벙커링 셔틀용 접안시설 민자 유치 추진

* 울산항 LNG벙커링 터미널('24.3 준공)

** 부산항 LNG벙커링 터미널 민자 유치 추진(~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8 044-200-5919	-

□ 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항만(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감시·탐지 장비의 첨단화(스마트) 필요
- 스마트(무인화)항만 변화 흐름에 따른 AI 감시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스마트 장비를 이용한 현장관리 및 작업자 안전보장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스마트화 장비 도입,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

- (부산항) 감시·탐지장비 기능보완 및 R&D 연계 신규장비 개발, 경비인력 웨어러블장비 도입을 통한 실시간 상황대응 역량 강화
- (울산항) 야간 선박 항행 및 이·접안 시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탈착식 모서리보호장치(LED 인식등 탑재) 개발·도입 추진
- (여수광양항) 노후 CCTV 교체, 항만 보안감시셀너 이전 및 신축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첨단(스마트)장비 도입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051-999-8497	50백만원
특허기술(탈착식 모서리보호장치) 도입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63	60백만원
노후설비 교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보안실, 항만건설부)	061-797-4486~9 061-797-4523	3,232백만원

2-4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기술 개발

2-4-1

인공지능기반 항해시스템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무인운항기술의 해상도입 연구촉진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글로벌 수준 검·인증, 실증센터** 구축 및 국제표준 선도 등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 자율항해시스템, 자동기관시스템, 성능실증센터·검증, 운용기술·표준화 등 13개 기술

** 자율운항 기술을 검증·테스트 할 수 있는 성능실증센터 구축('21 ~, 울산)

- 자율운항시스템 및 원격제어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 (자율운항시스템) 비정상상태 운항 선박 충돌회피 알고리즘 검증, 자율운항서비스 플랫폼 시험선 설치 및 연동 시험
 - (원격제어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통합 성능시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성능시험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12,671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무인운항기술의 해상도입 연구촉진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선박 안전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 자율운항선박 선대 자산관리 프로토타입 SW개발, 선대 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선종별 DB 구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12,671백만원 (2-4-1 중복)

□ 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무인운항기술의 해상도입 연구촉진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사고대응시스템 기술 개발 추진

- 사고대응시스템 콘솔 UI개발, 콘솔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12,671백만원 (2-4-1 중복)

□ 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무인운항기술의 해상도입 연구촉진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사이버보안시스템 개발 추진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기본설계 및 SW설계, 시스템 테스트베드 설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12,671백만원 (2-4-1 중복)

전략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계획

□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 「교통망법*」 제정 추진, 연안해역(5개) 해상교통환경 평가, 해상교통 안전 진단제도 강화**, 항내운반선 및 일반화물선 출항통제 기준 개선 등

*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안전성 평가, 해상교통로 지정 및 위원회 설치 등

** 전주기 안전진단, 진단대상 확대, 대행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등

□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 해상풍력단지 주변수역 관리체계 마련*, 「해양시설 안전관리법(가칭)**」의 필요성·타당성 확인 및 입법 추진

* 풍력단지 조성 시 입지 적정성 등 고려하도록 고시(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정

** 보호수역 설정근거, 통항안전관리체제 수립·심사, 안전점검, 전담기관 지정 등

□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 바다내비 서비스 개선* 및 단말기 보급 지원(공공 148척, 민간 1,445척), VTS 시설 첨단화**, 해상기상부이 설치 확대 추진(6→11대) 등

* 최적항로서비스 확대(앱→단말기), 선박(어선선단 등) 간 그룹통화, 통신품질 개선 등

** 서해권 광역 VTS 구축, 고성능 레이더 설치, 음주운항 자동탐지기술 개발 등

□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 국제기구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차세대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고정밀·고신뢰 항법체계 구축, 해사정보공유플랫폼(MCP) 범용화 추진 등**

* 현 센티미터급 기술보강 및 지상파 통합항법시스템(R-Mode)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실증 추진, 신규 송신국(1개소) 구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기본설계 등 추진

** MCP 국제표준관리협약체 참여기관 확대(31개→35개), 민간기업의 MCP 작업반 참여 유도 및 법인화 추진,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추진 등

3-1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진화

3-1-1 연안수역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교통망법) 육상*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방식의 도로망관리체계가 구축, 해상은 관련 체계 부재

* 도로법,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계규칙 등

- (해상교통환경 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 정박지가 확대 등 교통환경 개선이 확인되므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평가체제로 전환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연안수역 해상교통관리체계 선진화 및 선박통항로 안전성 확보

- (교통망법) 국가교통망계획수립, 안전성 평가, 해상교통로 지정 및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망법 신설 추진(3월~)
- (해상교통환경 평가) 쏘연안수역을 5개 해역*으로 구분하고, 10년마다 5개 해역과 해당 해역에 포함된 항만에 대해 평가(3월~)

* 서해중부, 서해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 해역으로 구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법 분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96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 위험물 취급항만, 좁은 연안수로에 대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위해요소 평가('16년)에 따른 개선사항 지속 이행		
	추진 과제	주요 내용	
	동명부두 안전관리 방안	○ (장기) 1부두 용도변경 및 3부두 위치 이전 검토 ○ 3부두 사용기준 마련	
	남외항 정박지 급유 관리방안	○ 남외항 정박지 급유 허용 조건 협의('22.상반기)	
	5부두 및 봉래동 물양장 이전방안	○ (장기) 봉래동 물양장 대체지 선정 및 5부두 물양장 대체지 개발	
	삼한안벽 관리 방안 마련	○ (장기) 일반부두 화물 수요에 따라 확장계획 재검토	
	부산항 부두시설 확충방안	○ (중기) 부산항 부두식별 등화 확충('22년)	
마산청	○ 원활한 해상교통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할 해역 중점안전관리 시행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 - 항내 부유폐기물 및 항행장애물 수거를 통한 선박운항 위해요소 제거 - 선박통항안전 확보를 위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습적으로 형성된 주요 통항로를 식별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		
동해청	○ 우리 부에서 안전한 해상교통여건을 위한 '국내 주요항만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관련 위해요소 개선 이행		
	주관	주요 내용	추진계획 및 실적
	항만 건설과	(장기)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 공사 완료	방파호안(1공구) 공사 준공('21.4분기) * '22년 상반기 외곽시설공사 준공 예정
	항만 물류과	(단기) 묵호항 진입 항로 개선 및 해도 고시	장애물을 제외한 실제 항로 이용 안내(국립해양 조사원에 항행 통보 의뢰)('21.12.)
		(단기) 항만기본계획 접안 능력 준수 및 제한	접안능력 준수 요청 공문 발송 예정('21.9.)
		(단기)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별도 용역 실시 예정('22 ~ '23)
		(단기)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평가 수행	-
	(단기)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동해항 3단계 공사 완료 후 묵호항 화물처리기능이 동해항으로 이전되면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 세칙 반영 예정	

	<table border="1"> <tr> <td>(단기) 공사 기간연장 통보 및 고시</td><td>동해항 3단계 공사 및 묵호항 재개발 계획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진행 예정</td></tr> <tr> <td>(중·장기) 동해항 항로 및 신규 부두 현황을 고려한 부두 운영방안 검토</td><td>동해항 3단계 공사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부두 운영방안 검토 예정</td></tr> <tr> <td>(단기)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고시된 WGS-84 좌표 수정</td><td>3분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예정 ('21.12월)</td></tr> <tr> <td>(단기) 국외 해도정보 수정 요청</td><td>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후 정보 수정 요청 예정</td></tr> </table>	(단기) 공사 기간연장 통보 및 고시	동해항 3단계 공사 및 묵호항 재개발 계획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진행 예정	(중·장기) 동해항 항로 및 신규 부두 현황을 고려한 부두 운영방안 검토	동해항 3단계 공사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부두 운영방안 검토 예정	(단기)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고시된 WGS-84 좌표 수정	3분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예정 ('21.12월)	(단기) 국외 해도정보 수정 요청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후 정보 수정 요청 예정
(단기) 공사 기간연장 통보 및 고시	동해항 3단계 공사 및 묵호항 재개발 계획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진행 예정								
(중·장기) 동해항 항로 및 신규 부두 현황을 고려한 부두 운영방안 검토	동해항 3단계 공사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부두 운영방안 검토 예정								
(단기) 동해·묵호항에 대하여 고시된 WGS-84 좌표 수정	3분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예정 ('21.12월)								
(단기) 국외 해도정보 수정 요청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후 정보 수정 요청 예정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 위해요소 저감을 위해 유무인표지 대수선, 방파제 등대 신설(3기, 모포항, 이가리항, 입암1리항)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등을 통한 항만내 질서위반 단속 및 부유물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취급 안전조치 위반 및 미신고·미허가 선박 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사전예방 활동 - 우리 청(순찰선), 해양환경공단(청항선) 등 보유선박을 활용하여 항만 및 주요 항로의 쓰레기 수거 ○ 어업인, 항내 내항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평택·당진항 해상교통현황 등 교육·홍보 실시 및 해양안전정보 제공원과 관공선 선원 대상 구명설비 작동 설명, 시연회와 사고예방 교육 지속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해상교통망 구축 추진(본부주관) 및 해상교통 현황도 분석을 통한 밀집 해역 식별 및 해역 안전관리 이행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정보의 활발한 공유체계 확립을 통한 밀집해역 안전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해경, 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밀집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활동 정보 공유를 통해 해역 안정성 확보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출항통제) 화물선 출항통제 기준 도입('91년) 후 30년이 지난 현재 환경변화 및 해양사고 분석 등을 통해 현행 기준 재검증 추진
- (음주운항) 시운전선박, 수상호텔 등이 음주운항금지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정상화 방안 추진

□ '22년 추진계획

◆ 해사안전제도 고도화·정상화를 통한 선박운항 안전 확보

- (출항통제) 항내운항선 신규통제 및 일반화물선 출항통제 항만 확대 (무역항→연안항) 방안 검토(상반기), 현행기준 적절성 실증추진(~'23.3)
- (음주운항)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형평성 및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대상선박 확대** 등 개선 추진('22.3~)

* 도로교통법 →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 항공안전법 →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항공기(행글라이더, 기구, 무인비행장치 등)

** (기존)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른 어선(일부제외) → (개선) 모든선박(시운전선박 포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법 분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4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북항, 내항, 남항, 신항 등 수심 미확보로 이용자 불편 및 선박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동 구간과 항로의 통항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유지준설공사 시행

□ '22년 추진계획

- ◆ 제1항로 남측구간 및 북항 유지준설공사 시행
- ◆ '22년도 항내 유지준설 4개 구간 시행

-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항로구간 유지준설로 선박 입출항 안전강화
- 항내 유지준설 우선순위 파악 및 3개 구간 유지준설 시행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현장중심 안전관리 (항로 및 항내유지준설)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32-890-8242	22,386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항법준수 등 안전한 통항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 입구 등에 순찰선 집중 배치 운영(필요시 지자체, 해경 등과 합동 순찰 실시) ○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장기 정박·계류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예·부선 규모, 장기 정박목적 등에 따라 유형별 관리)시 적극 대응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시설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항로표지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공사, 유도등부표 및 스파부이 인양정비, 표준형 부표류 제작 및 부속장비 구매, 항로표지 관리운영 및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항로표지 장비대체 및 확보 ○ 무인표지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남해권역(여수청, 목포청, 진도소, 마산청, 제주단) 노후 부표류 적기 교체, 사설항로표지 관리 실태 지도·점검 ○ 광양항은 종합물류항만으로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한 등부표 시인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항로(묘도수도) 우현표지 등부표(광양항묘도수도72호등부표 등 11기) 등명기를 순차점멸시스템 항로표지로 운영 검토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정화 활동으로 항행 장애물과 바다쓰레기 제거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및 통항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해양 정화활동 : 월1회 취약지역(방파제, 바닷가 등)수거활동 시행 ○ 침몰선박 및 방치폐선 관리강화 등 주기적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분류, 소유자 확인, 제거지시 및 미확인 선박 행정대집행 처분(분기별 1회/수시 점검실시) ○ 선박통항에 지장을 미치는 어업 시설 즉시 강제 제거, 일출·일몰 시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 순찰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불법조업 지도·단속 실시를 통한 해상교통안전 질서 확립 ○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추진 및 항만순찰선 순찰 강화 ○ 5부두(51선석) 저수심(6.4m) 구역 준설 추진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교통환경 변화 및 선박 기술 발달에 따른 현행 출항통제 제도 재검토·개선에 따른 홍보·이행 ○ 순찰선(해양11호)의 해상순찰 활동(연중)으로 불법어로행위 및 질서위반 선박 단속을 통한 무역항 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및 법령에 따른 안전운항저해 어망·어구 제거를 통한 해상교통 안전성 강화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선박통항 최고 속력에 대한 지속적 홍보 추진(수협, 조선소, 예선업체 등) 및 단속방안 검토 ○ 유관기관 합동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 및 항내 부유 폐기물 및 항행장애물 수거를 통해 선박운항 위해요소 제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개발 계획, 입출항 선박 및 물동량 증가 추이 조사, 어업세력 분석 등 추진을 통한 장기과제 지속추진 타당성 확인 ○ 개선·확장된 항계 밖 정박지 변경사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반영·고시('22.상반기) ○ 동·서부두 및 돌핀부두 항로부근 저수심 구간 준설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상풍력단지 조성, 마리나 항만 조성 등 다양한 해양개발에 따른 연안수역의 교통환경이 복잡해지며, 해양사고 위험성이 가중
- 연안수역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해상교통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쉼주기 관리 및 개선 필요

□ '22년 추진계획

◆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쉼주기 체계구축 및 대상사업 확대, 진단 기술인력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강화

- (전주기 안전진단) 사전진단, 본진단, 사후진단 및 사후관리까지 해양개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22.3~)
- (안전진단대상확대)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해양개발 등도 안전진단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대상 확대*(3월~)
 - * 선박길이 100m 이상 통항수역 → 60m 이상 통항수역, 여객선 및 도선점 변경 추가 등
- (진단대행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체 공정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 완화* 및 감독·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3월~)
 - * 유사경력 인정, 일정기간 보조급 종사자의 선임급 승급조건 및 책임급 대체자격 신설
 - **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적정 수행 여부를 점검(진단서 기준 미달 시 수시 지도·감독)하고, 신규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마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법 분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

□ 배경 및 필요성

- 연안수역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해상교통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소주기 관리 및 개선 필요
- 해양개발사업 소단계에 걸쳐 해양교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 관리 점검체계 구축 및 진단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22년 추진계획

◆ 진단 소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진단 대상사업 확대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강화

- 해양개발 소주기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리체계 구축(~'22,下)
 - (사전진단) 해양개발(풍황계측기 설치 등) 초기단계에서 교통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전진단 관리(상시)
 - * 사전컨설팅을 통해 진단 대상여부, 진단 수행항목 등에 대한 정보제공
 - (本 진단)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진단서 검증 강화(상시)
 - * 해상풍력관련 대행업체가 수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평가 적정성 검증 등
 - (사후진단) 해상교통안전진단 완료 이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지연으로 해상교통 환경변화 등 재진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리(상시)
 - * 진단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 안전대책 이행관리 모니터링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 등 진단제도 운영관리 체계 개선
 - 진단 대상범위 확대(대상선박, 대상수역, 재진단 등)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및 진단 기술인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1	10백만원

3-2 新 해상교통환경 대응체계 구축

3-2-1 해상풍력발전단지 교통안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으로 전국 해상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급격하게 증가* 예상

* 16.5GW 규모의 풍력단지가 연안에 조성 시 8MW 발전기 2,000개 이상 설치 예정

-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라 선박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 교통환경 안정화를 위해 관리체계 필요

□ '22년 추진계획

◆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 부근에서의 선박통행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 확보

- (풍력단지) 풍력단지 조성 시 입지적정성 등은 국내외 기준*을 고려 하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개정(1월)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발전기 이격거리, 선박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적절성 평가

* 입지조건, 항로와의 이격거리 등은 선박의 조정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에서 제시한 기준 등 고려

- (해양시설법) 보호수역 설정 근거, 통항안전관리체제 수립·심사, 안전점검, 전담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시설 안전 관리법 필요성·타당성 연구용역(~6월) 후 입법 추진(7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법 분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 대체항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선정시 선박통항안전, 경제성, 해양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한 해상교통안전평가 진행 ○ 대규모 해양시설 및 부근해역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및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22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국내법 체계 마련

- 자율운항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제정·시행 중(국토부, '20.5~)

【 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

- ▶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 정의
- ▶ 시범운항 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항만·운송 기업간 물류 연계 최적화 사업을 통해서 항만의 생산성과 안전성 제고

□ '22년 추진계획

◆ 해운·항만·운송기업간 물류 연계 최적화 사업*자 선정(KIMST)을 완료하고, 개념 정립과 기술개발 전략 수립(상반기)

- 데이터 조사·분석과 물류주체간 거버넌스 구축 전략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AI기반의 연계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한 모델 설계와 항만의 위험요소 분석 등 실시

* (사업비/사업기간) 총사업비 145억원('22년 12억원) / '22 ~ 25년

【 사업 주요 내용 】

- ▶(항만물류체인 디지털 인프라기반 기술개발) 船-港-陸 물류연계 표준화와 프로세스 재정립 및 물류주체 간 공유 정보와 참여전략 거버넌스 구축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물류 연계 최적화 기술개발) AI기반의 선박 출도착 예측 및 船-港-陸 연계 최적화로 항만·물류 생산성 및 안정성 제고
- ▶(해상-항만-육상 물류 최적화 서비스 기술개발) 船-港-陸 실시간 연계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반의 스마트 언택트 입출항 서비스 및 항만운영 통합 모니터링* 기술개발

* 선박의 입출항, 하역작업, 반출입의 전과정을 각 물류주체들이 공동 모니터링(현재는 터미널 운영사는 터미널만, 선사선박만 모니터링 중)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1,2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주의 선박 감시체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선박감시 업무 취약요인 발생에 대비하여 대체 감시 수단, 방법 등 정비 - 제11해안 감시대대(신설부대)와 연계하여 항만 해안선 순찰, 선박감시 업무 등 협조체제 강화 ○ 보안시설·장비 지속 확충 및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초소 및 보안울타리 보수, 노후된 보안·방호 장비 교체, 보안 가로등 정비 등으로 보안시설·장비 상시 가동태세 철저 - 노후 소형선박의 선체, 주요설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병행(연중)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자율운행트럭 스마트 물류 연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및 항만이용자 간 항만의 실시간 상황 및 화물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물류 연계망 구축 - 정보화·지능화된 항만시스템을 각 주체별(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스마트 항만 등)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마련 ○ 항만보안 및 사이버보안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출입자·차량 출입통제 및 보안 취약지역 순찰 및 경계 강화를 통한 철저한 항만보안 관리체제 수립 - 보안 중요도에 따른 통제·제한구역 지정, 센터 등 시설물 출입통제, CCTV 관리·운영 등에 대한 절차 마련 - 방화벽 구성, 매체 제어 등 정보 통신망과 운영시스템 보안절차 수립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보안 및 사이버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내 통제,제한구역의 지정 및 시설물 출입통제 강화 - 국가핵심 기반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방호 계획 및 복구대책 등 주요 시설 보호계획 수립 - 대테러 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하반기)

3-3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

3-3-1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효율 증진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21.1.~)

* 해양사고 예방서비스(실시간 전자해도, 충돌·좌초 예방, 해양안전정보 등), 해양안전 편의지원 서비스(통합통신(UC), 어선 자동 입·출항신고, 긴급 구조신호(SOS) 발신, 관제구역 안내 등)

-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기지국 263개소, 송수신장비 621식) 및 전국 서비스 제공을 위한 9개 센터(중앙1·권역6·통신망2) 구축 운영 중

□ '22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확대

- (서비스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정화·고도화를 통해 현행 서비스 개선 및 미시행 서비스 단계적 상용화 추진
 - (기능개선) 최적항로 추천 서비스를 단말기까지 확대하고, 선박 간 그룹통화(어선선단) 개시, 정보제공 속도 개선 등 추진
 - (미시행 서비스 상용화) 도선·예선 지원, 여객선 원격모니터링 시범 운영 및 활용 가능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단계적 상용화 추진
- (인프라 확충)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LTE-M) 고도화 및 바다 내비게이션 제2운영센터(재해복구센터) 신설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 추진

- (통신망 개선) 품질 취약해역 기지국 신설·교체(5개소), 통합공공망 간 기지국 공유 연동장비 도입(통신 2센터) 등 통신망 품질개선 추진
- (재해복구센터 구축) 화재·정전 등 재해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대 국민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운영센터(재해복구센터) 구축
- (이용자 확대) 서비스 활성화, 조기정착 등을 위해 단말기 구매지원·보급 사업(1,445척) 및 우리부 소속 관공선(전체 148척) 설치 추진
- (수로제품) 최신 국제표준 및 해양조사성과를 반영한 고품질의 바다내비용 수로제품(8종) 제작·공급* 유지로 바다내비 서비스 지원
- * 항행경보(발생시), 해수유동(매일), 전자해도(분기별), 해저지형·조석 등(업데이트시)
- 차세대 수로제품 관련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 적극 참여를 통한 국제 동향 파악 및 수로정보 표준 연구·개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통신망 안정화·고도화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39	29,245백만원
		044-200-6030	
		044-200-6233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보급		044-200-6030	2,881백만원
바다내비용 차세대 수로제품 최신화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051-400-4325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환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 점검(반기 1회) * 관할구역(부산, 경남, 울산) 현장 점검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신호품질 모니터링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어항 중심의 대면홍보(설명회, 단말기 시연 등) 및 비대면 홍보(SNS 등)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자 불편 사항 식별 및 통신품질 확인을 위한 실향역 승선 점검 실시, 개선사항 발굴 등 서비스 품질향상 추진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시스템·네트워크 상태 등 상시 모니터링, 관할 기지국(29개소) 합동점검(권역센터·운영사업자) 실시 ○ 단말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현황 조사(반기)를 실시, 설치의무 안내 등 법령 위반 발생을 방지하고 시행 초기 제도정착 도모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운영의 고품질화·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관할해역 구조신호 대응 및 상황전파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정밀 서비스 제공 - 통신망·기지국 설비의 현장점검을 통한 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역량강화로 서비스 전문화 도모 ○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해양정보 및 최적 안전항로 안내, 서비스 이용 선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 활성화 도모 - 수협, KOMSA와의 협업을 통해 선주, 선장(선원) 등 서비스 이용 직군 대상으로 서비스 홍보 및 단말기 보급사업 지속 실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해양사고 예방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상시 근무체제 유지를 통한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 사고취약 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 등 대규모 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선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e-Nav서비스 이용정보 분석을 통한 품질 개선 - 권역센터 네트워크장비 및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 점검(20개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한 보급사업 지속 추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의견수렴, 보고 등 지속적인 환류 ○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망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확인 ○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와 동시에 바다 내비게이션 설치, 사용법 안내 병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운영 및 안정적인 e-Nav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조난신호 접수 시 사고정보 전파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 e-Nav 운영시스템·설비에 대한 장애복구체계 구축 등 관리·점검 및 해상무선 통신망 기지국 현장점검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유지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 집합교육 및 현장캠페인 시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교육 지속 추진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유지 * '22년도 3·4차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현장홍보·교육 실시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국제표준 및 해양조사성과를 반영한 고품질의 바다내비용 수로제품(8종) 제작·공급 유지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지원 - 차세대 수로제품 관련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 동향 파악 및 수로정보 표준 연구·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조해역에 대한 촘촘한 선박교통안전망 구축 및 4차 산업 기술 기반 데이터 통합·공유 등을 통해 사고예방 플랫폼 구축

□ '22년 추진계획

◆ 광역 VTS 체계 본격 도입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첨단화

- 항만과 연안 통합 관리를 위한 서해권 광역 VTS 운영
 - 기존 목포항·진도연안 VTS와 확대되는 군산·목포연안을 통합한 광역 센터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 음주운행탐지 시스템 및 클라우드 VTS 연구개발 등 추진
 - 失사용자인 관제사 피드백을 통해 선박 이상항적 및 음주운행 식별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관제센터 확대·설치
 - 개발 2차년도 관제데이터 수집·처리 기술 성능 향상, 레이더 모듈·운영시스템·모바일앱 등 시작품을 부산·인천 센터에 설치
 - VTS 레이더 신규설치 사업시 선박탐지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낮은 디지털 방식 레이더(SSPA) 도입

【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상교통관제서비스 고도화 (서해권 광역 VTS 구축) (고성능 레이더 설치) (음주운행 자동탐지 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VTS 연구개발(R&D))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032-835-2285	15,435백만원 (2,709백만원) (9,026백만원) (300백만원) (3,4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해상활동 증가로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요구 증가 및 레저정보 등 맞춤형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 레저선박(척): ('17)19,494→('19)23,639 / 낚시어선이용객(만명): ('17)415→('19)482

- (필요성) 해양종사자 및 유관기관의 해양위험기상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선제적·정확도가 높은 기상정보 제공 필요

※ (추진현황)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ISP('20.7.) →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년 사업 완료('21.12.) → 연도별 해양기상관측망 확충('19~'21)

- (구축시설) 10m 해양기상부이 6대, 해양안개관측장비 75대

□ '22년 추진계획

◆ 해양기상정보 통합관리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시스템 운영기반) '21년 개발된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현업화를 통한 해양기상 통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 (신)해양기상정보포털, 스마트해양기상시스템, 해양기상브리핑시스템, 해양기상플랫폼

- 해양 유관기관 및 대국민의 안전 해상활동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해양기상정보 고도화

- (시설확충) 먼바다 해양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해양기상부이*(10m) 설치 및 해상의 안개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안개관측망** 구축

* 10m 부이(現 6대→'23년 11대), 위험기상 사전 감시 및 해상 예·특보 업무 지원

** 해양안개관측장비(現 75대→'22년 100대), 해양수산부의 기반시설(등대, 등표)을 활용(부산·경남·경북·강원·제주권 해역)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무선FAX시스템 운영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3	1,022백만원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상청 (관측정책과)	02-2181-0752	15,51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해역 해양기상 악화(풍랑주의보, 풍랑경보 등) 시 정보 제공 - 유관기관, 관내선사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3-4 스마트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3-4-1 차세대 항법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독자 항법시스템이 없어 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PNT* 정보를 해외 GNSS(위성항법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 중

*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 국제기구(IMO, IALA)의 GNSS 의존도 증가와 취약성 경감을 위한 백업항법(<10m)과 자율운항 등에 필요한 고정밀 측위성능(<10cm) 요구

□ '22년 추진계획

◆ 국제기구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차세대 해양 PNT 기술을 개발하고 고정밀·고신뢰 항법체계 구축

-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GPS 센티미터급 보강 및 지상과통합항법 시스템(R-Mode)의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테스트항만 성능실증 추진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 기본설계
- (인프라 구축)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신규 송신국(1개소) 구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측위정보산업 신시장 창출 (eLoran 신규송신국 구축)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80	25,441백만원 (2-1-3 중북) (3,300백만원) (5,798백만원) (16,343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입·출항 선박의 항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륙도 방파제등대(2기, 1,080백만원) 및 오륙도등대 전력시스템 개량(200백만원) * 표체 개량(철거 후 신설) 및 증고(동단 6.0m→15.5m, 서단 6.0m→14.0m) 추진 ○ 무인표지 도장, 등부표 인양정비, 낙동강 등주 정비,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및 선박수리 용역등 기능 강화(1,545백만원)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시설물(6개소), 승봉도·대이작도방파제에 등대 신설 및 선미도등대 무인화 추진 ○ 항로표지 기본계획('15~'24)에 따라 인천항 동수도 입구 하경공도에 등대 설치 ○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등부표 정비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통신환경을 고려한 착탈이 가능한 다중방식 항로표지용 송·수신 통합 통신모듈 및 통신연동 기술을 개발하여 지방청 자국 시스템에 설치 ○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항로표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신설·개량을 위한 시설공사 및 실시설계·정밀안전진단 추진 * 2022년도 항로표지 신설 3기(학림도/세존도/항촌항 방파제), 개량 2기(저도) 예정 - 항로표지 관리운영,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비 대체·확보 ○ 무인표지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및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1회)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항로표지(화암추등대 등 7개소)의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을 통한 현재 상태의 안정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추진 ○ 항로표지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등부표(9기)의 교체 추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기능 원격 감시·제어와 축적된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등표 1기) 신설 - 사업명/소요예산: 부안바닥여등표 설치공사 / 750백만원 - 사업 시행: '22.2월 ~ '22.8월(6개월) - 사업위치: 전북 부안군 대항리 송포항 북방 해상 간출암 ○ 노후 항로표지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실시 - 사업명/소요예산: 광암등표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 116백만원 - 사업 시행: '22.2월 ~ '22. 6월(4개월) - 사업내용: 콘크리트 품질시험, 구조물 상태 및 안정성 확인, 보수·보강공법 제시 등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 위험요소인 간출암 상 등표 4기 신설 및 지방어항 방파제등대 1기 신설로 통항선박 안전 확보 ○ 안전진단(12개소) 및 노후시설물(칠발도등대 전원설비) 개량 ○ 당사도등대 무인화 및 원격감시시스템(2개소) 개량 설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형 등명기를 활용한 점검·정비 효율 제고 및 표준 SW 적용 확대로 표준화·디지털화된 통합형 정보 협력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형 등명기 확대 계획 ('20년)15기→('21년)34기 →('22년) 42기(예정) ** 원격관리 항로표지 현황 ('20년)59기→('21년)64기 →('22년) 76기(예정)

□ 배경 및 필요성

- e-Nav, 스마트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 추세에 국제 해양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확보 필요
- 세계 최초 e-Nav 상용화('21.1)를 통해 마련한 국제사회의 입지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범용화 및 국제적 교류·협력 추진

□ 추진계획

◆ 해사정보공유플랫폼(MCP)의 범용화 및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해양디지털 국제표준화 및 국제시장 선점

- (MCP 범용화) 해사정보공유플랫폼(MCP) 국제표준관리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 민간기업의 MCP 작업반 참여 유도 및 법인화 추진

* 현재 총 15개국 32개 기관 → 35개 기관으로 확대

- (콘퍼런스)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디지털 新기술의 표준화 및 국제적 조화 선도

* 제6회 해양 디지털 국제콘퍼런스 / '22.9월 / 세종(잠정), 대면회의(잠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MCP범용화 및 국제콘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3	342백만원

전략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 · 문화 정착

□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 확대* 및 VR·AR 장비 등 스마트기기 활용 찾아 가는 현장 안전교육 실시(5개 권역, 6개소), 대국민 해양안전 이러닝** 개발

* 해양안전체험관(안산): 선박탈출, 선박경사체험 등 20여종 프로그램 운영
국민해양안전관(진도): 해양생존체험, 해양직업체험 등 13종 프로그램 운영(4월 개관)

** (e-Learning) 생존기술, 구명뗏목 사용법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과정 개발 및 웹사이트 운영

□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 영세선사 대상 해양안전컨설팅 사업 확대 운영*, 종사자(선원 등) 자격취득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학습 플랫폼** 구축·운영(5월~)

* 선박안전관리, 해사안전법령, 해양사고사례 등에 대한 자문(퇴직공무원 활용)('21, 3명→'22, 6명)

** 해기사 면허 등 직무교육을 모바일·태블릿·PC 등 온라인 환경에서 수강·이력 관리 가능

□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 외국인 어선원*, 도서지역 선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교육(교재보급·현장교육), 교육요원의 디지털 교육역량 및 글로벌 대응강화** 추진

* 10톤미만 소형어선 사고(전체 어선사고의 74%))의 인명피해 중 외국인 선원 23% 차지

**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역량교육 및 교육요원 국외연수 추진

□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 해양안전실천본부 중심의 안전문화 민관 협력체계* 운영,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개최**, 시기별 특성에 따른 해양사고예방 홍보자료 제작·배포

* 민간 주도의 해양안전문화 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추진(상반기)

** 분기별 안전주제어 공모 이벤트, 해양안전실천서약 이벤트 등

4-1 환경 다변화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확산으로 해양레저, 여객선 이용 등 국민의 해양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 구축·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함양 및 생명보호에 기여 필요성 증대

□ '22년 추진계획

◆ 대국민 해양안전체험 등을 위한 체험 인프라 전국적 확대

- (해양안전체험시설) 일반국민의 해양안전교육 및 비상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체험관(안산)*, 국민해양안전관(진도)** 운영*

* 해양안전체험관: 선박탈출, 선박경사체험 등 20여종 프로그램(연중운영)

** 국민해양안전관: 해양생존체험, 해양직업체험 등 13종 프로그램('22.4. 시범운영 예정)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홈페이지 신청을 통한 차수별 해양안전교실 운영
 -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3,518백만원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문화인식조사			45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 청소년 대상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22.5~'22.11) - 해양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해양안전체험시설(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을 활용한 체험·맞춤형 교육 실시															
마산청	○ 해양선박사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시 구명·소화설비 작동 시연 및 체험으로 해상종사자 관심 제고 및 교육 실효성 향상 도모(연 3회) * 구명별 투하, 신호탄 시연, 소화기 작동, VR 해양사고 체험 등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항행안전 리플렛 및 안내서 제작·배포(수시)															
동해청	○ 청소년 대상 '등대해양학교', '찾아가는 등대교실' 해양안전문화 공간 마련 및 체험기회 제공('22. 4. ~12.) * (대상/운영시설) 강원도 초·중학교 25개교 600명 / 속초·주문진 등대 ○ 청소년의 해양의식 함양, 생존수영·선박탈출 등 안전 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해상순례·탐사, 해양안전 가족캠프 운영 * (대상/장소) 청소년 280여명 /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 묵호등대와 속초등대에서 일반인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음악회 및 청소년 대상 등대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22.5월/10월) ○ 초·중학생 대상의 등대해양학교 및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등대해양캠프 등 운영('22.7월/8월)															
군산청	○ 관내 대학실습선(선원 및 실습생) 대상 해양안전 체험교육 실시 - 시·청각 자료, 안전설비 시연 실습으로 해양안전교육 효과 증대 * (대상/내용) 군산대학교 실습어선 새해림호 / 팽창식 구명뗏목 작동법 시연 등															
목포청	○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적 확대 - 여객선 터미널 내 구명뗏목 및 구명조끼 사용법 등 체험부스 상시운영 - 국민해양안전관 설립(진도군/'22.3) 등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시설 확대															
대산청	○ 충청바다학교(계속) <table><tr><td>운영 기간</td><td>'22. 5~10월</td><td>접수 기간</td><td>'22. 3월 중</td></tr><tr><td>참여 대상</td><td>충청권역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td><td>교육 횟수</td><td>총 50회 (1회 20명 내외)</td></tr><tr><td>운영 계획</td><td>참여 학교 선정 후 유관교육기관 협조운영</td><td>지원 사항</td><td>프로그램 교육비 및 교재지원</td></tr></table>				운영 기간	'22. 5~10월	접수 기간	'22. 3월 중	참여 대상	충청권역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	교육 횟수	총 50회 (1회 20명 내외)	운영 계획	참여 학교 선정 후 유관교육기관 협조운영	지원 사항	프로그램 교육비 및 교재지원
운영 기간	'22. 5~10월	접수 기간	'22. 3월 중													
참여 대상	충청권역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	교육 횟수	총 50회 (1회 20명 내외)													
운영 계획	참여 학교 선정 후 유관교육기관 협조운영	지원 사항	프로그램 교육비 및 교재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해양안전 이러닝(e-Learning) 필요

□ '22년 추진계획

◆ 효과적인 온라인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해양안전교육) 해양안전 이러닝(e-Learning) 활성화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해양안전 이러닝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추진

* 해양안전 전반, 여객선 승선, 해양생존기술 등의 교육영상 및 온라인 해양안전교육 문제은행식 시험을 통한 학습 확인 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개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문화인식조사 (온라인교육프로그램 구축·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450백만원 (4-1-1 중복)

□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안정적인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센터 24시간 상시운영
- 서비스 운영 및 제공의 내실화를 위한 센터 운영요원의 역량강화 및 바다 내비게이션 전문가 양성 등 맞춤형* 교육과정 필요

* 기초·직무·현장·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센터 운영요원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및 중앙·권역·통신센터 간 정례 업무협의 실시

- (교육과정 개설) ①신규 운영요원 대상 직무교육(5일), ②시스템 장애 대응 등 보수교육(2일), ③센터장 및 선임요원 대상 관리자교육(2일)

* 운영요원 교육·훈련 위탁용역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운영('22.4~12월)

- (업무협의회)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현안 논의 및 개선사항 발굴 등 업무공유·협력 체계 지속 유지(분기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바다 내비게이션 전문가 양성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030	5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에 취약한 소형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예방 교육·홍보자료 제공 필요

-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로 예방교육의 효율성 제고 추진

* 10톤미만 소형어선 사고(전체 어선사고의 74%)의 인명피해 중 외국인선원 23% 차지

□ '22년 추진계획

◆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선원용 교육자료 제작 추진

○ 우리원에서 그간 제작한 동영상·리플렛 등 다양한 사고예방 교육 자료를 외국인선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배포

- 교육홍보 자료를 사고위험이 높은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베트남 국적의 선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용 제작

*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중 인도네시아(4,463명)·베트남(4,464명) 국적 선원 (91%)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외국인선원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5	5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경각심 제고 및 자발적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체험형 교육·홍보 추진 필요
-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에 관한 반복적 학습이 가능하고 습관적 안전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회 확대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콘텐츠 개발·활용·개선의 환류 과정을 통해 콘텐츠 품질을 지속 개선하고, 지자체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기회 확대

- (콘텐츠 개발) 최근 5년간('17~'21) 해양사고 중 주요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 및 사례에서 선별(3건 내외)

☞ 정보제공 → 동기부여 → 방법론(실천을 위한 가이드) 제시

- (콘텐츠 활용) 해양안전교육포털을 통한 콘텐츠 상시 제공 및 해양안전 엑스포·지자체 협력을 통해 체험 기회 확대 및 홍보 강화
- (콘텐츠 개선) 체험자·지자체·유관기관 등 설문조사·의견수렴을 통한 콘텐츠 품질 개선에 반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교통안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044-330-2307	9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팬데믹, 디지털화 가속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및 시간·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교육인프라 요구 증대
- (목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을 종사자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교육환경의 제한(시간·장소) 없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 '22년 추진계획

◆ 국내외 교육생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 및 운영

-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및 VR·AR 등의 메타버스 기술 등 4차 산업 혁신기술과 접목가능 및 확장이 용이한 구조(모듈형)로 설계
 - 다양한 사용자 교육환경(모바일, 태블릿, PC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반기술 적용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학사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
 - 지식센터 페이지를 통한 해운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 해운 관련 최신 뉴스 및 업계 현황 게시(텍스트, 오디오 등)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온라인플랫폼 기반 스마트 교육체계 활성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31	1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신사업분야인 자율운항선박의 종사자 교육체계 마련 필요
-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제어실무 및 기초실습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 '22년 추진계획

◆ 자율운항선박 추진시스템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선박 인력 양성 교육과정 추진(교육인원 40 X 연간 4회 운영 = 총 160명 교육)

- 자율운항선박 2개 교육과정 운영
- (원격제어 실무교육)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추진 시스템 실무, 배전시스템 이해 및 시뮬레이션 실습 등으로 구성
- (원격제어 기초실습교육) DP(Dynamic positioning) 시스템 개요·구성·기능, 자율운항 친숙화훈련, 자율운항선박 최신동향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신기술(자율운항선박) 교육체계 마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미래해양교육혁신추진단)	051-650-5412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비상상황(화재·퇴선)에 대한 종사자 숙련도 향상을 위해 가상현실체험(VR) 장비를 활용한 안전설비 운용 체험교육 추진 ○ 설날·추석 연휴 다중이용시설(국제여객터미널, 궁평항, 전곡항) 이용객 대상 해양안전 VR체험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시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원에서 그간 제작한 동영상·리플렛 등 다양한 사고예방 교육자료를 외국인선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배포 - 교육홍보 자료를 사고위험이 높은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베트남 국적의 선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활용 제작 *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중 인도네시아(4,463명)·베트남(4,464명) 국적 선원 (91%)

□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환경 제공할 필요
 - VR·AR를 통해 현실에서 체험이 어려운 해양사고 및 재난사고를 체험하도록 하여 해양안전교육의 시·공간적 한계 해소 가능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환경을 조성해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 도입에 대비

□ '22년 추진계획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훈련 환경 조성

-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스마트 해양안전교육 환경 조성
 - VR·AR 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 콘텐츠* 개발·활용해 스마트 해양안전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 여객선 화재발생시 비상탈출,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방법 등 가상현실(VR) 체험
 - 교육기관 대상 VR장비 대여 시스템 등 새로운 해양안전 교육 환경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292백만원

4-2 생활 속 해양안전 실천문화 확산

4-2-2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16~'20) 발생한 해양사고 중 약 83%가 경계소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과실*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역량제고 필요

* 5년간 재결사건 1,482건 중 인적과실 기인 1,235건(해양안전심판원 재결기준)

- 해사안전분야(선박검사, 해양사고 조사·심판 등)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해사안전컨설팅)하여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역량강화 지원

□ '22년 추진계획

◆ 해사안전 컨설팅 사업 확대 운영

- (해사안전컨설팅) 내항 여객선·화물선 대상으로 선박 안전관리 제고 방안, 해사안전관련 법령, 해양사고 심판 주요재결 내용 등 안내·자문
- 해사안전 컨설팅 사업을 확대('21년 3명 → '22년 6명) 운영하여 선사·선원 등 안전관리 종사자의 역량제고 및 안전의식 개선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사안전 컨설팅 사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100백만원 (인사처)

□ 배경 및 필요성

- '21년 해양오염사고 중 건수는 부주의, 유출량은 해양사고 최다로 해양안전 의식 함양을 통해 해양 안전·오염 사고 예방 추진
- 부주의 사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류공·수급 등 기름이송 오염사고('20년 20건→'21년 38건)에 대한 적극 예방활동 강화
- * '21년 해양오염사고(247건, 312.8kℓ), 부주의 사고(95건, 38.5%), 해양사고 유출(199.8kℓ, 63.9%)

□ 추진계획

◆ 유관기관 및 어촌계 협동 해양 안전·오염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전체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비중 36.0% 달성

- 해경, KOMSA,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유관기관 해양오염 예방 협업
- 「갑판 배출구 차단」, 「밸브·프스 안전문화 챌린지*」 확산 등 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를 통해 기름이송 부주의사고 예방 의식 강화
- * 유류이송 사고 원인 중 가장 취약한 밸브·플랜지·스위치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해양환경공단 (예방·대응처)	023498-8596	-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예선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예인방제선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구조에 투입

□ '22년 추진계획

◆ 항만예선 공공성 강화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난·구조 실시

- (구조·구난 대응) 국내 8개 주요 항만에 예인방제선(27척) 배치,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협력체계 구축)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VTS 상황실)과 사고정보 전파·공유 및 긴급 출동태세 유지·대응
 - 장애물 신속 제거를 위해 전국 항만 민간전문잠수업체, 방제업체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사고 구조 및 구난	해양환경공단 (예선사업처)	02-3498-8733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캠페인의 확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해양안전 종합홍보 등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SN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창구 활용한 비대면 홍보·안전교육 및 구명조끼 착용체험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전문가 초빙 교육 및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육·캠페인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 테마 선정하여 해양사고 예방 홍보를 통한 일-학습-생활 연계 안전점검 생활화 유도 및 해양안전의식 고취 ○ 종사자 집합교육 시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시연, 화재 시 대응요령, 구명조끼 착용법 등 실습·체험 위주로 구성하여 진행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해양종사자 대상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교육 실시 - 직장 내 '일/생활-학습' 연계 실습 위주 안전교육 장려 및 바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교육 콘텐츠 활용 교육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해양수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격취득교육 및 각종 직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토론·실습·동영상 등 활용, 참여형(실습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생 습득능력 향상

- (목적)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선원교육을 이론중심에서 실습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현장 실무능력 향상 제고

*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 교수기법 도입과 정원 조정, 교육장비 활용 및 실습 시간 확대 등

□ '22년 추진계획

◆ 31개 선원교육(자격취득) 과정을 참여형으로 전환

- ('22년 대상교육) 자격취득교육 13개 과정(면허취득교육 9개* 과정, 부원교육 4개** 과정)을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어선 3급 / 상선 4급 / 기관 4급 / (재)항해 4급이하 / (재)기관 4급이하GMDSS 직무인정교육(기사) / 전파전자4급통신사 / 전파통신급4급통신사

** 당직부원교육(항해/기관), 유능부원교육(항해/기관)

※ ('23년) 자격취득교육 18개* 과정을 참여형으로 전환 추진

* 면허취득교육 5개 과정: 항해3급/기관3급/전자기관사/(재)항해 3급이상/(재)기관3급 이상

* 부원교육 2개 과정: 당직부원교육(운항당직), 유능부원교육(운항)

* 필기시험면제교육 8개 과정: 항해2급/기관2급/항해3급/기관3급/항해4급/기관4급/항해5급/기관5급

* 면허전환교육 3개 과정: 교류교육(어선→상선, 상선→어선, 통신→항해)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원 자격취득교육(13종) 교육콘텐츠 디지털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34	16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해사안전 지도·감독 및 선박보안 심사 시 해상 종사자 대상 현장 방선교육 실시(수시) ○ 상호 협력학습(실습, 토론 등) 기반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비상대응) 승객참여형 비상탈출훈련 분기별 시행(연 4회), 위험물 운반선(화재·폭발) 위험화물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중점교육 실시(선박점검시) - 예·부선(기상악화) 피항대책 및 선박조종 자료 배포 등 자체 교육 지원(지도·감독시) ○ 민·관 업무공유 환경 조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향상, 선박관리 선진화 및 안전·보안사고 등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보안 종사자 실무협의회('22. 上) 및 내항선사 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22. 下)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여객선터미널 및 매표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대상 안전캠페인 실시(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해사안전 지도·감독 및 선박보안 심사 시 해상 종사자 대상 방선교육 실시(수시) ○ 민·관 업무공유 환경 조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향상, 선박관리 선진화 및 안전·보안사고 등 예방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종사자(선원, 선주, 안전관리책임자 등) 및 선종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그룹화하고, 유관기관(해양수산연수원)과 협조하여 교육 실시(반기별/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구명·소화설비 체험형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울산항 내 해양 종사자들의 교육주제 수요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온라인 교육실시 ○ 취약선박(내항유조선, 예부선 등) 종사자 대상 기초항해 당직수칙,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등의 현장교육 실시(연중)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내항 여객선사 대상 자발적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이행여부 점검 ○ 선박점검 및 지도·감독 시, 해사안전과 관련한 상호 협력학습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 수요 발굴 및 해상종사자 대상 교육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로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부적합사항 지적방식 탈피, 선사 자발적 안전관리 이행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담당자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 중점점검사항을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대리점 등 유관업체에 통보하여 경각심 고취 및 사전 시정조치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유도 ○ 선원의 고령화 등 영세한 내항선의 인증심사 시에는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 하여 선박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함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및 해양종사자 대상 피교육자 주도형 교육을 통해 자발적 안전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캠페인 및 교육 시 피교육자의 적극·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발적 안전교육 체계 확립 ○ 관할 해역 항만 입항 선박 대상 맞춤형 방선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선종(여객선, 산적화물선, 위험물운반선 등)대상 점검 및 지도·감독 시 각 해역·선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선교육 실시
-----	---

참고

지방해양수산청 주요 추진계획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권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안전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매월 1일)을 활용하여 계절별 시기와 일반국민, 종사자 등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안전캠페인 전개 ○ 해양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과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등 해양안전에 관한 홍보물 배포 및 해양안전표어 문자 발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및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안전의식 포인트제도의 적극 홍보를 통한 해양안전 문화 확산 유도 ○ '어선안전의 날' 어업인 대상 낚시·해양레저 이용객 교육 이수 인증제도의 적극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조업국, KOMSA 등과의 적극 협조를 통한 홍보 추진

4-3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강화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저감 정책 수립 등을 통한 어선안전 예방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등 어선사고는 지속 발생

* 사고(인명) : ('19) 1,951(79명) → ('20) 2,100(95명) → ('21.9월) 1,284(54명)

- 안전관리 미준수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인 어선원 인명피해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대처를 위해 안전조업교육 강화 필요

* 화재·폭발사고 원인: 관리소홀(71.9%), 부주의(7.8%), 장비파손(17.2%), 미상(3.1%)

□ '22년 추진계획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대응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교육강화) 실제 조업·항행에 관여하는 어선원(선장·기관장 등)은 체험 교육* 확대, 선주 및 코로나 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

*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무선통신(VHF-DSC) 작동요령, 충돌예방 항법 등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21~'25, 20억원) / 서버 구축, 교육컨텐츠 개발 등

- (대상확대) 선장 등 간부선원 뿐만 아니라 실제 조업·항행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 범위 확대

* 간부선원(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뿐만 아니라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의원 발의('20.12월) 중, 개정 전이더라도 어선원에게 교육 실시

- (맞춤교육) 업종별 어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도서벽지에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수요자 중심교육 실시

* 수협 등과 협조하여 원거리 도서지역·비조합원 등을 대상, 출장 순회교육 실시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1,105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선원의 직무환경 및 수급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인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내 안전교육 지원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언어·의사소통 사전 교육 강화 - 어선원의 이탈방지 등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선원 관리(수급)체계 확립을 위한 송출국과 협력 추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별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선원이 다수 승선하는 내항선 대상 방선교육 및 어선원 대상 항법·음주 규정 등 해사안전 교육 추진 - 항만국통제, 선박보안심사 등 선박점검 시 외국인선원 대상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방선교육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별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으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선원이 다수 승선하는 내항선 대상 방선교육, 항만국통제 점검 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방선교육 실시, 해양안전캠페인 시 어업종사자 대상 항법·음주규정 등 해사안전 교육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점검(상·하반기 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고용센터 통역 지원을 받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근로관계, 체불임금 등 위법행위 점검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 (대상/방법)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선원 / 노사정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예·부선, 공사작업선 등 내항화물선 고령선원 대상 방문 교육 시행(수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직무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실태 조사 및 선원진정 사건조사 이행 -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등 해양안전실천 서부지역본부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어선원 및 외국인선원 등 안전교육 실시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합동캠페인 참여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법·규정 등 안전교육 실시 ○ 해상안전교육, 요트 세일링 체험 등 해양레저 체험실시(코로나19 여건에 따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안전의 날' 연계를 통한 어업종사자 대상 선박장비·기술 등 안전 분야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예방, 중대재해 등 교육분야의 다양화·세분화에 따라 종사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요원의 역량강화 요구
 - 미래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교육수요자 니즈, 정부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재·교육방법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 집합교육 제한 및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 추세로 기존 교육·훈련 체계와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교육요원 전문성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소속 교육요원의 디지털 교육역량(그린뉴딜, 4차산업) 향상 및 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역량강화 추진

- 디지털 교육환경 활성화를 위한 교육요원 전문성 강화 추진
 - 교육요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설계
 - *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초청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역량교육 실시
- 교육요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도모
 - 국제회의 대응, 국제협력사업 수행, 해사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글로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요원 연수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교육요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01	25백만원
교원 연수 등			10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교육 거버넌스 참여기관·단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1번가 '협업이음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참여 가능한 기관·단체 구축 ○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의 역량을 융합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 -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과 협업이음터 홍보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 선박안전관리자 등 해양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구명설비 직접 시연 및 비상대응훈련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비상대응 교육·훈련 및 주기적인 비대면 안전관리교육 실시

4-4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

4-4-1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 확산기반 구축·지원 필요

□ '22년 추진계획

◆ 해양안전문화 인프라의 보완·신설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확립

- (실천본부) 민간조직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협업제고를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13.7.~)' 중심의 안전문화 민·관 협력체계 운영

* 국민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구성된 해양수산 관련 민·관 협업기구로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추진

중앙본부(44개 기관) 및 11개 지역본부(375개 기관)로 구성

- 해양안전실천본부 활성화 등 민간주도의 해양안전문화 사업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추진(상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해양안전실천본부 활성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450백만원 (4-1-1 중복)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KOMSA 부산지사) 중심 조직 개편을 통해 민간주도의 지역본부 운영 활성화를 지원 및 업·단체의 자발적 참여 도모 ○ 해양종사자 대상 선박 비상상황(화재·퇴선)에 대하여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체험형 해양사고 예방교육 추진 ○ 연령·대상·계절별 관심분석을 통해 선정된 해양사고예방 주제어 및 슬로건 중심 실천운동(현수막 게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에서 유관기관 합동 해양안전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현수막·포스터 게시, 소화·안전용품 배포 등) ○ 방선교육을 통한 종사자 해양안전문화 확산(VR체험, 사고정보 공유 등)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해양안전 체험관 상시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후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객 소요 대비를 위해 체험관 관리·보수 필수 ○ 강원지역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한 '해양안전의 날' 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활용 및 VR 등 체험형 교육 확대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교육,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안전설비 직접사용 등 현장감 있는 교육 강화 및 피교육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행(연 2회) ○ 매달 해양사고 예방정보 홈페이지 게시, 유관기관과 업·단체 전파 및 안전 운항 실천 구호 SMS 문자 발송, 항행경보 전파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서부지역본부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한 작년도 캠페인 실적 공유 및 금년도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명절, 휴가철) 해양안전실천본부 합동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해양 안전의식 고취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터미널에서 유관단체 합동 해양안전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 지역본부 활동과 연계하여 합동캠페인 추진하고 해양안전교실 등 연계하여 참여 실천운동 확대 ○ 선박 종사자 대상 방선교육, 비대면 해양안전교육 및 선박 안전설비 시연·현장 체험훈련 실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 속 해양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해수욕장 구명조끼 사용법 교육 및 코로나 방역수칙 홍보 등

□ 배경 및 필요성

-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해양안전 홍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 해양안전홍보를 활성화할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인터넷 기반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홍보 활성화

- 해양안전정보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
 - 온라인 홍보 콘텐츠 3건 이상 제작해 OTT서비스, SNS 게시
 - SNS(인스타그램 등) 활용,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
- * 분기별 안전주제어 공모 이벤트, "해양안전실천서약" 이벤트 등
- 기관 공식 SNS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제공
- 국민안전점검단, 안전신고센터운영 등 대국민 참여 채널 강화
 - 국민참여를 강화한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안전 문화 확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해양안전문화 콘텐츠 홍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450백만원 (4-1-1 중복)
부산항만공사 SNS 채널 운영	부산항만공사 (홍보부)	051-999-3155	97백만원
대국민 참여 해양안전캠페인 확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보안실)	061-797-4412 /4482/4489	229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 주요 해양사고 유형에 대한 시사점 등을 쉽게 이해·활용 가능한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홍보
- 해양사고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월별·계절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적시에 홍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고예방정보 제공

□ '22년 추진계획

◆ 시기별 해양사고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 예방정보 적시 제공

- 주요사고 및 그 예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한 예방정보를 시기별로 제작·배포해 빠르고 신속한 해양안전정보 제공
- 주요사고유형 및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통계, 예방방안 및 교훈 등을 수록한 월별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작성하여 배포(매월)
- 계절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사고유형 등을 분석하여 시사성 있는 사고 사례와 함께 예방법 등을 포스터로 제작·배포(분기별 1회)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 제작·배포)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25	22백만원

참고

지방해양수산청 주요 추진계획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사진공모전 개최(7월) 및 수상작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 ○ 인구가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 메시지 전달 강화 ○ 선사·안전관리대행업 안전관리자 약 90여명이 참여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해양안전정보, 슬로건 등 전파(수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터미널, 통영소(사천소), 청사 민원실 등 해양종사자 밀집 지역에 전광판·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 메시지 전달 강화 ○ 선사·대리점·유관기관(단체)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경남 안전海)를 활용한 해양안전정보, 기상정보, 슬로건 등 전파(수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를 활용하여 해양안전 홍보 및 선물 증정 이벤트 등 대국민 참여율 높이기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를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소개 및 낚시·해양레저 스포츠 이용객 대상 기본안전수칙 홍보 등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주제어 해양안전 주제어 선정 및 전광판 송출(매달) - 계절별 빈번한 해양사고 요인 예방 및 효과적인 주제어 선정 ○ 계절별 중점 안전 관리 주제를 표어로 현수막 게시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해양안전문구 홍보를 통한 해양안전의식 고취 ○ 디지털 기반 해양안전 캠페인 등 확대 -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해양안전 미디어 캠페인 강화(구명조끼 海주세요) - 해양안전의 날을 활용한 체험형(VR·AR) 해양안전 교육 ○ 해양안전정보제공 전광판 콘텐츠 품질 개선(글자 크기 확대 및 내용 단순화 등)을 통한 해양안전정보 전달 강화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정보·주제어 및 해양안전활동의 우리 청 SNS 등 소셜미디어 게시 ○ 선박 지도·감독 시 VR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 실시 ○ 바다내비 어플을 통한 해양안전정보 제공 및 긴급신고접수 등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기반 해양안전활동 활성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고유형 및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통계, 예방방안 및 교훈 등을 수록한 월별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작성하여 배포(매월) ○ 계절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사고유형 등을 분석하여 시사성 있는 사고 사례와

	함께 예방법 등을 포스터로 제작·배포(분기별 1회)
--	------------------------------

전략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양·다자회의 및 국제워크숍* 개최, 국제기구 재정기여**, 개도국지원(세계 해사대학 장학사업 등), 협력사업(ODA사업 등) 확대

* 한국해사주간, H/S호 교훈도출 국제워크숍,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등

** IMO 특별신탁기금(22억원), 해양안전·안보관련 국제기구·단체(ANF 등, 2.7억원)

□ 국제표준화 주도

- 1:1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12월), 고망간강 잠정지침 공식기준 채택 추진** (~11월), 국제기구 대응전문가 정책협의체 구성(하반기)

* 업계의 신기술 개발 단계부터 의제개발, 교섭 등 국제표준화 과정 전반 지원

** IMO 제106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승인 및 채택 추진

□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 사전준비*, 모의감사(6월), 미비사항 보완(~9월), 정보시스템 최신화(~10월) 등을 통한 국제협약 이행 모범국가 도약 추진**

* 타국 감사결과 분석, 감사대응 지침 개발, 국제협약 수용실태 전수점검(~4월) 등

** (목표)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 미비로 인한 지적사항 제로화 달성

□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현황* 파악·관리, '모의 IMO 총회(하반기)', '국제기구 근무 노하우 공유 워크숍**'(하반기) 등 개최, IMO회의체 의장단 진출근거 마련 등

* 선박안전, 해양환경 등 분야의 전문지식 및 언어역량을 갖춘 국내전문인력 현황관리

** 국제기구 근무 노하우 공유 등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모의총회와 병행 추진)

5-1 국제해사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1-1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강화를 위해 호주 등 주요국들과 양·다자협의체 구성·운영 기반구축 필요

□ '22년 추진계획

◆ 다양한 해양국가와의 해사안전 정책 및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이익 증진, 국익창출 및 글로벌 동반성장 기여

- (양·다자회의)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아·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APHoMSA), 선진해운그룹(CSG) 참석 등 다자회의 참여·대응

* 덴마크·호주 등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추진, 코로나19 여건 감안하여 영상회의 병행

- (국제워크숍) 국제해사분야 협력의제 등 논의를 위한 한국해사 주간*, H/S호 교훈 도출 국제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장소/대상) 서울 또는 세종(잠정) / 국제기구(IMO, ILO 등), 외국정부 관계자 등

** (장소/대상) 서울 / 국제기금(IOPC Funds) 사무국장 등 국내·외 관계기관 담당자

- (해사장관회의) 우리부와 IMO 공동으로 사무총장과 회원국(해사분야 장관급 인사)을 초청하여 각 국가의 해사정책 및 미래비전 등 공유

* (장소/대상) 서울 또는 세종(잠정) / 장관님, IMO 사무총장, 회원국 장관급 인사 등

※ IMO 사무국과 협의하여 행사 개최시기, 방법, 참석국가 선정 등 검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상안전 국제협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6021	29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분야 親韓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각국 해사분야 전문가 대상 IMO 교육기관 장학지원* 및 소통체계 구축 필요

* IMO 교육기관: 세계해사대학(WMU, 스웨덴 소재) 국제해사법대학원(IMLI, 말타 소재)

□ '22년 추진계획

◆ IMO 관련 대학(WMU·IMLI) 장학지원 및 장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제해사분야 인재양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장학지원)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WMU, IMLI에 대한 장학사업* 지속 추진

* IMO 기술협력사업으로 매년 WMU, IMLI에 대한 장학지원('04.~'21년, 33개국 59명)

- (소통활성화) 우리나라 지원 장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 동문 소식지 발행(연 2회) 등 소통체계 유지·관리

* △(페이스북) 콘텐츠(사진, 영상 등) 게시·운영, △(카카오톡) 일상적 대화·소통 및 졸업생 참여 독려, △(IMO-KOREA 누리집) WMU 장학생 전용 웹페이지 운영

- (방한연수) WMU·IMLI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 해운·조선 등 해사산업 견학·인턴십 등 추진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상안전 국제협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6021	85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IMO A 이사국 11연임('01.11.~) 등 글로벌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재정기여 및 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

□ '22년 추진계획

◆ IMO 기술협력 사업 및 해사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해사역량 제고 및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IMO 기술협력) 친환경 선박, e-Nav. 등 친환경·디지털 분야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및 새로운 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기술협력위원회 대응) IMO 기술협력위원회(TCC*) 참가하여 사업 추진 성과 등 공유, 추가사업 발굴 등 개도국 의견 수렴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국제해사기구(IMO) 기술협력국에서 주관하는 회의체로서 개도국의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의 내용 및 예산 심의

- (공적개발원조사업) 개도국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공적개발원조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 개발도상국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 온실가스 규제대응 지원 웹포털 구축, △ 해사분야 여성진출 지원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연안국과의 협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6021	85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 e-Nav 도입 촉진 및 아국의 국제 해양 디지털화 선도 등을 위해 개도국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중('18~)

□ '22년 추진계획

◆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역량 강화 워크숍) 아·태지역 개도국의 e-Nav 도입 촉진,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11월)

*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 11월 / 세종(잠정) / 아·태지역 개도국(약 13개국)

- 한국형 바다 내비게이션 소개, 해양 디지털 분야 국제동향 공유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43	1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 해적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해적사건은 국가별 복합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해적으로부터 우리선원·선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국제적 대응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필요
- * 최근 5년간('17~'21년) 총 870건의 해적사건, 915명의 인명피해(사망·부상·납치 등) 발생
- ** 최근 우리국민 피해: ('18년) 1건, 3명 피랍, ('20년) 3건, 8명 피랍, ('21년) 2건, 5명 피랍

□ '22년 추진계획

◆ 해적피해 예방 및 해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선원 및 선박의 안전 확보

- (국제회의 대응)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ReCAAP) 및 국제해사 위성기구(IMSO)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 대응
 - (ReCAAP) 관리이사회, 역량강화세미나 등 회의 대응 및 행사 참여, 사무국(정보공유센터) 운영인력 파견(1명) 등
 - (IMSO) 관리이사회 및 아국 LRIT 데이터 센터 연차감사(3월) 대응
- (해적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서아프리카 연안국 해상보안 종사자 초청 워크숍 개최*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우리부, 외교부, IMO 공동)
 -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여부 최종결정 예정
- (국제사회 기여) 말라카·싱가포르 해역협의체 해양안전협력 기금(ANF)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국제상공회의소 해적정보센터 및 ReCAAP, IMB-PRC 등 해적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매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국제협력 기반 해적피해 예방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1 044-200-5854	270백만원*

* ANF 기여금(100백만원), ReCAAP 기여금(150백만원), IMB-PRC 기여금(20백만원)

5-2 국제표준화 주도

5-2-1 연구개발(R&D) 기반 정부 주도 정책과 연계한 의제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디지털 등 해사산업의 주요 기술기준 선점을 위해 친환경 선박 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친환경선박 연구개발('22~'31, 2,540억원),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20~'25, 1,603억원)

□ '22년 추진계획

◆ 해사분야 국가 주도형 연구 개발(R&D) 사업과 연계한 국제 표준 의제 발굴로 국내 개발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토대 조성

- (전문가 지원) 연구개발 과정에 IMO 의제작성·회의대응 등 IMO 대응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참여·지원(상반기~)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의 연구원 등

- (정책자문) 국내 산업계·연구개발 기관 등에서 IMO 대응절차(메뉴얼 등)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진 자문* 추진(하반기)

* KMC 고문과 관계기관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국제해사분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정책수립) IMO 규제를 활용한 해운·조선산업 기술기준 선점, 규제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해 민·관 협력방안 마련(3월)

- (국제표준화지원단) 국내 유망기술 발굴, 국제표준화 전략수립 및 IMO 의제 제출 및 회의대응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도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IMO전담 대응체계 운영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5	990백만원
친환경선박 상용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45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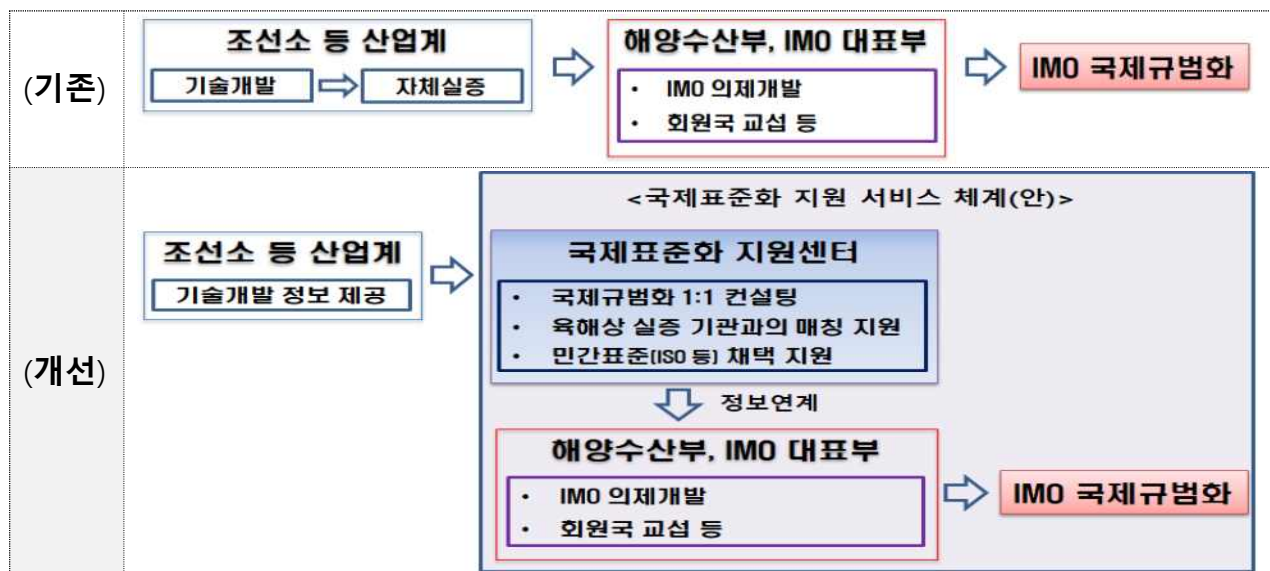
-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선소 등 해사 산업계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지원

* <성공사례> ① 선박평형수 처리설비(10년간 1조8,596억수출) ② 선박용 LNG 신소재(POSCO 고망간강) 인정(연간 500억 매출전망)

□ '22년 추진계획

- ◆ IMO 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유망기술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체계구축) 해사분야 신기술 개발 단계부터 IMO를 활용한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1:1 원스톱 서비스 추진(산업계와 협업체계 구축, ~12월)



* '국제표준화 지원센터'는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의 기능 확대를 통해 운영

- (기술발굴) 조선소 등 해사산업계가 개발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의제개발, 교섭 등을 통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지원(계속)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IMO 전략대응 연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5	609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16.5월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포스코)이 개발한 고망간강을 LNG 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필요성을 IMO에 제안
 - * ('18.12) '제100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에서 '고망간강 잠정지침(Interim Guideline)' 승인, 각 기국에서는 동 지침 따라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 제작·검사 가능
- (필요성) 고망간강 잠정지침을 IGC·IGF code에 반영하여 국제표준화함으로써 해양기자재 신소재 분야에서 국제 선도 기대
 - 실증선박 활용 및 기술검증 실적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확증함으로써 '국제표준화(Interim Guideline→Guideline)' 추진중

□ '22년 추진계획

◆ 고망간강 잠정지침을 공식기준화 논의 및 IMO 제105차 해사안전위원회내 승인 및 채택 추진(~11월)

- (적합성 실험) 액화암모니아 운송을 위한 고망간강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8차 화물·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에 제출(9월)
 - * 고망간강 소재 탱크에 적재 가능 화물: 메탄(LNG), 에탄, 부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국내 해사산업계 개발 유망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 등 산업표준 제개정 담당 국제기구 대응 필요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TC8(선박·해양기술위원회), ICE(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TC80(해양항해 및 무선통신위원회)

□ '22년 추진계획

◆ IMO, ISO, IEC, IALA 등 해사산업 국제표준을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해사산업 분야 기술기준 조기 선점

- (전문가 풀) 기존 IMO 회의체 대응 중심의 전문가 풀을 ISO·IEC·IALA 등 국제해사분야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로 확대('22.3)

- (전문가 협의체) 친환경·디지털 등 국제기구의 공통 아젠다 대응을 위한 통합의제 개발 등 국제해사분야 표준 선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해사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IMO·ISO·IEC·IALA 등 해사분야 국제기구를 대응하는 전문가들의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하반기)

* 한국해사주간(하반기)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 정기 협의체(포럼 등) 운영

- (국제기구 진출) 국제해사분야 동향 파악 및 해사산업 표준 선점을 위해 IS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의 진출 확대*(12월)

* 고용휴직 제도 등을 통해 ISO, ICE 등 해사산업 관련 국제기구 진출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국제표준화기구 등 산업표준 선점·주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5	225백만원

5-3 IMO 전문 대응체계 고도화

5-3-1 정부차원의 IMO 대응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IMO 新규제를 활용한 해운·조선산업 기술기준* 선점, 규제 대응방안 모색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해사분야 정책역량 강화 필요

* 온실가스 감축 72조원, 대기오염 저감 20조원, e-Nav 240조원, 자율운항선박 23조원

※ (타부처 사례) 국토교통부의 경우 민간항공기구(ICAO) 대응 전담을 위해 항공정책실 내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운영

□ '22년 추진계획

◆ 정부간 기구인 IMO를 활용한 해사산업 표준 선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정부의 IMO 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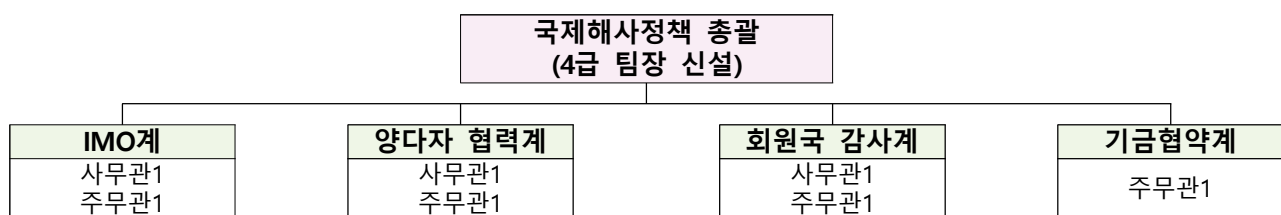
- (IMO 대표부) 대표부가 현지(런던) 국제해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외교 교섭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컨퍼런스, 정기 리셉션 등 현지 외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2명) 확보 추진(12월)

※ 컨퍼런스 등 대표부 사업(300백만원) 및 행정인력(80백만원) 지원예산 확보 추진(1월~)

- (국내 전담조직) IMO 대응, 회원국 감사, 양다자 협력 등 국제해사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해사팀' 신설('22년 정시직제 협의 중)

<국제해사팀 업무체계(안)>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정부차원의 IMO 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5	-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IMO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사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해사분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IMO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 (협력 플랫폼) 학계.연구기관에서 축적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이 상호 공유.축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상반기)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연구인력(2명) 증원, 전문가 지원 내부규정 정비 등 국제해사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 (공동 연구) IMO 의제선도 및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간(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공동연구 추진
 - * (과제명/기간) 국제 규제.표준개발 선도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및 기술기반 의제 개발 연구 / '21~'25, 25억원(연 5억원)
- (산업계 참여) 한국해사주간 등 해사분야 국제 컨퍼런스에 해운·조선 등 국내외 해사산업계* 참여 추진(하반기)

* 선사, 중소·대형 조선소, 기자재업체, 해운대리점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국제해사 산.학.연 협력 플랫폼 활성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 배경 및 필요성

- IMO, IOPC 펀드 관련 업무의 연속성.체계성 증대를 위해 국제해사분야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기반 강화 필요

□ '22년 추진계획

◆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육성, 해사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국익 창출에 기여

- (IMO 대응지침) IMO 회의체 대응 및 해사산업 육성, 전문가 양성 등 국제해사분야 정책 수립·시행 관련 업무지침 개정(하반기)

*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62호)

- (전문가 지원근거) IMO 회의체 의장단(의장·부의장) 지원, 의제분석 등에 대한 자문비 지원 등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가칭) 국제협력전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KMC 내부규정)' 제정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국제해사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

□ 배경 및 필요성

- '22.11월 예정된 IMO 회원국감사(IMSAS*)의 성공적인 수감을 통해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협약 이행 모범국가 지위확보 필요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7년 주기)

□ '22년 추진계획

◆ IMSAS 및 협약이행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사분야 관련 법령 정비체계 고도화 및 IMSAS 지원체계 마련

- (사전준비) 타국 감사결과 분석 및 감사대응 지침 개발, 국제협약 수용실태 전수점검(~4월), 정보시스템* 최신화(~10월) 추진

* 국제협약의 국내법령 반영실태 확인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DB 시스템('20년~)

- (중간점검) 원격방식 모의감사(6월) 및 미비사항 보완(~9월)

※ 본 감사 전 감사 준비사항 최종 확인('22.10)

- (감사대응) 감사 진행상황 공유 등을 위한 관계기관 일일 점검 회의 개최 및 조치 가능한 지적사항 즉시 시정조치(11월)

※ 감사팀과 최종 합의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계획서 작성·송부(~'23.2)

- (검사기관 사전점검) IMSAS 대비, 정부대행 검사업무에 대한 기관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사전점검* 추진

* IMO 협약이행코드(III)에서 요구하는 대행기관 조직·체계 및 품질관리 필요

- 4개* 검사기관 자체점검반 구성 및 RO 코드 조항별 자격·기술요건 자체점검(~8월) → IMSAS 대비 검사기관 정기 지도감독 실시(하반기)

* (선박검사) KR, BV 및 KOMSA / (위험물검사) 해사위험물검사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IMO 회원국감사 모범국가 도약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100백만원
검사기관 사전점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

5-4 글로벌 해사전문인력 양성 확대

5-4-1 IMO 사무국 내 인력진출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해사산업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해운·조선 등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MO 사무국 내 우리부 직원 진출 확대 추진

□ '22년 추진계획

◆ IMO의 기구 운영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분야 전문가의 IMO 사무국 진출 확대

- (국제기구 고용휴직) 인사처 주관 국제기구 고용휴직(IMO 사무국) 직위 신설(P4, 1명)에 따라 국제기구 파견을 위한 교섭 등 추진(2월~)
- (IMO 사무국 인력현황) 신규채용 현황 및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향후 채용계획 등 IMO 사무국의 인력 운용현황 실시간 관리(계속)
 - * IMO 채용공고 및 사무국 내 우리나라 직원 등을 통해 사무국 인사정보 수시 확인(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 (전문인력 풀) 국제기구에 진출 가능한 언어역량과 조선·해운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제해사분야 전문가 현황 파악·관리(계속)
- (전문인력 양성) 대학생 등 청년의 IMO 진출 독려를 위한 '모의 IMO 총회(하반기)', '국제기구 근무 노하우 공유 워크숍(하반기)*' 등 개최

* 국제기구 근무 노하우 공유 등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모의총회와 병행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IMO 사무국 내 인력진출 확대 (IMO 대응체제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5	1,099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IMO 회의에서 국내 해사산업계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개진·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인 출신의 IMO 회의체 의장단* 양성 필요

□ '22년 추진계획

◆ IMO 위원회·전문위원회·작업반 등의 의장단에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진출을 위한 전략마련 및 후보군 선발제도 운영으로 의장단 배출

- (전문가 관리) 선박안전, 해양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전문지식 및 언어역량(영어) 등을 갖춘 국내 전문가 인력풀 파악*.관리**(상반기)

* 산하기관 등에 분야별 전문가 추천 요청(~'22.3) → 전문가 명단 확정(~4월)

** IMO 회의체 작업반 참여경력 등이 있는 전문가는 IMO 회의 대표단으로 지속 임명하는 등 해당 전문가의 IMO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

- (지원체계 마련) 국내 전문가의 IMO 회의체 의장단 진출을 장려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상반기)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위탁사업비 활용, 전문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국제무대 진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타국제기구(UN, ISO 등) 활동 경험 및 국제컨퍼런스 참여(좌장, 토론자 등) 기회 제공(하반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IMO 회의체 의장단 배출 지원 (IMO 전담 대응체제 운영사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44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IMO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해사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인적자원 확보 필요

□ '22년 추진계획

◆ 국제해사분야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전문교육 활용) 총회, 이사회 등 IMO 회의체 진행방식, 발언문 분석 및 대응사례 등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하반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네트워크 구축) 한국해사주간 등을 통해 국내 전문가를 세션의 좌장으로 활용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하반기)
- (인재양성 기반) 해운.조선 등 국제해사산업 및 IMO에 진출할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모의 IMO 총회 개최(하반기)

* 코로나19 여건 등을 고려하여 IMO 건물 및 IMO 대표부 견학기회 제공 등 검토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한국해사주간 및 모의 IMO 총회 개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8	325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문화 정착과 기술 정책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요원의 역량 강화 필요
- 연수원의 교육요원 대상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고급 교육자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22년 추진계획

◆ 소속 교육요원의 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요원 연수(세계 해사대학 WMU 등) 지원

- 교육요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도모
- 국제회의 대응, 국제협력사업 수행, 해사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글로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요원 연수 추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교육요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기획실)	051-620-5501	100백만원

Ⅵ.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부 산 광 역 시

Ⅰ.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월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7,316	3,558(174)	무역항 3, 연안항 3, 지방어항 13, 기타포구 32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4대 전략 과제명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30	5,837
1. 안전한 해양 질서 마련	2	997
2. 부산시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 확립	17	4,244
3. 맞춤형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5	406
4. 부산시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6	190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항내 계류선박 현황조사(6회) 및 전수조사(6회), 어선원 (3,885명)·어선(1,111척) 재해보상보험, 어업인(756명) 안전보험 지원 사업 추진(1월~)
- (전략 2) 부산남항 해상안전센터 운영(SNS활용) 추진,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추진(6월, 11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유류비 및 활동비 등), 해양시설 합동 안전점검(14개소, 2회), 어항 안전 기반시설 구축(14개소), 소형어선(10톤 미만) 안전설비(구명·소방

장치 등) 지원사업 추진, 방치선박 제거조치(10척),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지원(32개 어촌계, 1,150척), 낚시어선 및 어선 안전관리 (월 50척, 12개 점검반), 지방관공선 현황 및 실태조사(25척, 연 1회), 수상레저활동 안전점검(6월~10월) 실시, 해양재난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지도(9개기관, 11개 구·군),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2월~) 추진 등

- (전략 3) 해상안전정보 수신대상 확대(선장,선주→항만업무종사자, 매월1회, 유선·문자), 선내무선전화(VHF) 안내방송(기상·사고정보 등) 실시간제공(1월~), 항내 소형선박 ‘고유 식별번호 부여’ 운영(46척)
- (전략 4) 청소년바다안전 체험학습 추진(연 15회/450여명), 해양환경, 교육위원회 회의 개최(2회), 해양안전엑스포개최(9월), 현장 중심 안전조업지도 추진(400여척)

II. 2022년 시행계획

1-3-1 해양사고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일상·관행적 운항, 운항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 부산남항 선박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주, 선장, 선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해사안전 의식제고 및 기본 주의 사항 전달
 - 대형해양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기반 조성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운항종사자 등)이 전파의 매개가 될 가능성 잠재, 주이용 선박 비대면(Un-tact) 업무활성화 추진

□ 추진계획

- ◆ '22년 목표(안전교육 3회, 협의회 2회, 리플릿 배포 등(700여장), 만족도조사 1회)
- ◆ 親 해양안전문화 확산으로 부산남항 이용관계자와 소통환경 구축
-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업무체계 확립

- 「부산남항해상안전센터」 해양안전문화 홍보 및 사고 방지 캠페인 추진
 - 계절별 사고유형·사고정보·기본 안전수칙 등 교육자료 제작 배포
- 해상안전관리센터 전용 SNS(카카오플러스친구) 활성화 방안 마련
 - SNS 비대면 업무 활성화 ▶ 현장사진 첨부 문자발송으로 해양사고 예방
- 해사안전 홍보 및 통항신호등 운영(연중무휴)으로 안전인식 개선
- 지방 관공선 활용 현장중심의 안전사고예방 제도 및 순찰 강화
- 신속한 재난 및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사고 예방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0.5백만원

가.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 충돌·침몰사고 발생에 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난대응 태세 확립 및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시 주도의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및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사고발생시 피해저감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 부산항 통합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추진(상반기, 하반기)
 -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해양경찰서) 공동주관

- 훈련장소 : 부산항 인근 해상
- 주관 :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해경서) 공동주관
- 예산 : 10,000천원(시비)
- 참가 : 부산광역시 등 10개 기관/약 400여명
- 내용 : 선박 충돌·침수 부상자 및 익수자 인명구조/해양오염방제

나.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추진계획

-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예산액 범위 내 지원
- 예산액 : 20,560천원, 지원내용 :유류비 및 활동비 등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 예산액 : 20,560천원(시비) ▶ 유류비 및 활동비 등
- 지원대상 : 부산시 시역 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 해상부유물 신속 처리로 선박손상 및 해난사고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 조선소 선가대 선박 받침목, 페로프 등 수중 표류 부유물로 인한 선박 안전 통항 저해

□ 추진계획

- ◆ 수중 대형부유물 신속 제거로 항내 해양사고 요인 사전 제거

- 수리선박 상·하가 시 선박 받침목 해상유입 방지 현장 지도
- 부산남항 유입 하천 오물걸림망 설치
- 항내 통항·계류 선박의 쓰레기 해상투기 감시 및 단속
- 청항선 운항을 통한 해상 청소실시
- 물양장 쓰레기 해상유입 방지 정화 활동

라. 부산남항 해양시설 점검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시설(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2개소 안전점검 실시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2항

○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반기별)을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

《 주요점검항목 》

-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 저장탱크 및 연결관의 결합상태
- 소화 설비, 방제 자재 등 비치 여부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현행화 여부
- 기름 유출사고 발생시 신고·보고 체계
-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상태

□ 추진계획

◆ 정기적인 해양시설 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부산남항 해양시설(수리조선소 등) 14개소 점검 실시 (연 1회)

○ 취약시간대 해양오염행위 순찰(월 1회 이상)

마. 어항시설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어항시설 구축, 소형어선 인양기 등 어선안전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어선 및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

□ 추진계획

◆ 어선안전 기반 시설 구축(14개 세부사업, 3,722백만원) 추진

○ 사업내역

분류	위치	사업내용	예산
연안항	부산 남항	해안새벽시장 전면 물양장 확충('22~'25)	1,099백만원
		돌제부두 전면 물양장 확충('22~'25)	567백만원
지방어항 건설	월내항	어항정비(계선주 등) L=400m, 항내준설 V=4,000m³	500백만원
	두호항	항내준설 V=4,100m³	300백만원
	동백항	동방파제 설치 실시설계	200백만원
소규모어항 건설	용호항	계선주 정비 N=10주	20백만원
	중동항	방파제 보강 L=35m	335백만원
지방어항 보수 등	우동항	어항시설 보수 및 등대관리 1식	11백만원
	송정항	물양장 방충재 정비 N=50EA	40백만원
어항시설물 정비	동리항	부잔교 설치 L=30m, B=3m	200백만원
	민락항	안전난간 교체 L=1,000m, 어항유지관리 1식	300백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순아항	인양기설치 1기	50백만원
	민락항	인양기설치 1기	50백만원
	칠암항	인양기설치 1기	50백만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사고 대응 종합훈련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10 백만원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20.56 백만원
항행장애물 적기제거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1	-
해양시설 점검강화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1	-
어항시설 기반 구축	건설본부	051-888-6161	1,666 백만원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051-888-5424	2,056 백만원

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어업생산의 활성화와 유류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경쟁력 향상 도모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국·시비를 구·군에 교부하여 사업 지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물품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LED등 포함)
 - 총사업비 : 1,067백만원(국비30% 시비30% 자부담 40%)
 - 추진계획 : 구·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10개 구·군)

나. 방치선박 정리지원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야간방치 조기 발견 애로, 선주 잠적 등 방치에 의한 2차적 해양 오염 유발 및 연안어선 안전운항 장애

□ 추진계획

◆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로 2차적 해양오염 예방 및 연안 수역에 대한 어선의 안전한 항로 확보.

○ 방치선박 정리지원 추진

- 규모 : 10척/26백만원(시비 19.5, 구비 6.5)

* 사하구 : 2~5톤 3척/13백만원, 강서구 : 3톤 미만 7척/13백만원

다. 장기계류 및 요주의 선박 관리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장기계류 노후선박에 의한 요주의선박(관리부실, 장기계류) 다수 발생
- 선박 기관 노후화, 연료유 불연소 등의 선박 매연으로 항만 대기 오염 발생
- 항만 주변 주거구역 주민민원 및 통항 선박 안전운항에 장애 발생

□ 추진계획

- ◆ 항내 요주의·방치선박 현황조사(연4회, 분기별) 실시
- ◆ 요주의 선박 발생 여부 조사 및 요주의선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 철저
- ◆ 부산남항 계류선박 시운전 등 매연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비상연락, 선박이동)로 민원발생 저감

- 요주의선박 관리 철저로 항내 방치선박 발생 예방 및 관리부실, 장기계류선박 발생 최소화
- 항내 계류하면서 화기 작업 수리 행위 방지 및 미세먼지, 시운전 매연 발생 최소화 제도
- 항내 방치선박 발생 시 대집행 등 조치

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설치기피 우려어선에 설치된 안전장비 중 노후 장비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 추진계획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시비를 구·군에 교부하여 사업 지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사업대상 :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사업주체 : 5개 구·군 ▶ 남구, 사하구, 수영구, 강서구, 기장군
- 사업량 : 안전장비 34개 / 7개 품목*

* ① (레이더) 4대/ 41,350천원, ② (자동조타기) 1대/ 4,240천원, ③ (AIS) 1대/2,810천원 ④ (GPS플로터겸어탐기) 15대/42,270천원, ⑤ (무전기) 1대/950천원, ⑥ (구명조끼) 10벌/1,150천원, ⑦ (선미관 메카니컬 실) 2대/6,430천원

- 총사업비 : 99,200천원(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추진계획 : 구·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마.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교통 여건이 취약한 어촌지역 어선(선외기)에 대하여 정기적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하여 해난사고 사전 예방

- '21년 추진실적 : 32개 어촌계* 229회 운영, 어선 1,106척 지원

* 기장군 18개소, 강서구 14개소(가덕도 5개소, 가덕도 외 9개소)

□ 추진계획

◆ 목표 : 32개 어촌계 월 1회(3월~11월) 찾아가는 이동수리소 운영
※ 선외기 어선 무상 점검·수리 진행, 어선 1,150척 부품교체비 지원

○ 사업기간 : '22. 3 ~ 11월(7월 제외)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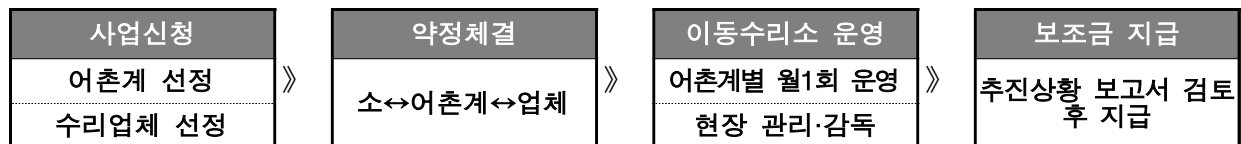
○ 사업대상 : 강서구(가덕도), 기장군 어촌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어업용기자재 무상점검 및 수리, 소규모 부품교체비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2회 20만원 이내, 2회 지원

○ 추진절차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수산정책과	051-888-5401	320백만원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		051-888-5404	26백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051-888-5414	29.7 백만원 (국비 29.7 백만원)
장기계류 및 요주의 선박 관리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2	64 백만원
이동수리소 운영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팀	051-209-0939	50 백만원 (국비 50 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람선)의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다중이용선박 해난사고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
-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다중이용선박 피해 최소화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위기대응 능력제고

□ 추진계획

- ◆ 관내 신고 다중이용선박 월별·분기별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 자체 현장 중심형 어선안전점검반 편성 안전점검 실시

- 분기별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 지속적 실시(어선안전점검반 활용)
 - 분기별 신고 낚시어선 안전점검실시(점검대상 : 174척)
 - * '21년 1분기 79척, 2분기 93척, 3분기 76척, 4분기 103척 점검 실시
 - ** 안전장비 비치(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 또는 공제가입,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
-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 유관기관(해수부, 시, 구·군,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의 공조 체제를 통한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 유관기관(부산해양경찰서, 시, 구·군)의 공조 체제를 통한 관광유람선 합동 안전점검 참여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낚시어선 및 관광유람선)
 -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실시

나. 선박(어선)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안전점검을 통해 어선사고 위해요소 제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 추진계획

◆ 어선안전점검반(12개반) 운영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어선안전 점검, 사고 위해요소 사전차단(월 50여척 점검)

-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 점검반 : 12개반 28명, 어업지도선 7척
 - 점검항목 : 구명장비, 구명부환, 구명뗏목, 소화기 비상통신기, 등화, 기적 등
 - 점검방법
 - * 육상 안전점검 : 관내 어촌계와 협의, 안전점검 및 교육 병행 실시
 - 추진계획 : 매월 연근해어선 약 50척 점검

다. 지방관공선 안전관리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선박의 선체 및 기관 등에 대한 노후도와 결함성 등을 사전 확인을 통해 지방관공선 안전운항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지방관공선 기관별 자체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연 1회)

- 지방관공선 보유 기관(시·사업소, 구, 군) 자체 조사 실시

○ 지방관공선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25척)

- 총 25척(시 2척, 사업소 10척, 구·군 13척)

* 어업지도선(8척), 해양정화선(1척), 자연보호선(7척), 청소선(5척), 행정선(2척), 기타(2척)

라.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추진

* '21.9.기준 부산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 1,990대(전국 33,335대의 6%)

□ 추진계획

◆ 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전 사고 예방

○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점검(7~8월)

- 대상 :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2개소(화명·삼락)

- 내용 : 사업장 기구·시설·장비 등 점검

- 점검반 : 시, 관할구, 해양경찰 합동 점검

○ (성수기 후)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점검

- 대상 :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2개소(화명·삼락)

- 내용 : 사업장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사항 지도 감독

- 점검반 : 시, 관할구, 해양경찰, 합동 점검

○ (연중 상시)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점검

- 대상 :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2개소(화명·삼락)

- 내용 : 태풍, 호우 등 기상이변 시 수시점검, 특별점검

- 점검반 : 시, 관할구,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수산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	051-888-5411 051-888-5367	-
월별 연근해어선 안전점검	수산정책과	051-888-5411	1.9백만원
지방관공선 안전관리 마련	시,사업소,구·군별 해당 부서	051-888-5282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해양레저관광과	051-888-5367	-

가. 연근해 어선사고 대응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 어선사고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기관간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어선사고 대응 체계 구축

- 개정 요인발생 시 즉시 개정(“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현장적용이 가능토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20.8월)
 - * 재난대응 프로세스별 행동요령 개선(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
- 사고 인원 따라 관심(위기징후), 주의(5인이하), 경계(5~9인), 심각(10인 이상) 4단계 대응기준 운영
 - * 우리시 선적 사고시, 사고발생 해역 지자체에 부산시 조정관 파견 현장지원

나. 해양재난 매뉴얼 통합 지도·점검

□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초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 실태 지도·점검으로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실태 점검
- ◆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기반구축

- 점검대상 : 부산시 9개 기관(부서) 및 11개 구·군
- 재난유형 : 해양 선박사고, 해양오염, 조수 등(해수부 소관)
- 점검내용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작성·운영실태 점검
- 중점점검사항
 - 해양재난 매뉴얼 보유현황 및 비상연락망 정비 현황
 -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간결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매뉴얼 구성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연근해 어선사고 대응체계 구축	수산정책과	051-888-5412	-
해양재난 매뉴얼 통합 지도·점검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

가. 낙동강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

□ 배경 및 필요성

-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로 어선 안전항로 확보 ☞ 어업인 건의사항 해소

□ 추진계획

◆ 낙동강 하구의 토사 퇴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2차) 추진

- 사업대상 : 다대포해수욕장 앞 ~ 도요등 하단부 수역
- 사업기간 : '22. 1 ~ 12월
- 사업비 : 400백만원(국비)
- 추진목표 : 다대포해수욕장 앞 ~ 도요등 하단부 수역 준설
- 세부 추진계획
 - '22.2월 : 간이해역 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 '22.3월 : 준설(3차) 예산(10억, 국비) 요구(구→부산항건설사무소)
 - '22.6월 ~ : 실시설계 완료 및 준설공사 입찰 등 절차 이행
 - '23.4~6월 : 준설공사 시행 (해수욕장 시즌(7~8월) 및 김양식 기간(10~3월) 제외)

나. 조선소 상하가 작업 알림 및 통항선박 안전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 주통항로 및 방파제 부근 교통 혼잡도가 높은 장소에 수리조선소 운영

- 수리 조선소 상·하가를 위한 자력운항불가 선박(DEAD SHIP)의 입·출항이 매우 빈번한 해역으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
- 수리선박 상·하가 작업 중 통항중인 선박과 충돌 위험이 따르며 주변 교통흐름 지장 초래 및 통항선박 안전성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 조선소 상·하가작업 선박, 예인선과 실시간 교신 실시
- ◆ 유람선 운항시간 및 통항선박이 많은 시간대 상·하가 자제요청
- ◆ 조선소 및 작업 예인선사 방문을 통한 시스템개선 등 업무체계 정립

- 수리선박 상·하가 스케줄 수신(매일 오전 10:00)
- 상·하가 정보제공 및 전파 : 상·하가 1시간 전(1차), 30분전(2차)
- 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수리조선소(13개소), 작업 예인선사(5개소)와 협업체계 강화 추진

다. ICT(TTS연동) 기반 상황별 자동항행정보서비스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통항선박 대형화, 다양화, 좁은 해역 이용 증가 등 해상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ICT 기반 맞춤형 해사안전정보' 수요 증대
-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해상교통 밀집해역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 ICT 기반 상황별 자동항행정보서비스 운영실적('21년 : 655건 / '22년 목표 : 700건)
- ◆ 수요자 중심의 부산남항 관리 VHF 채널 74번 통신환경 및 소통 기반 마련
- ◆ 클라우드 기반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 자동항행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로 데이터 기반 업무 프로세서 개선

- 항만이용자들의 입장의 실시간 해상상황 정보 및 부산남항 특성에 맞는 법령정보(항법 등)공유를 통해 일방적 정보제공 체계 탈피
- 비상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실시간 항행안전정보 제공으로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및 해양사고 감소 여건 마련
- 항내 해상교통 폭주 시간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알림서비스 추진

라. 맞춤형 해상안전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의 맞춤형 해상안전정보를 항만이용 종사자들에게 제공
- 일방적 제공방식을 벗어나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환경 구축

□ 추진계획

- ◆ 맞춤형 해상안전정보 제공('21년 : 73,000여건 / '22년 목표 : 74,000여건)
- ◆ 부산남항을 이용하는 모든 종사자 및 기관·단체로 대상 확대
- ◆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개선으로 필요한 정보 접속 등 수시 확인

- 기존 선장, 선주에 제공되는 정보에서 항만이용 모든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안전정보로 확대 제공
-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항행안전 정보제공
-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안전조치 정보 공유·실시간 업무소통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경제진흥과	051-220-4492	400백만원 (국비 400백만원)
조선소 상하가 알림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
ICT 기반 상황별 자동항행정보서비스 운영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
맞춤형 해상안전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30	-

□ 배경 및 필요성

- 부산남항은 항만의 크기는 작지만, 해상교통량(1일 평균 800여척/소형선박 45% 차지)이 무역항 보다 매우 복잡하고 해양사고 발생 위험 상존
- 부산남항 주이용 소형선박(항내운항선)과 급유선 선박충돌 후 인명 사고 발생으로 '소형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부산남항 내 해양사고 중 소형선박 해양사고 비율 (50% 이상) 차지
- 식별 모호한 표기로 신속한 초동조치 불가, 무선통신장비 법적 비치의무 면제대상, 일상적·관행적 운항으로 대형 인명사고 우려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 시범운영 '21.12.(20척), 본운영 '22목표(46척), 단계적 추진 계획
- ◆ 주·야간 시간대 원거리 식별이 가능하고 선박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해양환경(해수 염분 등)에 적합한 『고유 식별번호/반사 시트』 부착
- ◆ 부산남항 내 소형선박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 해소

- 저예산으로 중·장기적 해상교통 환경 개선 및 해양사고 저감 여건 마련
-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구조시간 단축 등)로 인명사고 최소화
- 소형선박 인명피해 'Zero' 달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관리카드, CCTV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부산남항 내 소형선박 '고유 식별번호 부여' 운영	남항관리사업소	051-250-9528	6백만원

가. 청소년 바다안전 체험학습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 교훈으로 '선상안전교육' 필요성 대두
- 학생의 해양·수산분야 진로설계 기회 제공, 차세대 해양인력 육성기여

□ 추진계획

- ◆ 부산 관내 중학생 대상 선상(어업지도선) 안전체험학습 실시
 - '21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체험학습 미추진

○ 청소년 바다안전 체험학습 추진

- 대 상 : 부산관내 중학생(171개교, 75,357명), 교원 등
- 장 소 : 부산 제5부두, 어업지도선(부비호) 선상
- * 협력기관 : 항만소방서, 한국해양구조협회
- 운 영 : 연 15회, 450여명 체험 실시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 계획

- 부산시 : 선박내 안전수칙 구명동의 착용법 구명뗏목 작동법 소화기 사용법 등
- 항만소방서 : 심폐소생술 교육
- 한국해양구조협회 : 위기상황 발생 시 퇴선요령 및 피난 시범교육
- 해상견학 : 북항 일원(5부두→부산항대교→해양박물관→신선대부두→5부두)

나. 부산시 해양환경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민·관·학 협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위원회 구성
- 해양환경 관리 주요정책 수립 시 관련 자문
- 현장 중심의 해양환경 정책 발굴 및 시민체감 정책 추진

□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2회)

-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 심의·자문
- 해양쓰레기 저감 등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개발과 자문
-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자문

다. 부산시 해양교육협의회 구성·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의 해양의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참여형 위원회 구성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정책 발굴 및 시민체감 정책 추진

□ 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협의회 회의 개최(2회)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및 교육청의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역할 분담 및 조정
- 해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자원의 연계 및 활용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청소년 바다안전 체험학습	수산정책과	051-888-5411	1백만원
해양환경, 교육·문화 위원회 활성화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62 051-888-5281	7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각종 대회 및 체험 활동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성 증대

□ 추진계획

◆ 일반시민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활동 안전교육 실시

- 해양레포츠체험 프로그램 안전교육 ▶ 주관 : 부산요트협회
 - 기간/장소 : 2022년 중 / 수영만요트경기장
 - 대상 :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학생, 일반인)
 - 내용 : 해양레포츠체험 및 수상레저 안전·응급처치 교육 등
- 초등·중등 수상레저 안전교육 ▶ 주관 : 대한인명구조협회(부산지회)
 - 기간/장소 : 2022년 중 / 초·중등 수상안전체험교실
 -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 내용 : 수상인명구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교육
-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교육 ▶ 주관 : 관할 자치구
 - 기간/장소 : 연중 수시 / 화명·삼락 수상레포츠타운
 - 대상 : 수상레저 사업장 사업자 및 종사자
 - 내용 : 수상레저 안전수칙, 견인·피견인 기구 안전교육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해양레저활동 안전문화 확산	해양레저관광과	051-888-5367	-

가. 해양안전 교육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취약 장비·작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안전인식 제고
-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관련 실태조사 등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의 지속 추진 및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 각종 행사 시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교육·홍보·캠페인 등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
- ◆ 안전재해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 「어선안전의 날」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문화 확산(매월)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홍보·캠페인 등
 - * 지방정부, 구.군,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기상청, KOMSA, 어업정보통신국 등
-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으로 안전재해예방 기반 구축
 - 실행체계 및 환류시스템 정비를 통한 안전재해 예방 기반 구축
 - 안전사고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재해 저감
 -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나. 2022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 배경 및 필요성

-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시민적 해양안전 의식제고
-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의 장 마련

□ 추진계획

◆ 해양안전에 특화된 『2022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 사업명 : 2022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 기간/장소 : 2022. 9월중(3일간)/백스코 제1전시장 및 컨벤션홀
- 전시규모 : 11,164m² (150개사, 420부스)
- 사업내용 : 해양안전 산업전, 사고예방 홍보전, 컨퍼런스 등

다. 현장 중심 육·해상 안전조업지도

□ 배경 및 필요성

- 인적과실(충돌, 기관고장)로 인한 어선사고는 약 75%로 높은 비율 차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중심 지도 활동 필요
- 어업인 고령화(50대 이상 84%)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 정보 습득 한계,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통한 어선사고 예방 도모

□ 추진계획

◆ 목표 : 어업지도선 활동 연계 어선 안전조업지도 연400척 이상

- 범위 : (육상) 항·포구 48개소, (해상) 2,361km²

- 어업지도선 : 1척(374톤)
- 지도계획 : 연 400척 이상
 - (육상) 항·포구 육상단속 시 어업인 등 대상 지도
 - (해상) 어업지도선 활동 시 조업·항해 어선 대상 지도
- 지도내용 : 관계법령 개정사항,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관련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해양안전 교육 확대	수산정책과	051-888-5414	2.06백만원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지원	해양수도정책과	051-888-5282	180백만원 (국비 180백만원)
현장 중심 육·해상 안전조업지도	수산정책과	051-888-5412	-

인천광역시

I. 개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8,251	1,470(205)	무역항 2, 연안항 2, 지방어항 15, 기타포구 77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6대 전략 과제명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9	6,574
1. 해상에서 국민안전 확보 및 체계 조성	4	1,294
2. 국민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4	330
3. 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따른 해사산업의 지속발전	1	4,950
4. 조화로운 해상교통환경 조성	-	-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낚시어선) 분야, 계절별 해양사고교통안전대책 등 수립·시행(연4회),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지대책반 운영(봄·가을어기), 어선 안전설비 지원 및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선종별(유·도선 / 일반선박 / 근해어선 등)해양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연중) 및 사고매뉴얼 숙달 훈련(11~12월)

* 4개사업 : 어선(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250백만원), 어선어업인보험료(728백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267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184백만원)

- (전략 2)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 활동(매월) , 어선어업인 안전 교육(2,189명, 1~12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및 인천국제 해양포럼* 개최, 인천 해양·항만 뉴스센터 운영**

* 국내·외 해양분야 기업, 학계 및 전문가 참여(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주최, 7월)

** (사업내용) 해양항만 각종 정책, 이슈, 홍보 등 보도(경인방송, 150백만원)

- (전략 3)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을 통한 섬지역 연료운반선 건조*

* (사업내용) 400t 급 1척, 5,950백만원, '21~'23, 웅진군 덕적도, 자도

II. 2022년 시행계획

1-2-2 안전 취약지대 지도·감독체계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선박사고 증가로 인한 대상 선박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개선

□ 추진계획

◆ 관내 등록 낚시어선 분기별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 관내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 지속적 실시(어선안전점검반 활용)

* 안전장비 비치현황(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낚시어선 분야)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인천시, 군·구,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 미 수검 어선 및 방치 폐어선 관리

- 미수검 선박 과태료 부과, 방치 폐어선 관리 추진(군·구)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안전 취약지대 지도·감독 강화	수산과	032-440-4864	-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역별, 시기별 집중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사고 예방 및 집중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인명피해 및 빈발·단순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사업 추진

- 인천·경인항 확대 해사안전TF 회의
 - 인천항 해역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연 4회 계절별 해양사고 취약요인 분석, 중점 안전관리 방안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수립·전파
 - * 해경, 검사기관(KR, KOMSA), 어선안전조업국 등 합동대책 마련
 - 계절별 광역·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및 연중 해양사고 저감 TF팀 운영 협조
 - 연평어장 안전조업 현지 대책반 T/F(상·하반기)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인명·빈발 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해양항만과	032-440-4813	-
	수산과	032-440-4863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소형어선이 안전장비 부족, 어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선사고 발생 및 사고 시 대응 능력 약화
- 이에 따라 소형어선, 노후화 어선 등에 대한 장비보급 등 관리 필요

□ 추진계획

◆ 안전관리가 열악한 어선에 대하여 안전설비 지원 강화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양사고 예방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위치 파악, 구명조끼, VHF-DSC 등 안전장비 지속 보급
- (노후 기관·장비 대체) 기관 고장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개량 지원 확대
-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조업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 (이동수리서비스) 도서벽지 등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엔진, 소화·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제공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고위험 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수산과	032-440-4862	1,429백만원

4-2-2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해양안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관련 어업인 대상 해양안전 캠페인의 확대 등 해양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홍보강화)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어선 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 집중 전개
 - 수협 중심 플래카드, 홍보물, 전광판 등을 통한 수시 홍보
 -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 안전장비 점검 등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 강화) 어선사고 발생 다발시기(봄철 4~5월, 겨울철 11~12월)에는 노후어선 등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지자체·수협·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해경 등) 합동 “특별 어선 안전점검” 실시
- (조업정보 서비스 홍보) 어업인 및 어업인 가족에게 어선의 위치 및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개발된 “수협조업정보알리미”(스마트폰용) 앱 배포 및 사용방법 홍보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수산과	032-440-4862	-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 외국인선원,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사각지대 개선

□ 추진계획

◆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교육 내실화 도모

- 교육대상 :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
- 교육시간 : 연 1회/4시간
- 추진일정 : '22.1 ~ 12월
- 교육대상 : 2,189명

구 분	계	인천수협	경인북부수협	웅진수협	영흥수협	비고
교육횟수	25회	11	5	8	1	
계획인원	2,189명	1,000	450	639	100	

○ 교육내용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 시책 등 홍보
- 해상사고 사례별 분석 및 초기대응 교육, 구명설비 운영, 응급처치 등

○ 관계기관 : 수협중앙회, 군·구

○ 관련법령 :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22년 예산)
자발적 참여형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화	수산과	032-440-4862	-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 및 해양안전문화 홍보 강화를 위한 국제 행사 추진

□ 추진계획

◆ 해양안전문화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①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②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추진

-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2) 개최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IPA

- 사업비 : 6.5억원

- 개최시기 : '22. 7월중(2일간)

- 주요내용 : 전야제, 개막식, 기조연설, 5개 세션*

* 세션구성(안) : 항만도시발전, 해양디지털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 한중수교

- 2022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업기관 : '22. 3. ~ 11.

- 사업비 : 80백만원(시비 60, 구비 20)

- 사업지역 : 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

- 사업대상 : 일반시민(무료체험)

- 체험내용 : 요트(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카약, 수상안전체험)

※ '21년 추진실적 : 9,593명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해양항만과	032-440-4847	650백만원 (국비 550백만원)
	해양항만과	032-440-4813	80백만원 (국비 20백만원)

4-4-3 해양안전교통방송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인천항 및 서해5도 지역 등 항만, 수산업 관련 종사자에게 해양·항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라디오를 통한 해양·항만뉴스 제공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구축

- 사 업 명 : 인천 해양·항만 뉴스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2.1 ~ 12월 (연중)
 - 방 송 사 : (주)경인방송(iFM 90.7MHz)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뉴스 프로그램 제작·방송(해양·항만·수산 뉴스, 특집리포트 등)
 - 해양항만 각종 정책·이슈 홍보,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관광 행사 개최* 등
- * 인천 섬 탐방, 섬 특집 공개방송, 파워 인터뷰, 해양항만 토론회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교통방송 추진	해양항만과	032-440-4824	150백만원

2-3-1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직항노선에 부재한 덕적, 자도에 다목적 연료운반선을 투입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과 섬 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덕적.자도에 가스 석유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 (사 업 비) 5,950백만원 (국비 1,000, 시비 500, 군비 4,450)
- (사업기간) '21.7월 ~ '23.8월
- (선박제원) 400ton 급 선박 1척 건조
- (사업주체) 웅진군
- (사업대상) 덕적도, 자도(문갑도, 굴업도, 울도, 지도, 백아도)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공공부문 선박의 선제적 기술 도입	섬 발전지원과	032-440-4994	5,770백만원

울 산 광 역 시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468	800(43)	지방어항 4, 기타포구 20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4	1,068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1,020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2	48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예산 303백만원, 어선 20척), 사고 예방설비(무선전화, 구명·소화장비) 보급(예산 6백만원, 어선 5척),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예산 62백만원, 어선 500척, 부품교체 10만원 이하) 자연재해 시 어선 육지 인양 등을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7.5톤급 2기), 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장비동원 시 소요비용 및 어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추진(예산 412백만원)

- (전략 4)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및 행정·사법조치(상시), 어선 및 낚시어선 합동점검 실시(분기별) 및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추진(1회) 등

* 시,구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관리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안전설비, 항해장비 등 점검

II. 2022년 시행계획

1-2-1 해사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어선 전복 등 각종 사고로 국민안전 이슈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어선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증가

□ 추진계획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의식을 제고하고 선박안전관리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

○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사업,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재해예방 장비 임차비 지원 등 추진
- 안전문화 확산: 어선안전 합동점검, 어업인 안전교육,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상시 순찰·점검 강화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관리 제도개선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

□ 배경 및 필요성

-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생산활동 위축, 노후어선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코자 기관·장비 교체 등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

□ 추진계획

- ◆ 저효율·노후기관을 고효율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대상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어업인
- 사업비 : 303백만원(국 91, 시 45.5, 구·군 45.5, 자담 121)
- 사업량 : 20척 정도
- 지원기준 : 국·시·구비 보조사업(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고효율 장비 설치·교체 및 노후기관 대체 등 지원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중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 사업비 : 6.3백만원(국 1.9, 시 0.9, 구·군 0.9, 자담 2.6)
- 사업량 : 5척 정도

- 지원기준 : 국·시·구비 보조사업(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VHF-DSC(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장비, 구명조끼 등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업대상 : 관내 21개 어촌계(관내 5톤 미만 어선 661척)
- 사업비 : 62백만원(국 31, 시 31)
- 사업량 : 500척 정도
- 사업내용 : 어업용기자재(어선 엔진 등)의 간단한 수리·점검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303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052-229-2992	6.3백만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052-229-2992	62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어선의 적극적인 신고로 해양사고 신속대응
- 해사안전업무 공무원에 대한 해사안전 교육 강화
- 재해 임차료 지원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대비로 어업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 해양경찰서,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 기관의 유기체제 구축
- ◆ 해사안전 업무의 실무역량 개발을 위한 내용 숙지
- ◆ 태풍 등 기상악화 발생시, 관내 어선의 육지 인양 및 안전한 대피 지원으로 재해피해 예방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 ◆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경제적 피해 복구

- 어선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울산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상황센터 112구조대	052-230-2841 052-230-2442 052-230-2222	052-230-2942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51-410-1066~72	051-410-1065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3	052-229-2969
남구	경제정책과	052-226-5661	052-226-5260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7	052-209-3519
북구	농수산과	052-241-8094	052-241-8059
울주군	축수산과	052-204-1646	052-204-1646
수협중앙회	울산어선안전조업국	052-251-2147	052-252-2530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지원

- 위치 : 북구, 울주군
- 사업비 : 160백만원(시144, 구16)
- 사업량 : 7.5톤급 2기
- 지원목적 : 자연재해시 어선 육지 인양을 통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평시 어획물 인양 등 활용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 어업지해 예방활동 임차료 지원

- 위치 : 관내 항구(동구, 북구, 울주군)
- 사업비 : 80백만원(시비40, 구·군40)
- 사업량 : 900여척
- 대상자 : 어선어업인, 어업인 단체 또는 어촌계
- 지원내역 : 태풍 등 재해예방 장비·기자재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 위치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사업내용 : 전년도 납부한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에 대해 차년도 자부담 일부지원
- 사업비: 412백만원(시비 206, 구·군비 206)
- * 어선원(236척) : 176.6백만원(시비 88.3, 구·군비 88.3)
- * 어선(251척) : 220.8백만원(시비 110.4, 구·군비 110.4)
- * 어업인(317명) : 14.6백만원(시비 7.3, 구·군비 7.3)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업재해 예방임차료 지원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2	80백만원
소형어선인양기설치지원		052-229-2993	160백만원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원·어선·어업인)			412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불법어업 단속 및 지도로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위반행위 근절과 자원남획 방지
- 어선사고 증가 및 낚시 이용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필요
- 구명조끼 미착용의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추진계획

- ◆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관행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필요시 강력한 사법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 ◆ 어선 및 낚시어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어선 안전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 ◆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통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정착

○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 기간 : 2022년 상시
- 단속반 : 시, 구·군 및 유관기관 합동
- 방법 : 육·해상 합동단속팀 구성·운영
- ※ 어업지도선 울산해오름호(49톤) 상시 출항 가능

◎ 다목적어업지도선(울산해오름호)

- 사업비 : 2,881백만원
- 선박재원 : 강선+알루미늄, 49톤급 1척, 엔진 1,468마력 x 2대
- 승선정원 : 20명(승무원 5, 기타 15)
- 용도 : 어업질서 확립, 안전조업 지도, 적조 예찰 등
- 건조일자 : 2018. 6. 25.

- 어선 및 낚시어선 사고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기간 : 2022년 분기별 점검
 - 대상 : 관내 어선 800척(낚시어선 43척 포함)
 - 점검반 : 시, 구·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 점검사항 : 안전설비, 항해장비, 구명조끼(구명부환)
- 안전문화운동 전개
 - 7대 안전무시관행 중 구명조끼 미착용 상시 홍보 실시
 - 낚시어선 점검 및 단속을 통한 홍보 실효성 확보, 현장교육 실시
 - 시, 구·군 낚시감독공무원 안전보안관(5명) 편성 및 활동
-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조업 홍보 강화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상시작동 의무화 홍보
 - 연 1회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실시(6월 예정)
 - 20톤 이상 선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지도·홍보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항만수산과	052-229-2992	-
어선 및 낚시어선점검 안전문화운동 안전조업 홍보 강화		052-229-2993	-

□ 배경 및 필요성

- 학생, 청소년, 시민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 추진계획

◆ 학생, 청소년, 시민 대상으로 수상안전 및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및 응급 상황대처 교육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2.7~9월
- 위 치 : 2개소 (태화강 하류 및 연맹훈련장, 진하해수욕장 일원)
- 대 상 : 학생, 청소년, 시민 누구나
- 내 용 : 수상안전교육(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응급상황 및 대처법), 해상스포츠 체험(카약·카누,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물류해양진흥과	052-229-5313 052-229-2993	48백만원

경기도

I. 개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2,451	1,010척(90척)	33개소 (국가어항 2, 지방어항 5, 어촌정주어항 26)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4	2,388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4	2,588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4)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해양안전체험관 11개(육상체험 7, 수조체험 3, 응급처치 1)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략 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상레포츠 체험, 조종면허 취득교육, 항해심화교육, 덩기요트, 선박 탈출 훈련, 카약, 모터보트 체험 및 교육 운영

○ (전략 4) 해양레저 인력양성

- 정규반 : 해상엔진 정비훈련(3개월) 및 FRP선체 정비(1개월)
- 단기반 : 해상엔진 자가정비 교육 및 맞춤형 위탁교육(2~5일)

○ (전략 4)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 노후어선 기관·장비 등 교체 131개(구명조끼96, 무선통신기13, V-PASS10 양망기9, 기관3)

II. 2022년 시행계획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정업무 수행
- 전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방법을 교육하여 해양사고 대응능력 배양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체험프로그램 : 11개(육상체험 7, 수조체험 3, 응급처치 1)
 - 체험내용 : 해양생존체험, 해양안전, 선박화재진압, 비상상황 체험 등
 - 사업규모 : 해양안전체험관 연면적 9,833.49㎡(지하1층, 지상3층)
 - 추진목표
 - 연간 체험 프로그램 인원 82,780명 추진
 - 해양안전 관련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인증 3개 추진
- *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지정, 청소년 수련활동 기관 인증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해양수산과	031-8008-4506	3,325백만원 (국비 1,995백만원)

4-2-3 해양안전문화 실천제도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요트,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여가 복지 문화 창출
- 현장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및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산) 수상레포츠 체험, 조종면허 취득교육, 항해심화교육 등
 - (시흥) 덩기요트, 바나나보트 등 체험 및 선박 탈출 훈련 등
 - (김포) 수상안전교육 및 카약,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 체험
- 사업규모 : 3개 시(안산, 시흥, 김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목표 : 연간 약 20,000명 교육프로그램 참여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과	031-8008-4506	400백만원 (국비 200백만원)

4-3-2 교육요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는 해양레저산업의 국내 최대 소비지로서 유지보수 정비인력 수요 증가
 - 전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 등록지역 중 경기도가 1위(17.9%)
-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유지보수 인력양성 및 사용자 안전 관리 능력 함양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해상엔진 및 선체 유지보수, 자가정비 등 해양레저 전문 인력양성 교육
 - (정규반) 해상엔진 정비훈련(3개월) 및 FRP선체 정비(1개월)
 - (단기반) 해상엔진 자가정비 교육 및 맞춤형 위탁교육(2~5일)
- 사업규모 : 정규반 3회 / 단기반 14회 운영
- 추진목표
 - 교육 인원 : 190명 내외(정규반 3회 42명, 단기반 14회 148명)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레저 인력양성	해양수산과	031-8008-4505	780백만원

4-4-1 해양안전문화 실천운동 지원 및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후어선의 기관·장비 교체와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 무선통신기, 구명조끼 등 어선의 구명·항해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사업비 : 260백만원
- 사업지 :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 사업량 : 131개(구명조끼 96, 무선통신기 13, V-PASS 10 양망기 등 9, 기관 3)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1~3월) → 개별 및 공동구매 신청·설치(4~12월) → 보조금 지급(4~12월)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해양수산물과	031-8008-4547	260백만원 (국비 78백만원)

강 원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2,551가수 5,588명	2,573척(267)	■항만 : 무역항 4, 연안항 1, ■어항 : 지방 14, 기타 30.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5	2,367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2,367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	-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어선·낚시어선 합동점검(4회/120여척), 지방어항(14개) 방파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135백만원), 안전장비 보급 지원(626백만원), 유관기관 협업 강화, 어선원 재해보상 및 진료비 지원(1,741백만원)
- (전략 4) 어선·낚시어선 합동 안전교육*(8회, 220명) 및 사고취약선박 대상 현장방문 교육** 시행

* 구명설비 시연, 관련법규, 각종 안전설비 사용법, 인명구조·응급처치 요령 등

** 기초 항해당직 수칙, 기관정비요령 등 기본수칙 집중교육 및 기기별 관리요령 등

II. 2022년 시행계획

3-1 어선원의 안전조업 권리 강화 및 제도적 시행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20.8.28)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어업인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함으로서 어선원의 안전권리 강화 및 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연관사항 확대 시행
 -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조업 및 항해금지 고시, 저도 어장 안전보호 지침(어업지도선 운영) 등

□ 추진계획

◆ 어선사고 방지와 zero화를 위해 제도적 관리 대책 추진

-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근거 하여 어선 및 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응절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협업과 역할 등 조치계획 마련
 - * 해수부, 지자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기관별 사고발생 대비 체계 구축
- 조업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고시 지속 운영
 -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19.8.27) 및 시행(‘20.8.28) 됨에 따른 동 고시를 제정(‘21. 7.1)하여 연안어선의 효율적 관리
 - * 금지해역(연안 1해리 이내) 및 금지기간 및 시간 설정 등
- 저도어장 안전보호 지침에 따른 어업지도선 지속 운영
 - 조업기간 : 매년 4.1~12.31(9개월)
 - 출어선(연 6,300여척), 안전관리 선박 지원(1일 6척)
 - * 어업지도선(1척), 해경(2척), 해군(2척), 수협(1척)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관리제도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033-660-8358	-

3-2 어선 사고예방 저감대책 확대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사고 예방 현장 점검 및 홍보 등 능동적 대처 운영으로 사고의 저감과 안전문화 확산 필요

□ 추진계획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및 홍보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어선 안전사고 예방 추진
 - 어선사고 상황별 예방 요령 및 응급대처 교육 홍보
 - * 도, 시·군 8개반, 20명, 월1회 이상
- 어선 및 낚시어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 합동점검(4회/ 120여척), 안전교육(8회/ 220명)
- 봄철 및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 레이다 등 전자장비 관리상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 지방어항(14개 어항) 방파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
 - * 안전난간(5개소/ 130백만원), 출입문(1개소/ 5백만원) 설치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관리제도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033-660-8358	135백만원

3-3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 공조 및 유지 필요

□ 추진계획

◆ 어선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유관기관 협업 주요 강화방안
 - 어선사고 대비 시군, 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어선사고 발생시 협업체계 강화
 - * 도, 시군, 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정보공유
 - ** 신속한 구조활동 참여, 협조 등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관리제도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033-660-8358	-

3-4 어선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에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 도모 등 어업인의 소득2배 실현

□ 추진계획

◆ 안전조업 여건 조성 및 어업인 경제적 뒷받침 사업 추진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어선사고 발생률 저감을 위한 항해 안전장비 지원
 - *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어선용 구명동의 등
 - ** 레이다, 구명사다리, 소화기, V-PASS 등
- 조난어선 예인 구조비 지원
 - 기관고장 등 자력항해 불가어선 발생시 조난 예인어선 구조 활동비 지급
 - * 참여어선 인건비 및 유류비 지원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태·폭풍, 해일 등 해양기상 악화시 소형 어선의 신속한 인양 및 대피를 위해 인양기 시설 설치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관리제도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033-660-8359	626백만원

3-5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경영 및 어선원 보호 도모

□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기여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도내 연근해 어선소유자에 대한 어선규모별 자부담분 차등 일부 지원
-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 나잠어업인의 작업중 재해발생 대비 보험료 자부담분 일부 지원
 - * 자부담분 100% 지원
-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 잠수질병 요양급여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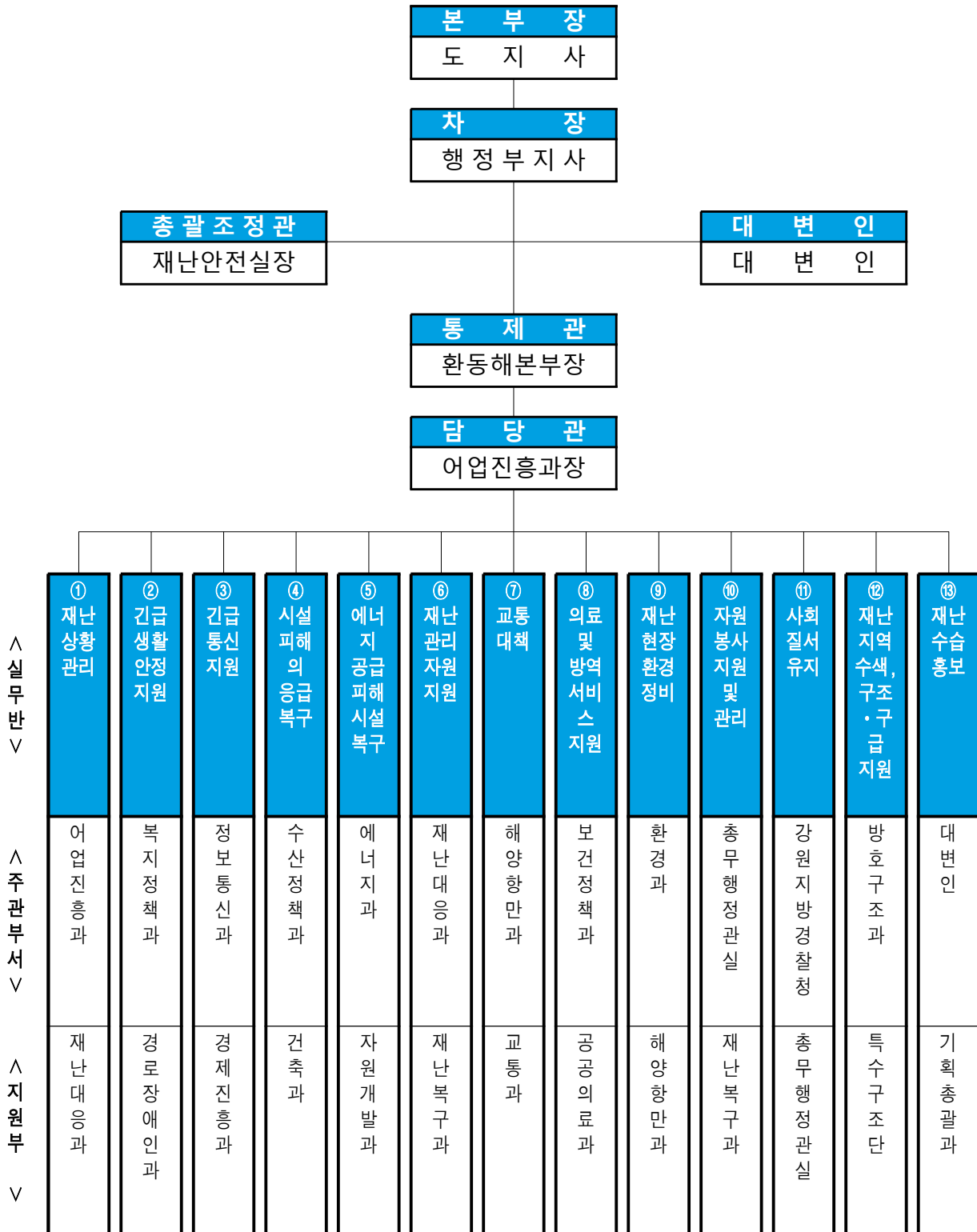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안전장비 지원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033-660-8362	1,741백만원

참고

강원도 해난사고 대책본부 구성 및 시행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접경해역(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조난 등으로 선박, 사람이 북측으로 아동,표류 가능 있을 경우 가용한 통신망 활용 등 어업지도선 투입
	차장 (행정부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장 보좌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대변인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수습홍보 총괄
	통제관 (환동해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 (어업진흥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실무반	1.재난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 통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접경해역(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서는 가용한 통신망 활용 등 해수부, 해경 등 관계기관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4.시설피해 의응급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공급 피해시 설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재난관리 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7.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재난현장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11. 사회질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재난지역 수색,구조· 구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 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도 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충 청 남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0.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7,999	5,735(1,089)	무역항 5, 연안항 2, 국가어항 9, 지방어항 30, 기타포구 31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6	5,360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4,227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1	1,033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	100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연근해어선(115척) 노후장비 교체지원(1월~), 소형어선(10톤 미만) 안전설비(구명·소화장치 등 450개) 지원(1월~) 및 어업 집중기(2,4분기) 화재 취약분야 안전점검 및 양망기 등에 의한 사고예방 매뉴얼 홍보 추진(연중)
- (전략 3) 도민대상 해양레저스포츠 및 재난대응 체험프로그램 제공(30회, 5~9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3월) 및 낚시전용선 도입을 위한 전문가 연구 추진(연중)
- (전략 4) 어선·어선원 등 대상 어업보험료 지원사업 추진(7,146건, 연중)

II. 2022년 시행계획

1-1-1 어선 안전설비 장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법에 따른 어선설비(전기,소방,구명,항해,무선설비) 구입 설치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소형어선에 소방, 구명, 항해 안정장비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

- 사업비 : 766백만원(국비 121, 도비 229, 시·군비 109, 자담 307)
- 사업대상 :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량 : 720건
- 사업내용 : 연근해 어선 및 낚시 어선(어선, 양식장 어장관리선,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종사 어선 포함)의 전기·소방·구명·항해·무선설비 설치지원
- 지원내역 : 초단파대 무선전화기(VHF-DSC), 자동소화시스템(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CCTV),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그 외 「어선법」 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어선설비 구입·설치 지원
-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1~3월) → 개별 및 공동구매 신청·설치(4~12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4~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766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원거리 조업에 따른 과속, 정비불량 등 운항부주의에 의한 어선 사고 매년 증가로 사고예방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어업 집중기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조업 교육 및 사고예방 매뉴얼 홍보 추진

- (계획수립)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목표설정, 인명피해 예방, 안전조업 문화확산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안전점검)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3~5월·10~12월에 기관·전기 설비 및 어구설비(양망기·밧줄등) 등 취약분야 중점 안전점검 추진
- 도(시·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 (안전교육) 안전조업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및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과 연계하여 어업인의 인식개선 지속적인 추진
- (안전문화확산) 20톤미만 어선의 비조업 시 항해당직 준수제도, 20톤이상은 관련법의 항해당직 규정 이행토록 지도
- 항해당직 관련 안전조업교육 실시, '조업정보알리미앱' 링크 등 홍보
- (예방매뉴얼) 조업시 양망기, 투망, 로프 등 어구사용 부주의(끼임, 추락, 타격 등) 따른 사고예방 매뉴얼 등 어업인 홍보자료 배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 안전점검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6	-

1-1-3 어업인 복지 정책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 및 어선이 어업활동으로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원 보호 및 안정적 조업활동 보장

□ 추진계획

◆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및 어선원, 수산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사 업 비 : 3,461백만원 (도비 450, 시·군비 1,038, 자담 1,973)
- 사 업 지 : 연안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 업 량 : 9,311건
- 사업내용 :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방비 지원
 - 톤급별 지방비(도비+시비) 보조율 차등 지원
 - * 어선원보험 : 5톤미만 ~ 100톤미만(43%)
 - * 어선보험 : 5톤미만(43%), 10톤미만(35%), 30톤미만(27%), 50톤미만(19%), 100톤미만(10%)
- 추진상황 : 보험 가입자 보조금 지급(6~12월/반기별) → 보험금 지급실적 및 사고내용 제출(6~12월/반기별)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3,461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및 낚시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 추진계획

- 어선사고 다발시기 각종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및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2년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계획》

- 기간
 - 어선 : '22. 4월(봄철), 11~12월(겨울철)
 - 낚시어선 : '21.1~2월(겨울철), 4~5월(봄철), 8~10월(국가안전대진단, 가을철)
- 장소 :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홍성, 서천, 태안) 등
- 점검대상 : 10톤 이상 어선 약 400여척, 낚시어선 997척 중 50%이내
- 점검방법 : 유관기관(도, 시·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합동 점검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낚시어선 안전점검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041-635-4834 041-635-4848	-

2-2-1 노후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 지원

- 사업비 : 1,033백만원(국비 310, 도비 93, 시군비 217, 자담 413)
- 사업대상 :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량 : 101척
- 사업내용 : 연근해 어선의 노후기관·장비 교체 지원 및 해양사고 예방
- 지원내역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설비 설치
-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1~3월) → 수협 공동구매 신청 및 설치(4~12월)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5~12월)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2772	1,033백만원

3-3-1 해양안전 교육 확대(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 재난 사고로 인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
-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대응능력 배양

□ 추진계획

- 위 치 :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운영기간 : 7 ~ 9월)
- 사 업 량 : 10회 / 800명 (1박2일, 1회 80명)
- 사업내용 :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레저체험 및 안전교육 등)
- 추진실적
 - 2019년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1,684명) : '19. 7. ~ 8월(20회)
 - 2020년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 2021년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1,640명) : '21. 7월(28회)
- 조성방안 : 해양재난 직접 체험 및 대응 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 수상안전, 선박안전, 종합해양안전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진행
 - 바나나보트, 크루즈보트, 모터보트, 수영, 카약 종목 등으로 편성

□ 사업효과

-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확산

【 사업 또는 과제별 담당부서 현황 】

사업 또는 과제명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팀)	041-635-4774	100백만원

전라북도

II. 2022년 시행계획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자연·사회재난 등 해양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비 대책 추진 필요
-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상황대응체계 확립 등 필요

□ 추진계획

◆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 및 지진 등 해양수산 분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신속·체계적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유형별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수칙 개선
- 재난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3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걸친 전문교육 강화 및 대응훈련 내실화 추진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해양항만과	063-280-3377	-
		063-280-3379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연근해어선 위치정보 상시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 도모

○ 어선 위치발신체계 정비

- 고의적으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VHF-DSC 등 사용방법 교육, 상시작동 제도·홍보 강화

* 총톤수 2톤이상~3톤미만의 어선은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를 미 설치 시 출항 제한 등 조치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및 어선 안전조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2 ~ '26년) 수립

○ 해양사고 예방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정례화

-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해수청), 해양경찰청(해경서) 등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실시

○ '낙시해(海)' 앱 시범운영

- 낙시어선 안전관련 정보 확인, QR코드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긴급구조 요청 등

* 군산 비응 107척 대상 시범운영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인명·반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수산정책과	063-280-4652	-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연간 3천만명 이상이며, 수요 증가 추세
 - 다중이용선박의 사업별로 안전관리 절차와 기준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성 제기
 - 장기간의 관행적 운항으로 선주 및 선박운항자의 의식 개선여지 다분

* 13인 이상 승선하는 여객선, 유·도선, 통선,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요트 등)

□ 추진계획

◆ 어선(낚시어선 포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고 개연성 사전차단

-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및 계절별 어선사고 예방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시·군별 2톤 이상 등록어선
 - 점검내용 : 통신장비, 기관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설비, 안전설비 등
- * 합동점검반 : 지자체(도, 시·군), 군산·부안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군산어선안전조업국
-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
 - 구명조끼 착용,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연료유, 배터리 점검 등) 확대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소집교육
-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강화	수산정책과	063-280-4652	-
	해양항만과	063-280-4714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 및 에너지절감형 LED등 대체로 어업 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영세 소형어선의 안전장비 보급으로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태·폭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재산피해 예방 및 평상시 수산물, 어구 등의 인양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 추진계획

- ◆ 소형어선 노후기관 장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조업 및 에너지 절감
- ◆ 5톤이하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 사업량 : 100대(군산42, 고창5, 부안53)
 - 사업비 : 400백만원
 - 내용 : GPS프로타,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등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사업량 : 26척(군산11, 고창5, 부안10)
 - 사업비 : 287백만원
 - 내용 : 노후기관·장비·설비 및 에너지절감형 LED등 대체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 사업량 : 2대(군산1개소, 부안1개소)
 - 사업비 : 300백만원
 - 내용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정비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강화	수산정책과	063-280-4652	987백만원
		063-280-4651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저변확대, 레저스포츠 이용증가 등으로 일반인의 해양 활동 증가에 따라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기반 마련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생활화 도모

-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이용을 위한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 요령 교육 실시 및 체험
 - 군산(해양소년단전북연맹), 김제(지평선마린리조트), 순창(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전북요트협회) 등에서 체험활동 운영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 * 구명조끼 착용법, 응급처치 및 대응요령 등
- 수협중앙회 주관 어선안전조업 교육 시 위급상황 조치 교육 강화 요청
 - * 심폐소생술, 조난신고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해양항만과	063-280-4714	100백만원

4-2-3 해양안전문화 실천제도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수상레저활동 및 낚시어선체험 등 해양활동 인구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의 올바른 이해와 문화 정착 필요

□ 추진계획

◆ 도민대상 해양안전캠페인 확대, 다양한 매체 활용 해양안전 종합홍보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활동 추진

- 구명조끼 등 해양안전장비, 심폐소생술 등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초해양안전체험관 운영(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 다중이용선박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문화 확산 참여(군산해양수산청 주관)
 - 여객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비상시 대피요령 등 이용객의 비상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수칙 사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시설 내 구명조끼 착용 사진 상설비치, 구명설비 사용방법 및 비상시 대피요령 설명문 게시 등
- 어선안전의 날 현장캠페인 및 어업인 교육 참여(군산어선안전조업국 주관)
- 해양사고 예방정보 및 포스터 송부(매월 1회)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안전문화 확산	해양항만과	063-280-3377	-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 저변확대, 여객선 이용증가 등 일반인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기반 마련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생활화 도모

-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이용을 위한 기초 수상안전 수칙과 비상 대응요령 교육 실시 및 체험
 - 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 전북요트협회, 도 119안전체험관 시설 활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추진
- 수협중앙회 주관 어선안전조업 교육 시 위급상황 조치 교육 강화 요청
- 해양·수산 유관기관 관련 시설을 활용한 체험기회 확대
 -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활용한 도민의 해양안전체험 확산 추진
- 초·중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과 협조하여 추진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지역별 체험공간 마련	해양항만과	063-280-4714	-

전 라 남 도

II. 2022년 시행계획

1-1-1 국민의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등록 척수가 27,966척으로 전국 65,744척의 42.5% 보유
- 그간의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전국 어선사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연도별: '17년)1,756건→'18년)1,928건→'19년)2,004건→'20년)2,030건→'21년)2,209건

□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사고 감소를 위해 어선 안전관리 체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어업인 홍보 예방활동 강화

- 어업인 피부에 와 닿는 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14개 시·군별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마련 추진
 - (근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내용) 낚시인 준수사항, 기상악화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 지역 출입금지, 사고 발생의 보고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수산자원과	061-286-6952	-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상 조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색구조·구난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할이 증대
- 구조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해양구조단체에 구조물품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민간해양구조단체 구조장비 지원을 통한 민간의 해양사고 대응 수준 향상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지원으로 지원의 투명성 확보
- 대상단체 : 해양구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최근 1년 내 해양구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가 소속된 단체 등의 자격요건 필요
- 소모품성 해양 구조·구난 물품 지원
 -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 구조용 로프백, 구조환, 응급 구급상자, 스쿠버 장비, 산업 잠수장비*, 해상화재 구조물품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061-286-6831 061-286-6952	45백만원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빈발하는 단순사고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 봉투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엔진 부하 유발하여 사고 발생
 - * 전체 선박사고 1/10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함

□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해양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추진

-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재투기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등 수매(2,915톤)
 -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45개소)
- 해양환경 관리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 종사자 의식개선 추진
 - ‘연안 정화의 날’ 운영(매월 셋째주 금요일, 민간 자율 참여)
 -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 활동 지원(10개 단체)
 - * 수중 정화활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어민단체 환경교육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폐어망·로프 감김사고 예방 대책 추진	해운항만과	061-286-6951	5,270백만원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어선에 대한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추진계획

◆ 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실종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및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 도모

○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어선설비 150여종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어선법」 및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수산자원과	061-286-6953	872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관리 주체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이 중복적으로 이행되고 있어 통합적 운영 추진을 통한 어선안전 지도·감독 체계 정비 필요
- 지자체관리 선박에 대해 자체점검 시 부족한 전문성을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으로 해소 가능

□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안전정책 공유로 통합적 선박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 ‘해양안전실천본부’ 서부 지역본부 및 ‘해사안전종합관리 TF팀’을 통한 지속적 선박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 협의
- 계절별 어선사고예방 유관기관(해수부, 도, 시·군, 관계기관 등) 합동 ‘어선 안전점검’ 실시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선박안전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해운항만과	061-286-6831	-
	수산자원과	061-286-6952	-

1-5-3 통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해양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체계구축

□ 추진계획

◆ 해양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신속한 정비·관리 및 재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해양 재난분야의 작성·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의 내용 현행화
 - (행동매뉴얼) 해양선박, 어선, 해양오염, 조수, 적조
 - (실무매뉴얼) 해양유·도선
-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 재난담당자 전문교육 수료, 해경 등 유관기관과 재난 모의훈련 실시
- 어업감독공무원의 불법어업 단속분야 뿐만 아니라 어선안전조업 지도, 해난사고시 구조활동 지원 관련 직무역량 강화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해운항만과	061-286-6831	-

4-1-1 체험중심 교육시스템 개발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 및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청소년해양교육원 및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 청소년이 해양안전문화, 해양환경·과학, 해양안전, 해양역사 등을 배울 수 있는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

* 2017~2020년 / 여수 / 180억 원 ('21. 9. 3. 개원)

- 해양재난·사고 대비 안전의식과 지식확립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을 활용한 체험중심 해양안전 교육 및 실습 실시

* 2016~2022년 / 진도 / 270억원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청소년해양교육원	섬해양정책과	061-286-6741	1,620백만원
국민해양안전관	해운항만과	061-286-6832	2,000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스포츠 다양화 및 양적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 해양 안전의식 확산 필요

□ 추진계획

◆ 해수욕장 이용객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대회 및 체험교실) 참여자 대상 해양안전 홍보

-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안전홍보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를 통한 참여자 안전 교육
 - 각종 대회, 축제, 체험교실(15개) 참여자 대상 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요령,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체계 등 홍보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안전요원채용· 안전장비임대	섬해양정책과	061-286-6742	1,810 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공간의 보전·이용·개발 영역의 확장으로 다양한 해양이용 수요 간에 상충과 갈등이 발생하며, 해사분야 안전의 담보가 필요함
- 어업 활동, 해양관광, 원활한 선박항행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해양 이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추진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21.12 ~'22.1)
-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22.2)

*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해양수산발전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전라남도 관련 조례 등에 따름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해운항만과	061-286-6831	1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1970년대 제정되고 현재까지 개정 및 시행되어온 해사안전법은 최근의 해상 교통환경 변화 및 선박기술 발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섬 주민 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 섬 관광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 운항 규제는 매우 중요

□ 추진계획

◆ 여객선 출항 통제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안 검토

- 현행 출항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개선안 도출 및 건의
 - '21.12.3. 여객선 운항 시계제한 완화 건의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전남도청, 운송업관계자, 지방해수청, 목포해경 등 관계자 참여
- 여객선에 도입된 기술 수준에 따른 차등적 출항통제 기준 고안 및 건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여객선 출항 통제기준 검토 및 개선	해운항만과	061-286-6831	-

경 상 북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5,245	3,285 (125)	무역항 1, 연안항 4, 지방어항 22, 기타포구 94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5	5,492
1.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3	5,492
2.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
3.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인 전환 유도	1	-
4. 해상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	-
5.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1	-
6.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방치어선, 폐선 등 일제조사 및 어선 안전점검 시행(반기별), 노후안전시설 대체·어업인 안전 보험료(50%)지원(연중), 불법 어업 행위 단속(연중) 및 해상폐기물 제거 등 연근해어장·연안해역 환경개선 사업* 등 추진(3월~)

* 연안 방치 페스티로폼 수거,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등

- (전략 3) 해양사고사례, 안전운항 지침 등 어업인 안전조업교육(5회, 319명), 연안여객선(6척, 정기·수시 23회, 특별 4회) 및 낚시어선(48척, 3회) 지도·감독 추진(연중)

II. 2022년 시행계획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추진현황

- 개항단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 상.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 등 위법행위 사전방지
- 주기적인 해상 및 순찰 및 단속 활동
 - * '21년도 실적 : 관계기관(포항해경 강구파출소, 수협등) 합동단속(3회)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항만 조성
- 지속적인 개항 질서 유지와 관리를 통해 항만경쟁력 제고
- 항만기본계획용역 시 각종 수심 및 기반조사 시 안전대책 수립

○ 세부추진계획

- 주기적인 육상 및 해상 순찰활동 강화
- 사고다발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강화
 - *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수시)
-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수심 및 기반조사 시 안전대책수립 및 확인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해양수산과	054-730-6586	-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추진현황

- 저효율·노후기관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 노후장비, 설비의 현대화 및 어선의 기계화 지원촉구
-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선체구조 등 설비개선추진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노후어선 기관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양사고 예방
- 어선장비 설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로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능률향상
- 무허가어선 및 장기방치어선 등을 일제점검 실시

○ 세부추진계획

- 기존의 노후된 어선용 기관 및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 방치어선 조사 및 무허가어선 등 일제점검 실시
- 점검시기 : 계절별 및 해양사고 취약시기 합동점검 시행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노후어선 장비 지원사업	해양수산과	054-730-6567	213백만원

□ 배경 및 필요성

- 불법어로행위 합동단속 실시 : 연중
 - 어촌계 등 홍보 및 예방순찰 적극 실시하고 고질적인 불법어구 설치에 대한 단호한 단속 및 폐어망 등 제거
- 관내 항계 내 수역 순찰 : 13회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적극적인 행정단속·지도를 통하여 관행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필요 시 강력한 행정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 세부추진계획
 - 어업지도선 활용 해상 불법어업 단속활동 강화(연중)
 - 육상 순찰 및 어업인 홍보 활동 강화(월 1회)
 - * 어촌계 홍보, 고질적인 불법어구 단호한 단속 및 제거
 - 대계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용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업지도선(영덕누리호) 운영	해양수산과	054-730-7281	433백만원
불법어로 합동단속.계도 강화	해양수산과	054-730-6756	83백만원

가. 친환경 그물 보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21년도 생분해성 어망 지원사업 56척 / 18,250폭 지원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동 어구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고, 본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 생분해성 어구 공급단가 인하 및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 세부추진계획

- 생분해성 어구 지원사업으로 어망지원 및 폐기물 수거 : 연중
- 어망지원 및 폐어망 수거처리 : 수시
-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및 폐어망 수거에 따른 어민교육 : 년 2회

나. 로프·폐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배경 및 필요성

- 바다에서 표류하는 폐어망·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선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하여 어업인 생계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음

- '21년도 영덕군 유입·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량은 821.89톤으로 '20년도(538톤) 대비 52% 증가

※ '21년 수거실적 : 조업중인인양쓰레기(516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266.99톤)
대게어장정비사업(38.9톤)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어업인이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매·처리 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 유도
-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선박 안전운항 도모

○ 세부추진계획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안가 폐기물 수거처리 : 수시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추진 : '22.3 ~ 12월
- 민·관·군 합동 해양정화 활동 추진 : 년 1회
- 항 내 침적폐기물 인양작업 : 반기 1회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	해양수산과	054-730-6757	900백만원
조업중인인양쓰레기수거			200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과	054-730-6562	200백만원
대게어장정비사업			117백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425백만원

경 상 남 도

I. 개 요

□ 어업인·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포구
17,553	13,564	무역항 7, 연안항 1, 지방어항 67, 기타포구 480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6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3	7,907
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7,767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	-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1	140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4회 이상), 안전지도, 교육 등을 위한 경상남도 해양안전지킴이*제도 운영, 어선 안전설비(70척)·친환경 장비(435척) 보급 및 연근해 어장환경개선·연안해역 보전관리사업 추진(연중)

* 시군별, 어선세력별 어선안전전문가 2~5명 배치(2월 모집, 채용 후 연중활동)

※ 연안 방치 폐스티로폼 수거, 어업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등

- (전략 2) 지속적인 무역항질서 유지와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항만 조성 및 사고 집중 발생시기별 지도·단속 추진(주 2~3회 지도·점검)
- (전략 3/4) 청소년 대상 수상안전교육, 해양레저교육 실시(5~12월)

II. 2022 시행계획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도 낚시어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2척, 낚싯배 이용객 수는 1,385천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 경남 낚싯배이용객 ('19)1,325천명 대비 4.5%증가, 사고척수('19) 84척 대비 58%감소

□ 추진계획

◆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 도모

- 사고취약 어선(낚시어선) 대상 계절별·특별 합동 안전점검: 4회 이상

* 점검기관 : 도, 시군,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 해양안전 지킴이를 통한 상시 안전지도·점검, 교육·홍보 추진

* 연안시군별, 어선세력별 어선안전전문 2~5명 배치 (2월 모집 채용 후 연중 활동)

- 경남 어선안전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연 2회(6월, 12월) 개최, 유관기관 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신속한 사고대응

- “어선안전海” 지속운영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및 사고경각심 고취

나. 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비·설비 보급 및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기관 대체 등으로 사전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엔진, 전기·소화·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 제공 : 319개 어촌계

□ 추진계획

◆ 어선에 안전설비 및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으로 안전조업 도모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2000개/800백만원
 - 구명조끼, 자동소화장치, VHF-DSC, V-PASS 등
 -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40%
- 연안 시·군 어선 안전설비 지원 : 70척/70백만원
 - 어선별 맞춤형 어선안전장비 및 교체수리
 -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13개반/370백만원
 - 선박의 소모품 및 엔진점검 등 지원
 - * 국비 50%, 도비 50%

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06년부터 우리도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선원 중 수산업협동조합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 '06년~계속 : 사업비 12,685백만원 연간 9,980명 지원

□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 활동 도모

- 사업량 : 6,900명(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22년 사업비 : 99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 차등지원

* 5톤미만 40%, 10톤미만 30%, 30톤미만 20%, 30~50톤미만 15%, 50톤이상 10% 지원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산자원과	055-211-4045	407백만원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	수산자원과	055-211-4045	870백만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4	370백만원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지원	수산자원과	055-211-4054	991백만원
낚시어선 관련 제도개선 건의	수산자원과	055-211-4045	-

3-1-2 통항로 선박안전운항 여건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 내 정박선박과 입·출항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 필요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질서 유지 및 정박선박과 입·출항 선박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추진

□ 추진계획

◆ 지속적인 무역항질서 유지와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항만 조성 및 사고 집중 발생시기별 지도·단속 추진 : 주 2~3회 지도·점검

- 사업량 : 7개 무역항 * 항만순찰선(주2~3회), 임차선박 월3회 이상
- 사업내용 : 정박지 점검 및 안전속도 준수 지도·단속

<연도별 무역항 질서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처분별 위반사항별	계		고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기 타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총 계	456	225	2	0	6	3	92	27	356	195
- 입·출항신고 미필	78	33							78	33
- 불법어로행위	141	86							141	86
- 항법위반	42	4			1				41	4
- 불법수리	20	8			5	3			15	5
- 정박 및 계류지 위반	103	38					92	27	11	11
- 위험물취급 위반		3								3
- 항만시설 무단사용	60	50	2						58	50
- 기타	12	3							12	3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무역항질서 중점관리	해양항만과	055-211-3954	-

1-2-2 어선 안전설비·장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안전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청소년 대상 수상안전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및 응급 상황 대처

- 청소년 대상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발굴
 - 수상안전교육(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 해양레저스포츠교육(카약·카누, 윈드서핑, 래프팅, 요트 등)
- * 통영시 3개소, 사천시 2개소, 창원·진주·거제시 각1개소, 고성·남해군 각1개소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섬어촌발전과	055-211-6174	140백만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I. 개 요

□ 어업인 · 어선 현황('21.12.31. 기준)

(단위 : 명, 척, 개)

어업인	어선등록척수(낚시어선)	지자체관리 항 · 포구
7,465	1,944(254)	무역항 2, 연안항 5, 국가어항 2 지방어항 19, 기타포구 75

□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세부과제	소요예산
합 계	8	4,384
1. 안전한 해상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	3,629
2.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 신산업 선도	1	685
3.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
4.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2	70
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	-

※ 소요예산은 해당과제 관련 지방비만 포함

□ 주요 추진사항

- (전략 1) 항내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개사업/6억원), 수난구조 참여 어선 지원, 어선 장비 등 안전인프라 구축(4개사업/27억원), 선종별 선박 안전점검 추진* 등

* 연중 어선, 낚시어선,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전략 2)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등

- (전략 4) 어선 안전조업교육,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라디오 방송) 추진

1-3-2 인명·빈발사고 예방 및 집중관리체계 구축

가. 항만 내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 및 어항 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화재, 침수사고 등 예방·대응 및 재산보호

□ 추진계획

◆ 항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개 사업, 688백만원) 추진

- 항내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항만 및 어항 내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 항·포구 CCTV 설치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나. 수난구호 참여 어선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연근해 어선 구조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수난구호 참여한 어선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수난구호 참여 어선 지원
 - 추진계획 : 행정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항만 내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수산정책과	064-710-3217	688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80백만원

1-3-3 고위험선박 관리 및 지원 강화

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도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LED등 포함)

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어선에 대한 기관·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

☐ 추진계획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도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 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V-Pass 등

다.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연근해 어선어업 생력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어선 항행 및 어로작업 자동화를 통한 어업경영비 절감

□ 추진계획

◆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를 행정시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 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자동양망(승)기, 전자장비 등

라. 노후기관 대체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를 통한 어업경영비 절감 및 해양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추진계획

◆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를 도·행정시 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수산정책과	064-710-3217	222백만원 (국비222)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0백만원 (국비 50)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			928백만원
노후기관 대체 지원			1,520백만원

1-5-1 사고취약분야 안전관리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설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인명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조업 도모

□ 추진계획

◆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비를 도 사업으로 추진

-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 － 사업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지원내용
 - 1) 기관실 내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 2) 화재경보기 및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	수산정책과	064-710-3217	140백만원

1-5-2 선종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도·행정시, 해경, 수협 등 전분분야별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 위해요소 제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계획

◆ 매월 1회 관계기관·단체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점검 내실화 및 사고 위해요소 사전 차단

- 민·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계획 수립·시행
 - － ‘21년 어선등록 척수 : 1,944척(제주시 1,075, 서귀포시 869)
 - － 매월 1회 도내 주요 항·포구 순회 어선 안전점검 추진
 - * 구명장비, 통신장비, 기관 점검 등

나.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 관내 등록 낚시어선 분기별 안전점검으로 선박안전관리 강화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 2022년도 낚시어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 지속 실시(어선안전점검반 활용)
 - － ‘21년 낚시어선 신고척수 : 254척(제주시 158, 서귀포시 96)
 - － ‘22년 명절·휴가철 등 신고척수의 20% 무작위 점검
 - * 안전장비 비치현황(구명조끼, 소화기 등), 보험가입여부, 면허소지여부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낚시어선 분야)
 - － 관계기관·단체 합동점검 실시
 - * 해양수산부, 제주도, 행정시, 해경, KOMSA,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 낚시어선 영업구역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의 추진

다.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이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 관심 고조
- 설, 추석 연휴, 휴가철 등에 여객선 이용객 증가
- 여객선사의 영세화로 인해 선사 안전관리능력 배양 필요

□ 추진계획

◆ 여객선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 점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 점검주기 : 설·추석 명절 연휴, 봄·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 점검사항 : 항해 및 조타설비 상태, 주기관, 보조기관 정비 상태 및
누유 여부, 구명기구 상태, 비상시의 임무 숙지 상태,
여객선 승하선 및 접안시설, 터미널 및 선착장 청결상태 등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 안전점검	수산정책과	064-710-3217	1.3백만원
낚시어선 안전점검	수산정책과	064-710-3245	-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안전점검	해운항만과	064-710-6353	-

1-5-3 통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기관 간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일반선박, 여객선, 연근해어선, 유도선 등

□ 추진계획

◆ 선종별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사고 대응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에 따른 제주지역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위기대응 수준에 따른 대응단계별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등 대응체계 확립
- 개정 요인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개정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일반선박, 여객선 등	해운항만과	064-710-6353	-
연근해어선	수산정책과	064-710-3217	-
유도선	해양산업과	064-710-3227	-

가.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 배경 및 필요성

-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등 전 주기의 「환경친화적 선박 도시 구축 기본계획」 (2022. 1. 3.) 수립·시행에 따라 중장기 세부투자·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정립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형 친환경선박

- 1) (전기에너지 공급원) 재사용 배터리 또는 신폼 배터리
- 2) (추진 동력원) 전동기(순수 전기에너지) 또는 하이브리드 동력장치(전기에너지+연료)
- 3) (대상선박)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유·도선

□ 추진계획

◆ 전문기관 용역 시행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용역기간 : 2022. 3월 ~ 12월

○ 주요내용

- － (시간적 범위) 2023년 ~ 2027년(5개년 단위)
-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선박 분야 전역
- － (내용적 범위)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실증연구·충전인프라 확충·민간보급을 위한 전 주기의 중장기 종합계획 정립

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국가중점추진과제에 발맞춘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필요
-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의 新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정책 연계방안 수립, 도민 의식 전환 등을 위한 전문·전담기관 육성

□ 추진계획

◆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지원 등 전담조직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대행기간 3년)
- 사업장소 : (재)제주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지원 등 전담조직 운영
 - － 제주형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전 분야 연구 및 기업 지원
 - －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위한 국가정책 연계방안 수립
 - － 종합계획, 실증연구단지 구축, 투자유치 방안 등 수립 지원
 - － 해양수산 환경친화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도민 의식 제고 등

다.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주 원인인 어선 등 소형선박 혁신에 직면
- (기술선도) EV 재사용 배터리 친환경선박 적용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순환자원 창출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표모델 육성

□ 추진계획

◆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대행기간 3년)
- 사업장소 : (재)제주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 － 친환경선박용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및 성능 등 진단 방안 마련
 - － 친환경선박용 재사용 배터리 재결합 기술개발
 - － 재사용 배터리 기반 전동기, 전력변환장치 등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수산정책과	064-710-3297	100백만원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0백만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385백만원

4-3-1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연안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중 기관고장, 어선 전복 등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참여형·체험형 교육 확대

□ 추진계획

◆ 도·행정시,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단체 합동 어선 안전조업교육 실시

- 관계법령 :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 교육대상 : 어선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
- 교육시간 : 연 1회 / 4시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교육내용 : 유사시 현장 대처요령, 통신·구명장비 운용 등*

* 전문강사 초청 이론 및 어업인 체험교육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 안전조업교육	수산정책과	064-710-3217	20백만원

4-4-3 해양안전교통방송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근절, 안전의식 고취 등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어업인 의식향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추진계획

◆ 한국교통방송을 통한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추진

- 활용매체 : 한국교통방송(라디오 방송)
- 주요내용 :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근절,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생활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 테마별 라디오 방송 편성, 매일 주요 시간대(7회) 집중 홍보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22년 예산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수산정책과	064-710-3243	50백만원

Ⅵ. 전략별 소요예산

□ '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소요예산: 4,098억원*

* 국비 3,210억원(78%), 지방비 496억원(12%), 공공기관 391억원(10%)

【 과제별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 5대 전략		계	국비	지방비	공공 기관
전략1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기반 마련	201,057	160,832	28,927	11,298
전략2	해사 신산업 선도	91,526	83,298	7,488	740
전략3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93,759	66,998	935	25,826
전략4	실생활 중심 교육·문화 정착	17,879	4,486	12,276	1,117
전략5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5,549	5,389	-	160
합계		409,770	321,003	49,626	39,141